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

결과보고서

2011.9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자원배분

결과보고서

2011.9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정기국회에 즈음한 9월 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토론회에서는 2012년 예산총량과 자원배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주영진 처장 개회사



정갑윤 예결위원장 축사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축사





발 간 사

우리나라의 한해 살림살이인 예산은 300조원이 넘고, 이는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방대한 규모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대부분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규모와 쓰임새를 결정하는 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동안 국회의 예산 심의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제출한 후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져 국회의 재정의도를 반영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고, 각 부처별·사업별 검토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인 심사가 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재정 총량과 재원배분 등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물가상승 등 국내 경제여건도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지출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수행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국가재정에 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정기국회가 시작된 9월 5일에는 정부의 예산안 제출에 앞서 두 번째로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나라살림 대토론회」에서는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점, 복지 분야의 지출을 증가시키되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지출효율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 또 이를 위해 국회의 예·결산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 등에 토론자들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보고서에는 토론회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토론회 참고 자료와 회의록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나라살림 대토론회」의 ‘예산총량과 재원배분’에 대한 토론 결과가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11년 9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주 영 진

차 례

개 요

I. 일 정 / 1

- 1. 토론회 개최의 의의 1
- 2. 토론회 프로그램 2

II. 주요 내용 / 3

- 1. 2012년 예산을 위한 시사점 3
- 2. 토론 요지 4

대토론회 자료

I. 대토론회 개회사·격려사·축사 / 11

II. 대토론회 자료 / 18

[발제 1 : 2012년 경제전망과 재정운용 방향]

I. 머리말 / 18

II. 경제 및 재정전망 / 20

- 1. 경제 전망 20
- 2. 총수입 21
- 3. 총지출 21
- 4. 재정수지·국가채무 22
- 5.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에 대한 평가 24

III. 경제여건 변화와 재정의 역할 / 25

- 1. 지난 4월 이후 해외경제 여건 변화 25
- 2. 향후 재정의 역할 :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 27

IV. 향후 재정운용 방향 / 31

- 1. 복지지출 확대와 장기적 관점의 재정운용 31
- 2. 세원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 33

[발제 2 : 2012년 예산의 효율적인 재정운용 방향]

I. 2012년 재원배분 총괄 / 40

- 1. 개관 40
- 2.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43
- 3. 의무지출 예산 46
- 4.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 요구 51
- 5. 재정전문가 설문조사 54

II. 2012년 주요 분야의 재원배분 방향 / 58

- 1. R&D 분야 58
-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63
- 3. SOC 분야 66
- 4. 농림수산물 분야 70
- 5. 보건·복지·노동 분야 74
- 6. 교육 분야 77
- 7. 환경 분야 82
- 8. 국방 분야 83
- 9. 기타 분야 87

회의록

회 의 록 / 95

언론보도 모음

언론보도 모음 / 135

개 요

I. 일 정

1. 토론회 개최의 의의

- 본 토론회는 지난 3월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간 열렸던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며, 나라살림이 국가 민생안정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전문적이며 실질적인 제안을 수렴하는데 의의를 둠

가. 재정에 관한 국회의 적극적 역할 수행

- 내년도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 단계에서 국가가 예산총량과 재원배분에 대하여 논의함으로써 재정에 대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
 - 지금까지는 정부의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의 재정 논의가 집중되어 왔는데,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추후 위원회 심사 등에 활용함으로써 국회의 재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함

나.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향 모색

- 대외·대내적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총량과 재원배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향과 재정의 바람직한 역할 모색
 - 지금까지의 국회 예산심의는 부처별·사업별 등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총량’이나 ‘배분’ 등 거시적 편성 방향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였음
 - 대외적으로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저성장이 우려되고 대내적으로는 고령화 및 복지수요 증대로 인해 재정소요가 증가되는 현실에서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향 모색 필요

다. 각계 각층의 의견을 바탕으로 한 ‘조화로운 예산’ 마련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여·야 국회의원 외에도 학계·언론계·시민단체·연구기관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를 토론 패널로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

2. 토론회 프로그램

- 9월 5일(월) 14:00 ~ 16:00까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국회방송을 통해 중계

〈「나라살림 대토론회」 프로그램 진행순서〉

개회 (14:00~14:20)	개회사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
	축사	정갑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축사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동영상] 2012년 나라살림! 총량과 재원배분		
토론회 (14:25~16:00)	발제1	2012년 경제전망과 재정운용 방향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발제2	2012년 예산의 효율적인 재원배분 방향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사회	신 울	명지대 교수
	토론단	김광림	국회의원 (한나라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강기정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태규	연세대 교수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소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Ⅱ. 주요 내용

1. 2012년 예산을 위한 시사점

- 내년의 예산총량은 대내외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다소 긴축적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재정긴축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필요
 -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전세계적으로 경제전망치가 하향조정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 이러한 하강리스크를 우선적으로 감안하여 여유재원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지출 억제를 위한 재정규율의 도입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 필요
- 대외여건 악화 및 복지정책 확충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이에 미리 대비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건전한 재정운용이 필요
 - 일단도입 확대되면 대신 축소하기 어려운 복지급여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
 - 향후 5년을 전망대상 기간으로 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는 장기적 재정 소요에 대한 검토에 한계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약 30년 이상의 장기전망이 함께 제시되고, 세제개편의 중기계획을 미리 발표할 필요
- 재원배분과 관련하여, 복지분야의 지출 증가 필요성이 가장 크게 인정되는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고 복지전달체계의 개선 등 지출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
 - 지속적인 지출을 유발하는 복지정책 도입 시 재원조달 방안 등을 면밀히 고려
 - 통합복지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출 효율화 및 사각지대 해소 필요
- 미래 성장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 분야의 지출 증가가 필요하며, R&D나 SOC분야의 경우 투입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가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문가들은 2012년도 예산요구안 대비 지출 증가가 필요한 분야로 ‘보건·복지·노동 분야’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예산요구안 대비 지출 축소가 필요한 분야로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를 가장 많이 꼽았음
 - 보건·복지·노동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교육 분야의 순으로 지출 증가가 필요하며, 일반공공행정 분야, SOC 분야, 국방 분야의 순으로 지출 축소가 필요하다고 봄
- 재정 효율성 증대 등을 위해 예·결산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
 - 국회에서 예산의 연중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재정총량 및 재원배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사전에 검토하는 방안 모색
 - 국회 지적 사항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반영·시정하여야 하며, 부처별 예산심사 및 예산 사업에 대한 상시 심사 등의 도입방안 논의 필요

2. 토론 요지

<주제 1: 예산총량과 재정운용>

- 김광림(한나라당 의원)
 - 총선과 대선이 내년에 실시된다는 재정환경을 고려할 때, 5% 가량의 재정지출 증가율은 다소 긴축적인 것이나 재정건전화 필요를 감안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짐
 - 조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인세의 GDP대비 비중이 4.2%로서 OECD 평균 3.5%에 비해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증세는 다소 어렵다고 보이며 국회에서 이를 더 논의할 필요
- 강기정(민주당 의원)
 - 내년도 부처 요구안이 올해 예산 대비 7.6%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방취득세 감면 국고보조분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므로 재정건전성에 대해 보다 고민할 필요

- 재정규율의 도입을 통해 예산통제를 엄격히 할 필요 있음

□ 박태규(연세대학교 교수)

- 예산요구액이 올해 예산 대비 7.6% 증가한 것은 4% 중반의 경제성장을 달성
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다소 과한 것으로 판단
- 경제성장을 전망 하향 조정 및 유럽과 미국의 경제상황 악화 등을 감안할 때 내
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필요가 있
으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하향 조정될 필요

□ 박정수(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에서의 예산 증가율을 보면, 정부가
재정건전화에 애를 쓴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긴축재정기조를 계속 견지해 나갈 필요
- 향후 5년을 전망대상 기간으로 하고 있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은 필요한 경우 30
년 이상의 재정전망을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세제개편의 중기계획을 미리 발
표할 필요
- 재정건전화가 여러 환경에 의해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재정지출을 도입
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출을 조정하도록 하는 PAYGO원칙을 도입할 필요 있음

□ 온기운(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전세계적으로 경제전망치가 하향조정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에는 이러한 하강리스크를 우선적으로 감안하여 신중한
지출편성을 하여야 함
- 호주 등의 사례를 고려할 때 재정건전화를 위한 10~30년 가량의 중장기 재정
준칙을 지금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김유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긴축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나, 경제상황
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 경기안정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지출을 확대하고 적
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수행할 필요 있음

< 주제 2: 자원배분의 방향 >

□ 김광림(한나라당 의원)

- 국가경쟁력 및 국민적 여론을 고려할 때 복지 분야를 제일 많이 늘리되, 미래를 대비한 R&D 및 녹색성장 분야, 국방 분야, 농어업 분야도 중점을 둘 필요가 있음
- 복지 지출의 경우,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복지분야 지출 증가율이 상당히 높아야 하지만, 복지 분야는 한 번 돈이 들어가면 줄이기 어렵기 때문에 전달체계의 개선이나 중복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함
- 국회에서 정부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보다 증액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현실적으로 공개하면서 투명하게 할 필요

□ 강기정(민주당 의원)

- 시대 상황에 맞는 예산배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SOC예산 및 R&D예산은 보다 감액이 필요하며, 등록금 지원 등 교육예산은 증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 복지행정전문인력들의 증원 등을 통해 복지전달체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자연증가분 이상의 보다 많은 복지재원 증대가 필요함
- 결산 지적사항 등에 대해 정부가 국회의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 정부가 합심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을 만들어야 함

□ 박태규(연세대학교 교수)

- R&D예산의 경우 중요성은 감안되나 총량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일반 공공행정 분야 예산을 억제할 필요가 있음
- 복지 예산의 증가가 복지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복지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

- 예산집행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국회가 예산사업 집행과정 및 사후에 해당 사업을 직접 심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

□ 박정수(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 일반 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이자상환이나 지방교부세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SOC분야를 다소 줄일 필요가 있음
- 교육 분야나 노동 분야의 예산이 보다 증대될 필요가 있는데, 영유아 교육이나 평생학습 등 우선순위가 미루어져 왔던 부분을 집중 지원할 필요
-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연금구조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기금화를 통해 국회 심의를 강화하여야 함

□ 온기운(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복지 분야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 외에 불필요하게 예산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선심성 복지정책이 남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많은 국민들이 예산의 구체적 배분내역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언론에서 이러한 부분을 부각시켜서 알리는 것이 필요

□ 김유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 R&D 분야의 경우 하부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투입예산이 증가한다고 해서 산출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리고 SOC 분야의 경우 건설산업분야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성격이라는 점 때문에, 이상의 두 분야에서는 예산이 감소되어야 할 필요
- 복지지출의 경우 반드시 재정에 악영향을 주는 것만은 아니고 개인의 미래대비 저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총수요 증대를 통해 경제 및 국가재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도 고려되어야 함

토론회 자료

I. 대토론회 개회사·격려사·축사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 주영진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존경하는 정갑윤 예결위원장님과 권오을 국회사무총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기 국회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시간을 쪼개어 토론회에 응해 주신 김광림 한나라당 예결위원님, 강기정 민주당 예결위 간사님,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사회를 맡아주신 명지대학교 신을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주신 연세대학교 박태규 교수님, 한국조세연구원 박정수 소장님, 매일경제신문 온기운 논설위원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유찬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발제를 해주실 국회예산정책처 박종규 경제분석실장과 김춘순 예산분석실장,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의원님과 보좌진, 관계 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청년실업 및 물가 상승 문제 등이 심화되고 복지 수요가 더욱 증대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각계각층의 이해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난 3월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정기국회에 즈음하여, 우리 처는 2012년 예산의 총량과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오늘 두 번째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심사에 앞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난 금융위기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 미래의 복지 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향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국가재정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토론회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정갑윤 예결위원장님과 권오을 국회사무총장님, 그리고 토론자 및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5

국회예산정책처장 주 영 진

격 려 사

반갑습니다. 박희태입니다.

예산은 국가 운영의 나침반이자 원동력입니다. 한 나라의 장래를 알려주는 동시에 국정을 움직이는 핵심 에너지입니다.

때문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예산심의에 있으며, 정기국회는 예산국회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로 의회민주주의의 출발 자체가 국왕의 재정권에 대해 의회가 통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국회의 재정권한은 상당히 제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국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갖추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래서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예산안을 의결할 수 있겠습니까?

현행 제도 하에서라도 운영의 묘를 살려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국회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정부가 예산편성 과정을 연초부터 국회에 보고하고, 예산안 제출 시기도 보다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여야 간에 충분한 심의를 통해 예산을 시한 내에 처리하는 법대로 국회가 원만하게 운영되고, 삼권분립의 진정한 취지도 구현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5

국회의장 박희태

축 사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의 제도상으로는 10월 초에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이후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 60일마저도 국정 감사, 결산 등의 일정으로 인해 예산안 심사에 집중할 수 없었던 게 지금까지의 현실이었습니다.

서민에게 희망을 주고, 국가미래의 성장기반을 확충하며, 건전재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회의 재정지지를 예산에 충분히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안이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되기 이전부터 예산안 편성에 관심을 갖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오늘의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역할의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는, 저도 국회의 예산안 심사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기국회 전에 결산을 마무리하고자 아직까지 한 번도 열리지 못했던 결산 공청회를 지난 8월 17일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마련한 두 번째 『나라살림 대토론회』는 내년도 예산의 재정총량과 재원배분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국가재정의 역할과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한 재정운용의 방향을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앞서 미리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국가재원의 배분은 원칙적으로 정책 선택의 문제입니다.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실시되는 해이기 때문에, 지역의 현안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이며, 복지 분야에 대한 새로운 사업이 경쟁적으로 쏟아질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규모와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고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복지예산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이 편성되는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목소리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게 전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재정 민주주의가 한층 고양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서 국가 재정운용에 관한 고견을 가감 없이 펼쳐주시어 큰 성과의 보따리를 한 짐 가득히 가져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마련한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고, 토론에 참석해주신 전문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5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 갑 윤

축 사

안녕하십니까? 국회사무총장 권오을입니다.

지난 9월 1일 정기국회가 시작되었고 약 한달 후면 2012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사실 국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야 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회는 헌법상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300조원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심사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심사기간을 넘겨서 예산안을 처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예산안 심사기간이 미국이나 독일처럼 최소 90일 정도로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도를 탓하기 전에 국회 스스로 예산안이 제출되기 전부터 차년도 예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3월에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여·야 의원님들과 재정전문가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리 국회도 2003년 국회법 개정으로 조기결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정기국회 개회 전에 결산심의를 마친바 있습니다. 정기국회 동안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오늘 토론회가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본격적 심사를 알리는 신호탄이자,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조화로운 예산’이 마련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1. 9. 5
국회사무총장 권 오 을

Ⅱ. 대토론회 자료

[발제 1 : 2012년 경제전망과 재정운용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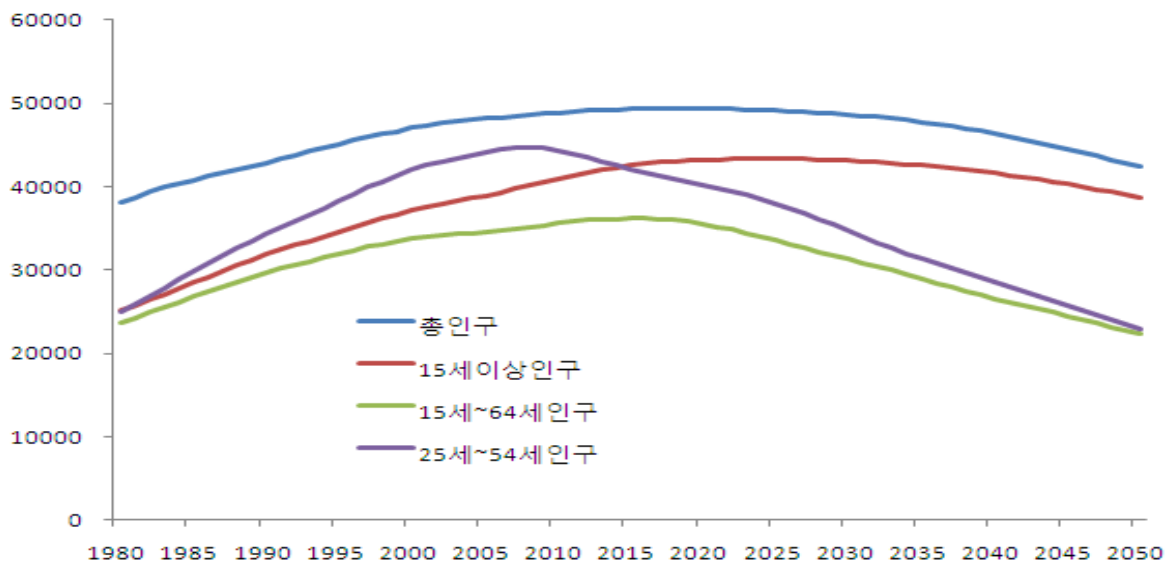
국회에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박종규

I. 머리말

- 글로벌 금융위기에 뒤이은 선진 각국의 재정위기 여파로 현재 국제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져 있을 뿐 아니라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거의 모든 국가가 향후 성장률이 상당기간 동안 둔화될 전망이다
 - 이런 상황은 향후의 재정수지가 더 악화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게 됨

〈장기 인구 전망〉

(단위: 천명)



자료: 통계청

- 한편,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장기적으로는 극히 심각한 수준까지 도달함으로써 우리재정에 엄청난 도전요인이 될 것임
 - 따라서 향후의 재정정책은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입안되어야 할 필요
- 작년 하반기 이후 장기재정소요가 불가피한 새로운 복지정책 제안들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는 반면 재원조달 대책은 거의 없는 상황
- 5년간의 중기적으로 보면 우리재정은, 적어도 공식적 통계를 기준으로 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새로운 재정지출을 도입할 여력도 상당히 많아 보이는 것이 사실임
- 그러나 5년 이후 인구 고령화로 인한 재정악화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다가오고 있어 경각심이 필요하며 아울러 우리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
- 본 자료는 향후 재정운용의 전제가 되는 경제전망과 중·장기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
 - 세입측면에서는 경제순환을 위한 조세정책방안과 세원확대 및 세제 합리화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

II. 경제 및 재정전망

1. 경제 전망

- 본 장의 전망치는 2011년 4월 전망치이며 현재 수정 작업이 진행 중임
- 2011년 경제성장률은 4.1%, 2012~2015년까지 4개년 동안 평균은 4.2%
 -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4개년 평균 4.7%에 비해 0.5%p 낮은 수준
 - 소비자 물가는 2011년 4.1%, 2012~2015년 평균은 3.1%로 위기 이전 4개년 평균치 2.8%보다 0.3%p 높아질 것으로 봄
- 앞으로 5년간 우리 경제는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인플레이션률은 높아지는 모습으로 전망하였음

〈2011~2015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억달러, 원)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국내총생산	6.2	4.1	4.3	4.4	3.8	4.4
민간소비	4.1	3.6	3.7	3.8	3.2	3.5
설비투자	25.0	7.4	6.0	6.6	5.0	8.4
건설투자	-1.4	-2.0	1.1	1.7	1.5	0.7
총수출	14.5	9.6	7.7	9.0	6.9	9.1
총수입	16.9	9.2	7.0	8.1	6.8	8.1
경상수지(억달러)	282.1	169.9	154.7	114.2	238.6	226.1
GDP디플레이터	3.7	3.1	2.4	2.6	2.5	2.6
소비자물가	2.9	4.1	3.2	3.1	2.9	3.1
실업률	3.7	3.6	3.4	3.3	3.5	3.4
원/달러 환율 (기준환율)	1,156	1,085	1,059	1,020	1,034	1,027
국고채수익률 (3년만기)	3.7	4.1	4.6	4.8	4.4	4.7
경상국내총생산	10.1	7.3	6.8	7.2	6.4	7.1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 연평균

3. 2010년은 실적치, 2011년 이후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1. 4.

2. 총수입

- 2011년 총수입은 320.7조원으로 2010년 총수입 실적 대비 7% 증가하고 2011년 확정예산대비 6.3조원 많을 전망
 - 예산 대비 국세수입은 2.6조원,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은 3.8조원 초과 예상
- 2011~2015년 중 총수입은 연평균 6.4% 증가하여 2011년 320.7조원에서 2015년 409.5조원으로 중기적으로는 행정부 전망치와 유사한 수준

〈2011~2015년 총수입 전망〉

(단위: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총수입	320.7	341.3	365.8	385.4	409.5	(6.3)
(GDP 대비)	(25.5)	(25.4)	(25.4)	(25.1)	(24.9)	-
(전년대비 증가율)	(7.1)	(6.4)	(7.2)	(5.4)	(6.2)	-
행정부 계획	314.4	342.9	365.1	390.9	-	-
1. 국세수입	190.3	203.1	220.1	234.0	249.3	(7.0)
(GDP 대비)	(15.1)	(15.1)	(15.3)	(15.3)	(15.2)	-
2. 사회보장기여금	37.6	40.1	42.5	44.9	47.6	(6.1)
(GDP 대비)	(3.0)	(3.0)	(3.0)	(2.9)	(2.9)	-
3.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92.9	98.2	103.1	106.5	112.6	(4.9)
(GDP 대비)	(7.4)	(7.3)	(7.2)	(6.9)	(6.9)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1. 4.

3. 총지출

- 2012년 총지출은 전년대비 5.5% 증가한 326조원 수준으로 전망하였으며, 2011~ 2015년 동안 총지출은 연평균 5.4%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
 - 의무지출은 2011년 135.8조원에서 2015년 185.8조원으로 연평균 8.1% 증가
 - 의무지출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음에 따라 총지출 중 의무지출 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1년 43.9%에서 2015년 48.7%로 증가 예상

- 재량지출은 2011년 173조원에서 2015년 195.6조원으로 연평균 3.1% 증가
 - －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이는 재량지출을 실질가치로 동결하는 것을 의미
- 총지출 연평균 증가율 5.4%는 중 경상성장률 전망치(6.9%)를 하회하는 수준이며, 금융위기 이전 총지출 증가율(2005~2008년, 7.8%)에 비해 크게 둔화된 모습

〈2011~2015년 총지출 전망〉

(단위: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연평균 증가율
1. 의무지출	135.8	147.2	159.7	172.2	185.8	(8.1)
(GDP대비 비중)	(10.8)	(11.0)	(11.1)	(11.2)	(11.3)	
(총지출대비 비중)	(43.9)	(45.2)	(46.4)	(47.6)	(48.7)	
2. 재량지출	173.3	178.8	184.4	189.7	195.6	(3.1)
(GDP대비 비중)	(13.8)	(13.3)	(12.8)	(12.4)	(11.9)	
(총지출대비 비중)	(56.1)	(54.8)	(53.6)	(52.4)	(51.3)	
◇ 총지출(1+2)	309.1	326.0	344.1	361.9	381.4	(5.4)
(GDP대비 비중)	(24.6)	(24.3)	(23.9)	(23.6)	(23.2)	
(전년대비증가율)	(5.6)	(5.5)	(5.5)	(5.2)	(5.4)	
(행정부 전망)	309.1	324.8	337.7	353.0	-	(4.8)
◇ 경상성장률	(7.3)	(6.8)	(7.2)	(6.4)	(7.1)	(6.9)
◇ 소비자물가상승률	(4.1)	(3.2)	(3.1)	(2.9)	(3.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1. 4.

4. 재정수지·국가채무

- 2010년 결산(잠정) 결과, 작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는 예산대비 크게 개선
 - 통합재정수지는 예산(△2.0조원) 대비 18.7조원 개선(16.7조원 흑자)되고, 관리대상수지는 예산(△30.1조원) 대비 17.1조원 개선(△13.0조원)

- 국가채무는 예산(407.2조원, GDP 대비 36.1%) 대비 14.4조원 개선된 392.8조원(GDP 대비 33.5%)
- 향후 통합재정수지는 2011년 11.6조원 흑자에서 2015년 28.1조원 흑자로 매년 흑자규모가 증가할 예상
- 관리대상수지는 2011년 19.4조원 적자에서 매년 적자폭이 감소하나 2015년에도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11.1조원의 적자를 보일 전망
 -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는 2011년 31조원 흑자에서 2015년 39.2조원 흑자로 매년 흑자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가채무는 2011년 429.1조원에서 연평균 5.5% 증가하여 2015년에는 531.1조원에 달할 전망
 - 그러나 GDP 대비 비율은 2012년 34.5%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하여 2015년에는 32.3% 수준으로 낮아지는 양호한 모습

〈2011~2015년간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전망〉

(단위: 조원, %)

		2011	2012	2013	2014	2015
통합재정수지	NABO	11.6	15.2	21.7	23.6	28.1
	행정부	5.5	18.1	27.4	37.9	-
관리대상수지	NABO	△19.4	△18.5	△15.1	△13.8	△11.1
	행정부	△25.3	△14.3	△6.2	2.7	-
국가채무	NABO (GDP 대비)1	429.1 (34.1)	463.4 (34.5)	490.2 (34.0)	514.2 (33.5)	531.1 (32.3)
	행정부 (GDP 대비)2	436.8 (34.7)	468.1 (35.2)	485.7 (35.1)	492.2 (33.8)	-

주: 1. 국회예산정책처의 경상GDP 전망 대비

2. 행정부의 경상GDP 전망 대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1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2011. 4.

5.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에 대한 평가

- 정부는 작년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13~2014년 균형재정 회복을 목표로 제시하였으나 최근 이를 앞당겨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제시
 - 재정운용에 대한 책임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 NABO의 지난 4월 보고서에서는 2015년까지도 균형재정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향후 정부가 총지출 증가를 얼마나 억제하느냐, 감세 유예를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귀결되느냐, 금년과 내년에 일몰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을 얼마나 정비하느냐에 따라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임

Ⅲ. 경제여건 변화와 재정의 역할

1. 지난 4월 이후 해외경제 여건 변화

- 지난 4월 이후 특히 7월 이후 미국, 일본, 유럽 국가 등 선진국의 경제 여건이 급격히 악화
 - 선진국들이 동시에 침체에 빠진 경우는 여러 번 있었으나 선진국들이 동시에 지금 같은 위기에 빠진 경우는 없었으며 현재의 상황은 우리경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임
 - 중국, 인도, 브라질 등 거대 개도국들은 선진국 경기둔화로 수출수요가 줄어들 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경기감속이 불가피

〈주요국 실질경제성장률 추이〉

(단위: 전기비, 연율, %)

	2010				2011	
	1/4	2/4	3/4	4/4	1/4	2/4
미 국	3.9	3.8	2.5	2.3	0.4	1.3
유 로	1.4	3.8	1.6	1.1	3.4	0.7
독 일	2.0	8.0	3.2	1.9	5.5	0.5
프 랑 스	0.7	2.0	1.5	1.3	3.6	△0.0
이 태 리	2.6	1.9	1.1	0.6	0.6	1.0
일 본	9.4	△0.5	3.9	△2.5	△3.6	△1.3
한 국	8.6	5.7	2.6	2.0	5.4	3.4
대 만	17.8	2.4	3.7	1.2	18.5	△3.6
홍 콩	7.6	7.8	3.5	6.3	12.8	△2.1
싱가포르	39.9	29.7	△16.7	3.9	27.2	△6.5
중 국	11.9	10.3	9.6	9.8	9.7	9.5
인 도	9.4	8.9	8.9	7.8	7.8	-

주: 중국과 인도는 전년동기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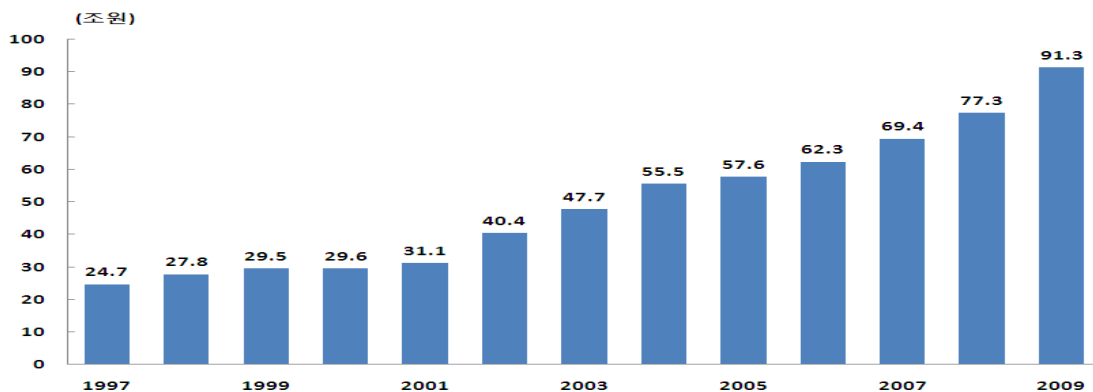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세계경제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동시에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며 침체의 지속기간도 상당 기간에 걸칠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
 - 2011년 2/4분기 이후 주요국 경제성장률 둔화세 현저
- 올해보다 나은 2012~2013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의 전제였던 선진국 경기 부양의 여건도 악화
 - 선거를 앞둔 미국, 일본, 독일, 중국, 프랑스 등이 경제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 동원 여력이 없을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 경제의 성장세도 둔화될 전망
 - 하반기 우리나라 수출은 미국경제의 성장둔화, 유럽의 재정위기 지속, 중국의 수입수요 약화 등으로 현저히 둔화될 가능성(10% 내외의 증가에 그칠 가능성)
 - 미국경제의 성장둔화로 대미수출 주종 품목인 무선통신기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등의 수출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고 미국 등 선진국 경기둔화로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수출도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임
 - － 우리나라의 대개도국 수출(대중국수출)은 주로 중간재 및 부품수출이라는 점에서 선진국경기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
- 하반기 이후 미국경기 둔화 → 여타 선진국경기둔화 → 개도국 수출둔화 → 우리나라의 수출 위축현상이 가시화될 전망
- 이러한 최근 세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NABO의 2011~201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 검토 중
 - 수출둔화로 내수부진 심화 예상(투자부진, 고용부진 → 피고용자 소득 정체 → 내수경기 침체 심화)
 - 저축은행 구조조정(3/4분기), 가계부채 문제 등도 내수경기 위축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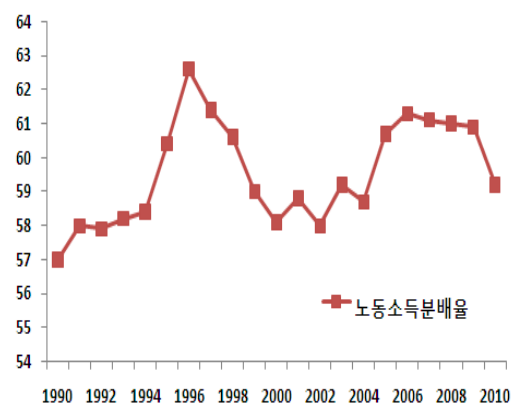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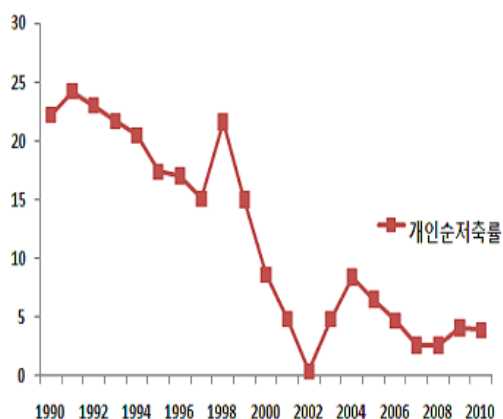
2. 향후 재정의 역할 :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

- 최근의 국제금융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상당기간 동안 실물경제를 침체시킬 것이며 그러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는 1~2년에 끝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에서 그런 성격의 침체에 대해 재정적자 확대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져 있고 실물경제에 대한 여파도 오래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단기적 재정부양보다 가계저축률을 높이고 경제선순환의 물꼬를 트는 경제체질 강화가 바람직
- 또한,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연령인구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 것이 불가피하므로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
 -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2011년 4%대를 예상하는 경제성장률은 2050년까지 1% 초반 수준까지 하락하며 노동투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2025년 이후 역사상 처음으로 음수로 전환
- 우리경제는 2001~2002년 무렵부터 저축의 주체여야 할 가계가 부채의 주체가 되었고, 2004~2005년 무렵부터는 부채의 주체가 되어야 할 기업이 저축의 주체가 되어 경제가 거꾸로 가는 현상이 지속됨으로써 경제선순환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경제주체의 역량이 극대화 되지 못함

〈상장기업 현금성 자산규모 추이〉



- 우리경제가 선순환을 회복하여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가장 자연스럽고도 가장 효과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임
- 문제의 핵심은 기업부문(특히 재벌기업)에서 중소기업과 가계 등 여타부문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하고 기업부문에만 고인 채 점점 더 쌓이는 데에 있음
 - 기업은 불확실성 속에서도 이노베이션을 통해 수익률이 높은 투자기회를 발굴해 내어 이익을 창출하고 투자와 고용을 늘이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나 외환위기 극복이후 이런 역할이 지나치게 위축
 - 이에 따라 가계소득이 제대로 늘어나지 못하여 가계부채 빠르게 증가하고 정상적인 소비가 어려워져 내수가 부진해지며 투자도 부진해짐
 - 내수와 투자가 부진하여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며, 청년실업률이 하락하지 못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성장을 체감하지 못함
 - 이로써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경제의 역동성이 눈에 띄게 약화되었으며 사회적으로는 복지확충에 대한 요구가 급격히 확대
 -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자금이 기업부문에서 여타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는 현상’을 바로잡는 데에 있음



- 특히 2010년에는 경제전체적인 소득이 가계보다는 기업 쪽으로 급격하게 분배되어 노동소득분배율이 통계작성 이래 최고의 빠르기로 하락(1.7%p)
 - 이는 기업에 대한 인식이 급속히 악화되고 복지에 대한 요구가 폭증한 것의 보이지 않는 배경이 되었다고 판단됨
- 기업부문에서 중소기업 및 가계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선순환 회복의 핵심
- 당분간 세계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과 수요부진 현상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우리 대기업들도 투자와 고용보다는 현금자산 축적을 선호했던 지금까지의 행태를 바꾸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자금을 굴리는 것과 이노베이션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겠다는 메시지를 시급히 전달할 필요
- 법인세 인하에 따른 여유자금을 투자 및 고용 증대에 사용하든, 현금자산 운용에 사용하든 차별을 두지 않는 현행 세제를 재검토할 필요
 - 단기자금운용을 통한 이자수입보다는 이노베이션과 투자를 통해 기업 본연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인세 인하의 기본 취지를 기업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
- 정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꼽고 있는 동반성장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 및 지출 측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바람직
 - 고용의 88%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정당한 몫을 찾아주자는 동반성장 과제도 기업부문에서 중소기업을 통해 가계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하자는 것으로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
 - 비정규직 문제 역시 기업부문에서부터 가계로 근로자의 정당한 몫을 흘러가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선순환 회복에 매우 중요한 부분
- 이와 함께 우리경제의 가장 중요한 내부적 취약요인인 가계저축률 회복을 위해서도 재정이 응분의 역할을 해야 할 필요

- 개인 저축률 제고를 위해 개인의 이자소득세율을 현행의 14%에서 10%로 인하하는 방안(세수효과 -628억원)을 검토
 - 단, 4000만원 이상인 경우 현행의 종합과세를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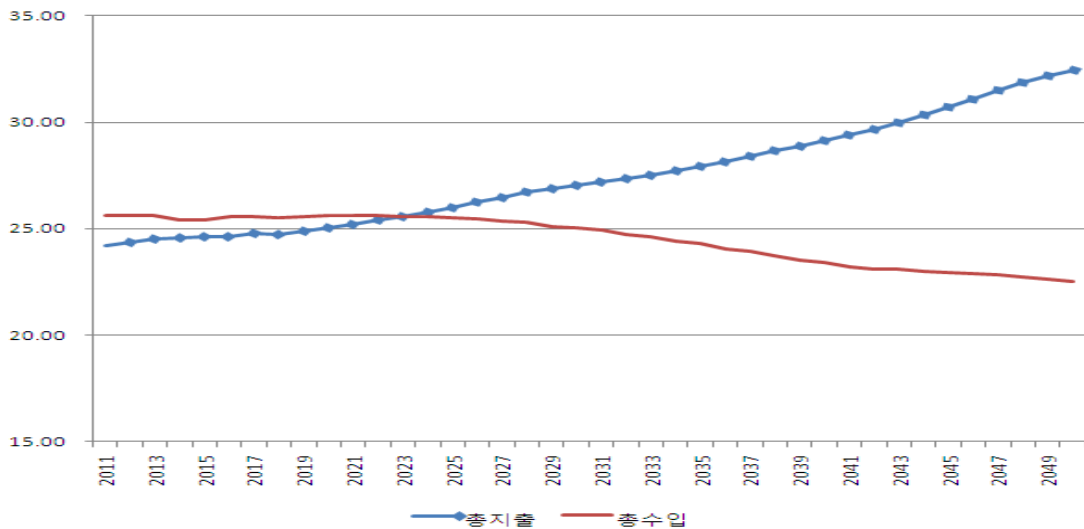
IV. 향후 재정운용 방향

1. 복지지출 확대와 장기적 관점의 재정운용

- 작년 하반기 이후 복지 프로그램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쏟아지다시피 나왔고 그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복지 프로그램의 도입을 논의함에 있어서 우리재정은 고령화의 영향으로 장기적으로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
 - 현행 법·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서 2050년까지 재정전망한 결과, 경제성장률의 하락에 따라 세수는 늘어나기 어려운 반면, 세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2050년까지 총수입·총지출 전망〉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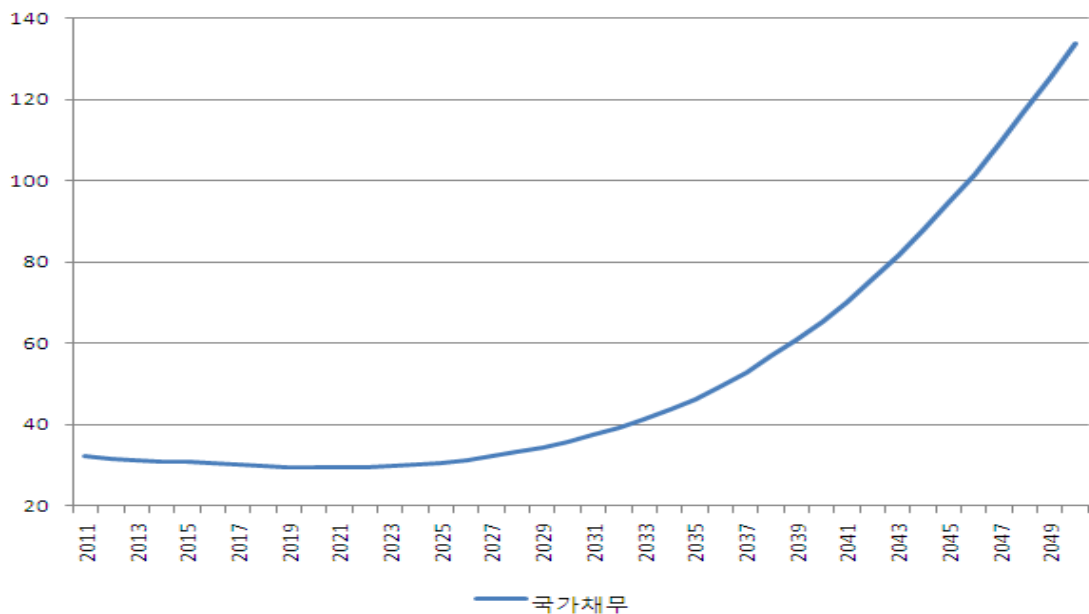


- 현재 흑자를 보이고 있는 통합재정수지는 2024년부터는 적자로 전환한 뒤 그 격차가 엄청나게 빠르게 벌어질 전망
- 국가채무의 GDP 비중은 2021년까지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통합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

- 이런 전망에 기초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fiscal sustainability)을 분석한 결과, 2035년 이후 우리 재정은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2035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50% 수준으로 EU 기준인 GDP 대비 60%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기 시작하는 이유는 그 시점 무렵부터 그 이후의 국가채무/GDP 증가속도가 급격히 빨라지기 때문이며 이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 때문으로 볼 수 있음

〈2050년까지 국가채무 전망〉

(단위: GDP 대비 %)



- 이러한 장기재정전망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세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
- 첫째,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다른 나라와 단순비교하면 안됨
 - “선진국에 비해 국가채무 비율이 낮으므로 괜찮다”고 하는 논리는 우리나라의 매우 독특한 요인인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감안하지 않는 것으로서 우리 재정을 위험한 방향으로 인도할 가능성

- 둘째, 지금으로부터 25년 뒤인 2035년은 현재의 40세인 사람이 65세가 되는 시점으로서, 40세 이하 국민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우리재정은 이미 지속불가능한 상황으로서 세출을 줄이고 세입을 늘이는 것 밖에는 재정에서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option이 남아있지 않게 된다는 의미
- 셋째, 따라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 등 장기적 세출 소요가 있는 지출정책은 5년 단위의 중기보다는 한 세대, 30년 이상의 시야를 가지고 고려해야 함
 - 향후 5년까지 우리 재정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저출산·고령화의 문제가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약 10년 후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복지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임
- 대부분의 복지재정을 포함한 장기적 재정지출이 소요되는 예산항목에 대해서는 현행의 5년이 아닌, 30년 이상에 걸친 장기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첨부하도록 국가재정법 개정을 검토할 필요
-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의 논의 과정에서 재정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즉, 새로운 복지지출의 장기적인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임
 - 새로운 복지지출의 재원으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줄이면 된다는 의견이 많이 있으나 SOC를 줄이는 것은 장기적 재원조달 수단이 될 수 없음

2. 세원확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방향

-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원조달의 가장 대표적인 방안은 세원확대
-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에 따라 감세시행과 동시에 세원확대가 추진되었어야 하나 2008년말의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이은 세계경제위기로 세원확대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

- 정부의 2013년 균형재정달성 목표를 위해서는 물론 우리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위해서도 세원확대가 시급
- 2011년 및 2012년 일몰도래하는 비과세 감면항목의 정비와 2011년 이후 5개년동안 시행되어야 할 세원확대방안으로 나누어 정리

가. 2011년 및 2012년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정비(예시)

-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기본원칙에 따라 금년과 내년에 일몰도래하는 비과세 감면을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
 - 레이건 정부도 대대적인 감세 이후 몇 년 뒤 사상 최대 폭의 세원확대
- 2011년 일몰도래하는 41개 비과세·감면 항목(총 7.4조원 규모)과 2012년 일몰도래하는 77개 항목(총 9.2조원 규모) 가운데 조세지원 근거 미흡, 지원실적 감소, 정책환경 변화, 입법취지 달성여부, 한시성 등을 기준으로 일몰연장 여부를 검토
- 2011년 일몰도래 항목 중 11개(1.9조원)와 2012년 일몰도래 항목 중 6개(2.3조원)를 일몰종료 대상으로 검토
 - 이 경우 세제합리화는 물론, 2013년에는 총 4조 2천억원의 세입이 증가하여 2013년 균형재정 달성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이들을 일몰종료 시킬 경우 감면율은 2011년 14.3%에서 2012년 13.6%, 2013년에는 12.6%로 내려갈 것으로 추계
- 경기안정화 효과가 거의 없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완전 일몰종료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기활성화 효과는 상시적 운영, 투자결정의 시차 등으로 인해 실증분석 결과 공제율과 경제 성장률간 유의성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음
 - － 임투의 투자촉진 효과는 연구기관에 따라 상이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으며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결론을 내기가 어려움

- 2008년 공제액(신고기준 2.05조원) 중 대기업이 86%인 1.77조원을 차지하고 있고, 2011년 귀속 기준으로는 1.0조원의 세수 감소분 발생
- 저축관련 비과세·감면 항목은 자산구성 변경효과로 저축 전체를 증가시키는 효과성이 낮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일몰도래시 종료를 검토
 -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폐지하더라도 개인 저축률을 제고할 필요성이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자에 대한 기본세율을 14%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세수효과 -628억원)을 검토
 - 이 방안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조세원칙에 부합하며, 금융소득이 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기본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종전대로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므로 세부담 경감 효과는 없음
 - 세금우대종합저축 저율과세 제도 등을 폐지하는 경우의 세수효과는 연간 약 +3,315억원(2011년 기준)으로 추계
- 장기 주식투자 혹은 주식형·채권형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까지 가입한 것에 대하여만 가입 후 3년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와 비과세가 적용되고 있음
 - 중산층의 주식 장기보유를 위한다는 당초의 도입취지와 달리 최상위 고소득층에게 세제혜택이 집중되고 있어 향후 세제개편에서 동 제도 혹은 유사 제도를 확대하거나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 주요 주택 및 토지관련 비과세·감면 조치들은 실효성 미흡, 귀착의 문제, 다른 정책과의 중복지원 등으로 일몰종료가 바람직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 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1조 8,683억원), 지방미분양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에 대한 특례 종료
-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라는 당초의 기대효과를 이미 충분히 거두었으며 추가적인 세원 양성화 여지는 그리 많지 않다고 판단될 뿐 아니라 소득공제의 혜택도 서민층이 아닌 중상위소득자에게 편중되고 있으므로 점진적인 축소가 바람직

- 우리나라 신용카드 이용액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 시 경제규모에 비하여 큰 수준으로 성장하였으며, 최근 2007~2010년 간 사업소득세 증가세가 연평균 4%에 불과하여 전체 국세보다 낮음
 - 조세지출액은 2009년 0.89조원(행정부 1.89조원)으로 추계되는데, 1인당 소득세 감면액은 2천만원~4천만원 구간은 7.6만원, 4천만원~6천만원구간은 20.8만원에 불과하나 1억원~2억원 구간은 60.9만원에 달함
 - 단번에 일몰종료하기 보다는 소득공제율을 점차 인하하는 방안이 바람직
 - 소득공제율 5%p 인하하는 경우 조세지출액은 2011년 기준 총 5,863 억원에서 1,954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농·임·어업용 면세유 부분은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나머지 농어민 관련 비과세·감면조치는 일몰종료하는 방안을 검토 필요
- 농기계에 대한 영세율(1,430억원)은 혜택이 농가보다는 농기계 생산자에게 귀착되고 그동안 농업부문 기계화가 진전되어 제도의 필요성이 줄어든 데다 일부 농가의 경우 필요 이상의 농기계를 구입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일몰종료를 검토할 필요
 - 농·수협 조합법인 등의 비과세·감면(2,812억원)은 특정이익집단에 대한 지원으로 농협 등의 재무상태가 도입 당시에 비해 크게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일반기업과의 과세형평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있어 일몰종료를 검토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1조5,685억원)는 면세유 부정유통문제와 WTO/DDA 금지보조금 대상임을 고려하여 점진적 축소 검토
-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것은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는 하나 조세구조의 합리화와 균형재정, 장기적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택이 필요

나. 2011~2015년 중 세원확대 및 세제 합리화 과제(예시)

□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 세제의 자산 효율성을 위해 소액주주에 대해서도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필요함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으나 주식시장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계속 연기
- 최근 주식시장이 매우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나 향후 5년 이내에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국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을 만큼 과거에 비해 성숙도가 크게 향상되었으므로 주식시장 미성숙은 더 이상 연기 이유가 되지 못함
-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분리과세를 원칙으로, 5%의 세율을 부과하고 4,000만원(금융종합소득세 적용소득기준) 이상의 양도차익에만 과세
 - － 네덜란드, 그리스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전면과세
- 양도세 과세로 인해 주식시장에 일시적 충격만 있을 뿐, 장기적으로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Auerbach, 1988 등)

□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를 통해 다양화된 금융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필요

- 조세행정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일단 명시적 수수료를 받는 금융서비스에 한정하여 과세
 - － 명시적 수수료에 과세하면, 현재 금융보험수익의 0.5%인 교육세(2009년 0.96조원)는 이중과세 방지차원에서 축소·폐지 필요
- 수수료 수익(2009년 24.4조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시 1.3조원의 세수 예상

□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폐지하는 동시에 면세점을 현행 2,4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하여 조세체계를 간소화

- 근로장려세제 중 부양자녀요건을 완화하여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및 1인가구라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근로장려세제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는 것이 목적일 뿐 부양가족의 유무와는 기본적으로 상관이 없어야 하는 제도
 - 1인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청년실업자의 근로의욕 고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아울러 근로장려금의 지급상환소득(1,700만원)을 인상하고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구원수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기 세제개편 방향 제시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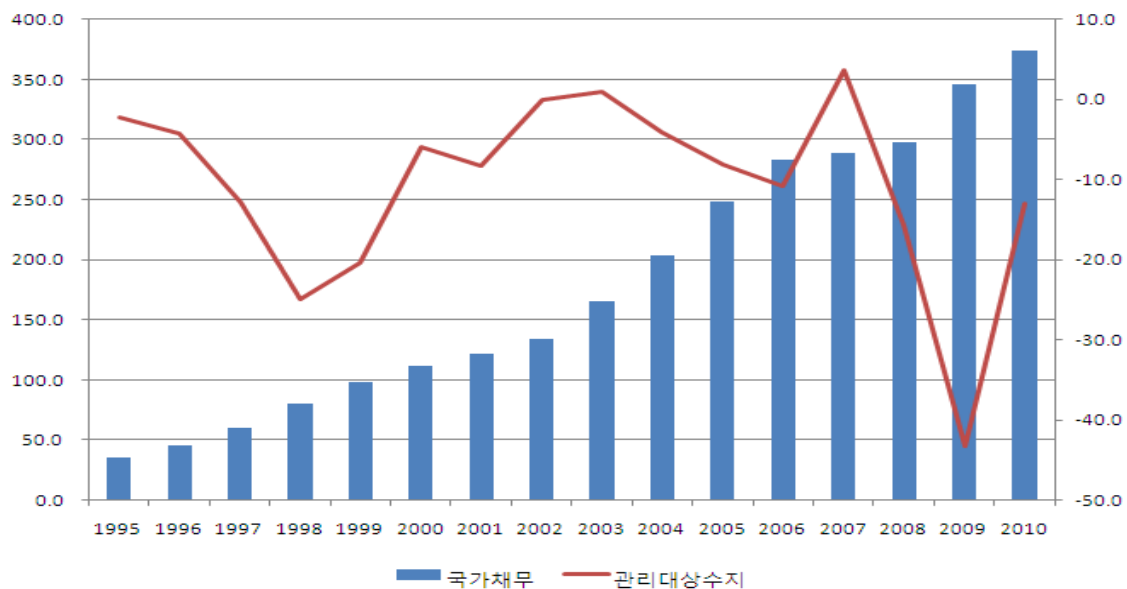
-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세원확대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의 중기적인 계획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겨야 할 필요
 -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향후 5년간(2010~2014년) 일정한 경제성장률(5%) 가정 하에 총수입 전망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세제 개편에 대한 중기 계획은 포함되지 않고 있어 재정계획이라고 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음
 - 계획성 없이 매년 그 때 그 때 제기되는 이슈에 대해 대중적으로 세제개편을 하다보니 매년 100개 이상의 항목에 대해 이런 저런 세제개편이 이루어져 조세정책이 경제의 중장기적 흐름을 어떤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하는지 알기 어려움
 - 납세자들도 매년 수많은 항목에 대한 제도 변경이 있어 어떤 제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따라잡기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
 - 정부는 중기적 세제 개편 내용을 국가재정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 사전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충분한 의견수렴과 조세정책의 sequence를 논의할 수 있게 할 필요

V. 맺음말

□ 2012년 재정운용 방향은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

- 국민의 정부 이후 정권의 임기 마지막 해에는 소폭이나마 흑자를 달성 해왔으며 현 정부도 2013년 균형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러나 임기 말년의 소폭 흑자는 차기 정부에서 이어지지 못하고 다시 적자로 돌아서곤 하였음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 이후에도 그 기조가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함

- 지출부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의무지출의 통제
- 수입부문에서는 무리한 세입기반 확대가 조세저항으로 인해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에 유념

[발제 2 : 2012년 예산의 효율적인 재정운용방향]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김춘순

I. 2012년 자원배분 총괄

1. 개관

가. 자원배분의 의의

최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 국가들의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재정 지출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수입을 확대하거나, 지출규모를 축소하여 정부의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규모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은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라 꾸준히 둔화될 것이기 때문에 세수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지출규모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성장동력 확보 등 국민들이 요구하는 재정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여건이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출규모를 확대할 경우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어 재정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다. 최근 남부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는 정부지출이 통제가 가능한 수준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 국가부도로 이어져 국민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크게 저해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국가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민들의 정책 수요 충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자원배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나. 2012년도 예산요구안 현황

정부는 총지출 기준 332.6조원 규모의 각 부처 예산요구안을 바탕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이는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2012년 총지출 324.8조원에 비하여 7.8조원(2.3%), 2011년도 예산 309.1조원에 비하여는 23.5조원(7.6%) 증가한 규모이다.

전년 예산 대비 증가율 7.6%는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¹⁾이지만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예산요구안이 감액(2010년 -2.2%, 2011년 -1.1%)되어 온 과거 경험에 비추어 실제 예산안 규모는 요구안에 비하여 일정 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2012년도 예산요구안 규모〉

(단위: 조원, %)

	2011			2012 요구안 (B)	증감액 (B-A)	증감률 {(B-A)/A}
	요구안	예산안	예산 (A)			
총 지 출	312.9	309.6	309.1	332.6	23.5	7.6
【예 산】	219.4	215.9	216.4	235.3	18.9	8.7
【기 금】	93.5	93.7	92.7	97.3	4.6	5.0

다. 예산요구안에 따른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

2012년도 예산요구안을 살펴보면, 기초생활보장·보육료·공적연금 등 복지지출(53.8 → 59.3조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초·중·고 교육 지원(35.5 → 39.2조원), 지방교부세(30.2 → 33.5조원), 국가채무 이자(15.3 → 16.3조원) 등 의무지출과 국방비(31.4 → 33.5조원) 등이 지출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총지출 증가율 7.6%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분야는 R&D(13.7%), 일반공공행정(11.0%), 교육(10.9%), 외교통일(8.0%) 등 4개 분야이며, SOC(△13.8%), 문화(△6.2%), 환경(△5.8%), 농림(△2.7%), 산업·중소기업·에너지(△0.7%) 등 5개 분야는 4대강 사업 종료 등에 따라 2011년 예산에 비하여 요구액이 감소하였다. 금액 기준으로는 7.2%의 증가율을 나타낸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6.2조원이 증액 요구되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연도별 예산요구 증가율 추이

(단위: %)

	Top-Down 도입 전				Top-Down 도입 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가율	25.3	24.5	28.6	24.9	9.4	7.0	6.8	8.4	7.4	4.9	6.9	7.6

주: 전년 예산 대비, 총지출 기준

〈2012년도 예산요구안에 따른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

(단위: 조원, %)

	2011예산 (A)	2012요구안 (B)	증감	
			(B-A)	%
R&D	14.9	16.9	2.0	(13.7)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2	15.1	△0.1	(△0.7)
SOC	24.4	21.1	△3.4	(△13.8)
농림수산물	17.6	17.2	△0.5	(△2.7)
보건·복지·노동	86.4	92.6	6.2	(7.2)
교육	41.2	45.7	4.5	(10.9)
문화·체육·관광	4.2	3.9	△0.3	(△6.2)
환경	5.8	5.4	△0.3	(△5.8)
국방(일반회계 총계)	31.4	33.5	2.1	(6.6)
외교·통일	3.7	3.9	0.3	(8.0)
공공질서·안전	13.7	14.3	0.6	(4.5)
일반공공행정	52.4	58.1	5.8	(11.0)
총 지출	309.1	332.6	23.5	(7.6)

한편, 예산요구액이 감소한 5개 분야 중 SOC 분야를 제외한 4개 분야 모두 최근 예산안 최종 편성단계와 국회 심의 단계를 거치면서 요구안에 비하여 증액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정된 재원을 주요 국정사업에 우선 배분한 후 기타 부문은 국회 심의 과정 등을 통하여 증액하려는 각 부처의 전략적 행태에서 일부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바, 예산안 심의 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예산 과소요구 관행이 있는 분야의 예산요구 및 확정 추이〉

(단위: 조원)

	2009			2010			2011		
	요구	예산안	예산	요구	예산안	예산	요구	예산안	예산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2.8	13.2	16.2	13.6	14.4	15.1	14.6	15.2	15.2
농림수산물	15.9	16.6	16.8	16.7	17.2	17.3	16.9	17.7	17.6
문화·체육·관광	3.2	3.4	3.5	3.3	3.7	3.9	3.7	4.1	4.2
환경	4.5	4.7	5.1	5.0	5.4	5.4	5.3	5.7	5.8

주: 2009년의 경우 수정예산안 제출 전의 당초예산안 및 본예산 기준임

2.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가. 재원배분 추이

2008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 6.1%보다 큰 분야는 R&D (11.1%), 외교·통일(8.6%), 보건·복지·노동(7.7%)이며, 총지출 증가율보다 낮은 분야는 농림수산물(0.6%), 산업·중소기업·에너지(0.7%), SOC(0.7%), 문화·체육·관광(4.3%), 환경(4.7%) 등이다. 동 기간 중 R&D, 보건·복지·노동, 국방, 외교·통일, 공공질서·안전 분야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2009년 추경 편성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보건·복지·노동 분야 등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2010년에 전년 대비 증가율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2008~2012년〉

(단위: 조원, %)

	2008	2009	2010	2011	2012요구안	연평균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R&D	11.1	12.7 (14.9)	13.7 (7.9)	14.9 (8.7)	16.9 (13.7)	1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4.7	20.8 (41.5)	15.1 (-27.4)	15.2 (0.3)	15.1 (-0.7)	0.7
SOC	20.5	25.5 (23.8)	25.1 (-1.6)	24.4 (-2.7)	21.1 (-13.8)	0.7
농림수산물	16.8	17.4 (2.9)	17.3 (-0.6)	17.6 (2.2)	17.2 (-2.7)	0.6
보건·복지·노동	68.8	80.4 (17.0)	81.2 (1.0)	86.4 (6.3)	92.6 (7.2)	7.7
교육	36.1	39.2 (8.9)	38.3 (-2.3)	41.2 (7.8)	45.7 (10.9)	6.1
문화·체육·관광	3.3	3.6 (9.1)	3.9 (8.3)	4.2 (7.8)	3.9 (-6.2)	4.3
환경	4.5	5.7 (26.2)	5.4 (-5.3)	5.8 (6.2)	5.4 (-5.8)	4.7
국방	26.6	29.0 (8.7)	29.6 (2.1)	31.4 (6.2)	33.5 (6.6)	5.9
외교·통일	2.8	3.0 (6.0)	3.3 (10.0)	3.7 (9.0)	3.9 (8.0)	8.6
공공질서·안전	11.7	12.4 (6.7)	12.9 (4.0)	13.7 (5.6)	14.3 (4.5)	5.1
일반공공행정	45.9	51.6 (12.6)	48.7 (-5.6)	52.4 (7.5)	58.1 (11.0)	6.1
총 지 출	262.8	301.8 (14.8)	292.8 (-3.0)	309.1 (5.5)	332.6 (7.6)	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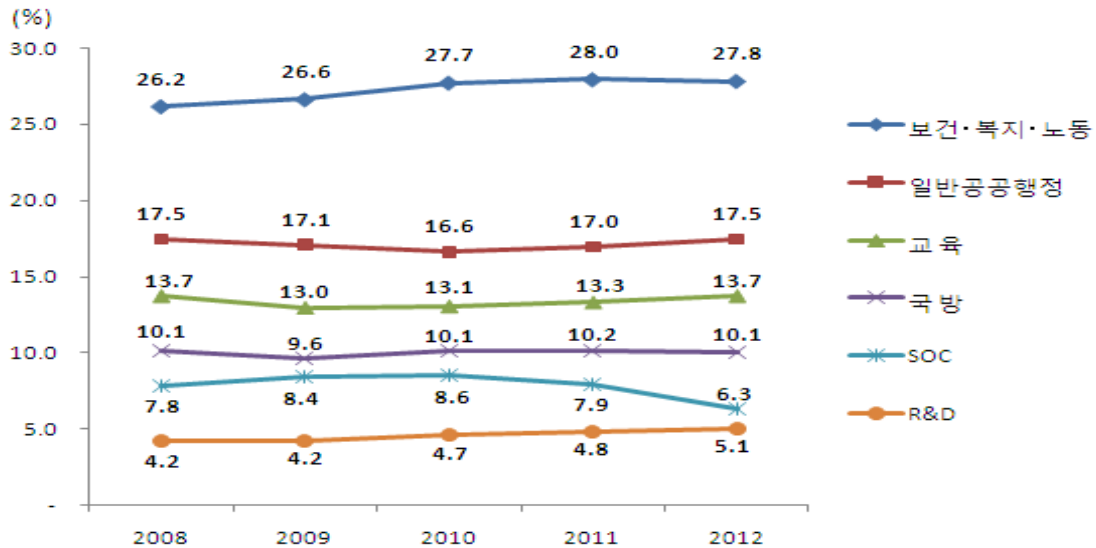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2. 2008~2009년은 추경 반영한 최종예산

자료: 기획재정부

2008년 이후 R&D 분야와 보건·복지·노동 분야(2012 요구안 제외)는 총지출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이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총지출 대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SOC 분야의 경우 총지출 대비 비중이 2010년 8.6%까지 증가하였으나 4대 강 사업의 완공에 따라 2012년 6.3%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분야별 총지출 대비 비중 추이: 2008~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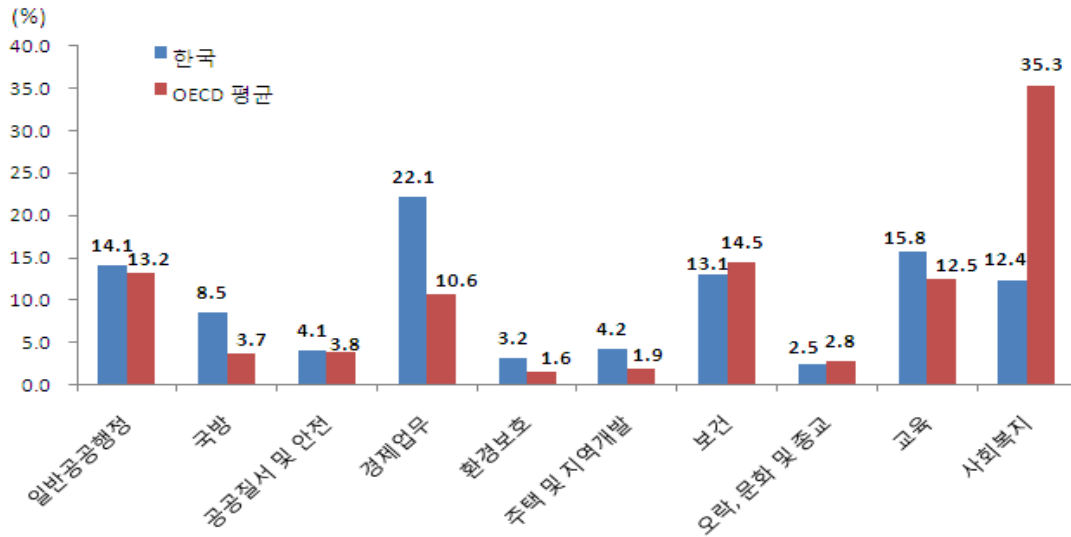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나. OECD 국가와의 재원배분 비교

OECD는 정부지출을 우리나라와 달리 일반공공행정(General public services), 국방(Defense), 공공질서 및 안전(Public order and safety), 경제업무(Economic affairs), 환경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주택 및 지역개발(Housing and community amenities), 보건(Health), 오락·문화 및 종교(Recreation, culture and religion), 교육(Education), 사회복지(Social protection) 등 10개 분야로 구분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을 합한 일반정부(General government) 지출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분야별 비중을 OECD 평균과 비교하면, 국방, 경제업무, 주택 및 지역개발, 교육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보건 및 사회복지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국방 분야의 비중은 8.5%로 OECD 평균(3.7%)의 2.4배에 이르는 반면, 사회복지 분야의 비중은 12.4%로 OECD 평균(35.3%)의 약 1/3 수준이다. 주요국의 1인당 GDP가 27,000달러 내외(구매력 기준)인 경우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업무와 교육

분야의 비중이 각각 22.1%, 15.8%로 다른 나라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사회복지 비중 (12.4%)은 미국(20.1%)과 함께 낮은 편에 속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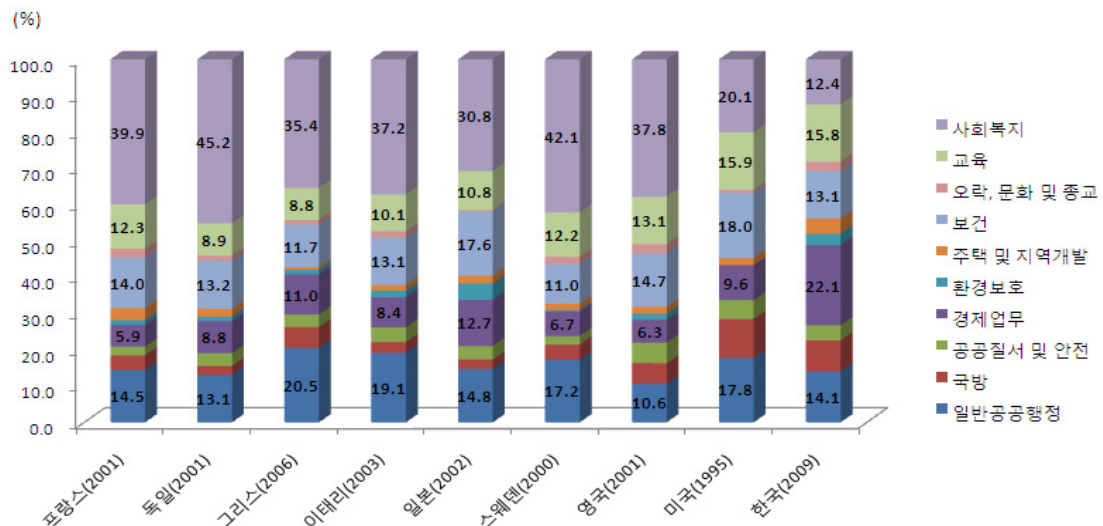


<분야별 비중의 국제비교>

- 주: 1. 2009년 일반정부(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등 포함) 기준이며, COFOG 분류에 따른 것임
 2. OECD 평균은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 등 8개 국가를 제외한 28개 회원국가의 평균임

자료: OECD.Stat(2011. 8)

<1인당 GDP 27,000 달러(구매력 기준)시 분야별 비중의 국제비교>



자료: OECD.Stat(2011. 8)

3. 의무지출 예산

가. 의무지출의 정의 및 추이

의무지출이란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²⁾”을 말한다. 법령에 의해 지출규모가 결정된다는 것은 법률에서 지출의무가 명시되고, 법령에서 지출대상 및 지출규모 산정을 위한 단가 등이 명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의무지출 분석이 가지는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예산안 심의 측면에서 의무지출은 대상 및 단가 등이 법령에서 규정되므로 관계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는 한 국회의 심의 범위는 제한적일 수 있으며, 둘째, 의무지출은 지출규모가 법령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경기둔화(또는 침체)로 세입여건이 악화되더라도 지출규모를 축소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재정지출을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하고 의무지출을 구성하는 항목들의 지출특성 등에 관한 분석은 예산안 심의만이 아니라 중장기 재정건전성 분석³⁾ 등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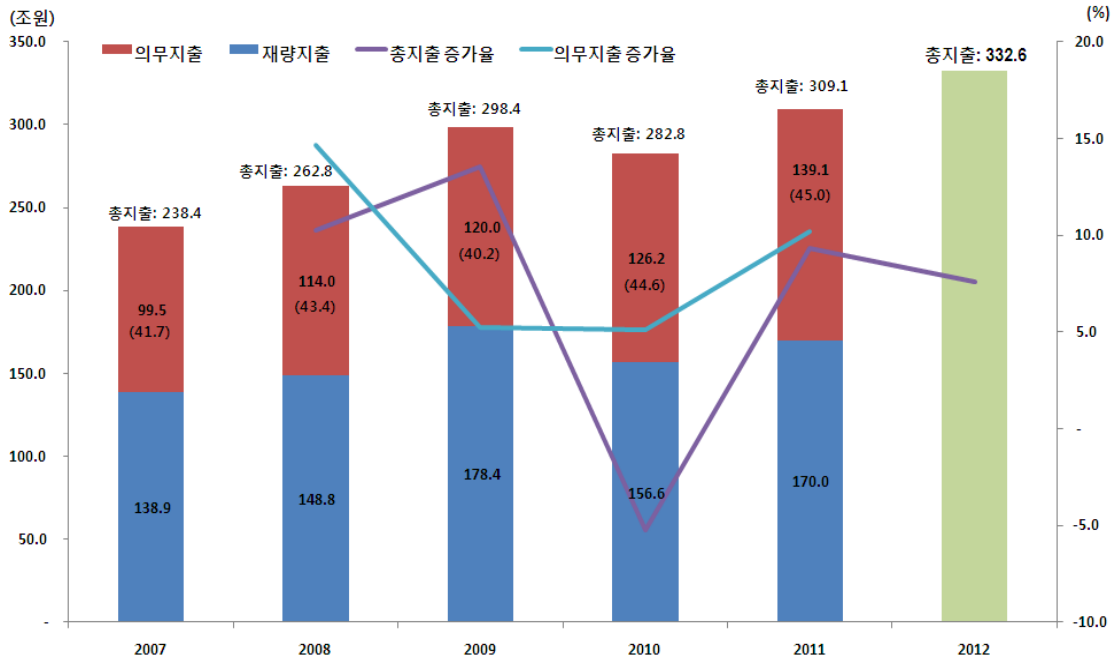
2007년부터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의 비중과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의무지출은 99.5조원으로 총지출(238.4조원) 대비 41.7%를 점유하였으며, 2008년 의무지출은 전년대비 14.7% 증가한 114조원(총지출 대비 43.4%)을 기록하였다.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신청으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실물경기가 급속히 위축되자 정부는 수정예산안⁴⁾ 및 추가경정예산⁵⁾을 편성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2009년 총지출은 298.4조원으로 2008년 대비 13.5% 증가하면서 의무지출 비중은 40.2%로 하락하였다.

2010년 들어서는 국내 및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2009년의 경기부양 성격의 사업이 종료되면서 총지출은 전년대비 5.2%감소한 282.8조원으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 2)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 및 동조동항제4호의3은 재량지출을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로 정의하고 있다.
 - 3) 지출통제측면에서 의무지출은 지출통제가 어려운 반면, 재량지출은 예산안 편성권자와 심사권자에게 많은 통제권이 부여된다. 또한 지출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의무지출은 중장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재량지출은 예측년도가 길지 않으며 시계를 확장한다 하더라도 예측결과의 활용성 측면에서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 4) 당초 2009년 예산안의 총지출규모는 273.8조원으로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2008. 10. 2.).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면서 실물부문의 빠르게 위축되자 당초 예산안 보다 10조원 증가한 283.8조원(확정예산 284.5조원)으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다(2008. 11. 7.).
 - 5) 2009년 4월 들어 정부는 28.9조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2009년 총지출은 예산안 기준 302.3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의무지출 비중은 오히려 44.6%로 크게 증가(의무지출 규모도 전년대비 5.1% 증가한 126.2조원)함으로써 의무지출이 가지는 지출 경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의무지출의 증가세는 2011년도에도 지속되었으며, 2012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아 의무지출의 규모를 정확히 산출할 수 없지만,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수요 증가,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의 요인을 고려하면 의무지출의 증가세는 2012년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총지출 및 의무지출 추이〉



주: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결산기준이며, 2011년은 예산, 2012년은 예산요구안 기준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성질별 의무지출 구조와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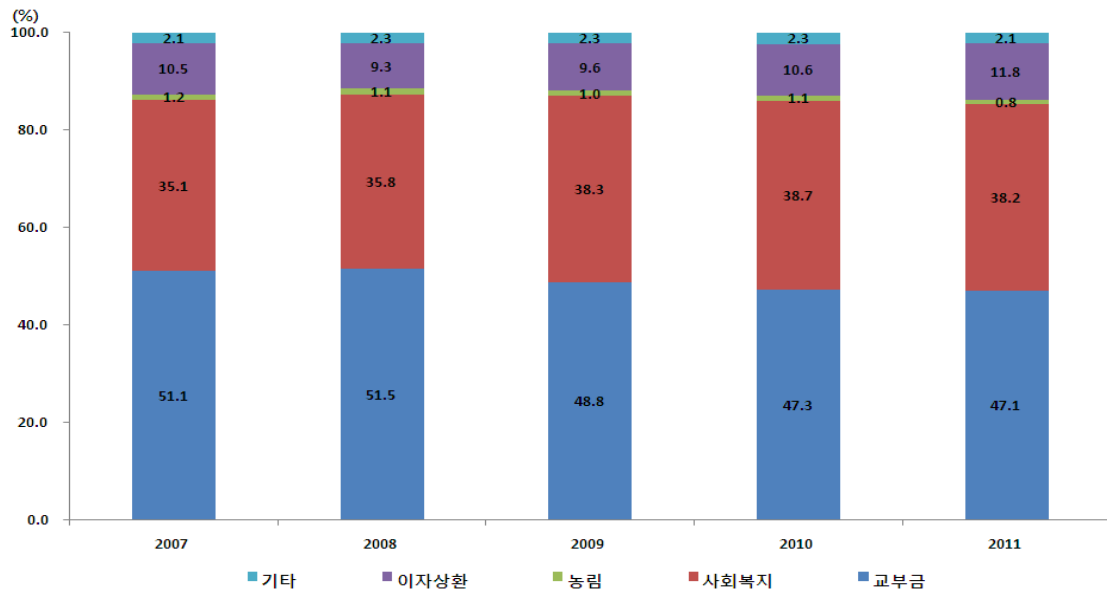
의무지출은 크게 교부금, 사회복지, 농업, 이자상환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의무지출을 성질별로 구분하는 것은 전체 의무지출의 규모와 구성의 변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해당 의무지출이 어떻게 변할지를 예측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경제여건 변화에 연동⁶⁾되어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과 경제여건 변화에 경직적⁷⁾으로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을 구분함으로써 향후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지출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

6) 경제여건에 연동된다는 의미는 경기가 호(불)황 국면에 진입하여 수입이 증가(감소)할 경우 의무지출 또한 증가(감소)한다.

7) 경제여건이 악화되어 세수가 감소(증가)하더라도, 의무지출의 규모를 변동시키기 매우 어렵다.

교부금은 2011년 예산기준 전체 의무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1%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사회복지가 38.2%를 점유하고 있어 교부금과 사회복지 의무지출의 비중이 전체 의무지출의 85.3%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의무지출의 증가여부는 교부금과 사회복지 의무지출의 변동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성질별 의무지출 비중〉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의무지출 중 점유비중이 가장 큰 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⁸⁾되어 결정되는 구조이다. 내국세 규모에 연동된다는 의미는 경제여건의 개선이나 새로운 세원 발굴 등을 통해 내국세가 증가할 경우 교부금 또한 비슷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제도 변화와 같은 경제외적인 요인들을 제외하면 세수규모는 경제성장률 등 경제여건변화에 의해 결정되므로 호황국면에서 교부금은 증가하고, 불황국면에서는 감소하는 구조를 가진다.

사회복지지출의 경우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규모를 신축적으로 변동시키기 어려우며, 경기가 악화 될 경우 복지지출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의무지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점유하는 4대 공적연금 또한 급여 등 지출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재정운용에 부담을 주게 된다.

8)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라 내국세¹⁾ 총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를 재원으로 하여 교부하고 있으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27% 및 교육세 세입액 전액을 재원으로 하여 교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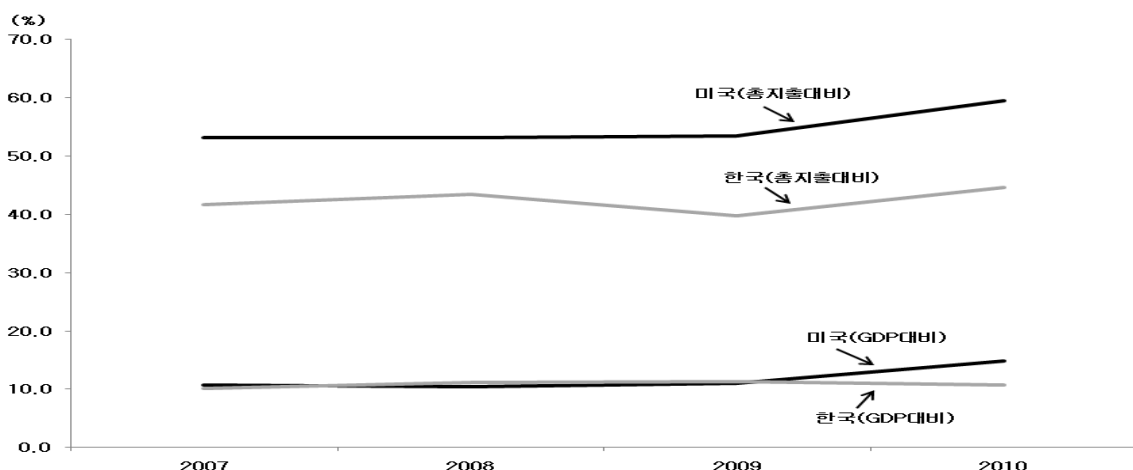
이자상환은 최근 들어 국가채무가 증가하면서 이자상환 규모 또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08년의 이자상환은 전년대비 1.1%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정부지출증가에 따른 재원부족을 채권발행을 통해 조달하면서 이자상환액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확대되어 2009년 9.7%, 2010년 15.8% 증가하였으며, 2011년 이자상환은 2010년 결산액 대비 22.0% 증가하였다. 이자상환은 국가채무규모가 조정되지 않는 한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회복 없이는 이자상환 규모를 조정하는 것 또한 어렵게 된다.

다. 시사점

총지출에서 점유하는 의무지출 비중이 확대될수록 재정운용의 신축성은 감소한다. 즉, 재량지출의 경우 국회의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출규모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반면, 의무지출은 지출상한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의무지출이 가지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미국은 pay-go 원칙을 적용하여 의무지출 증가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미국의 총지출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007년 53.2%, 2008년 53.1% 및 2009년 53.5%로 50.0% 초중반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2010년에는 59.5%로 점유비중이 크게 확대되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비교하여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p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의무지출 구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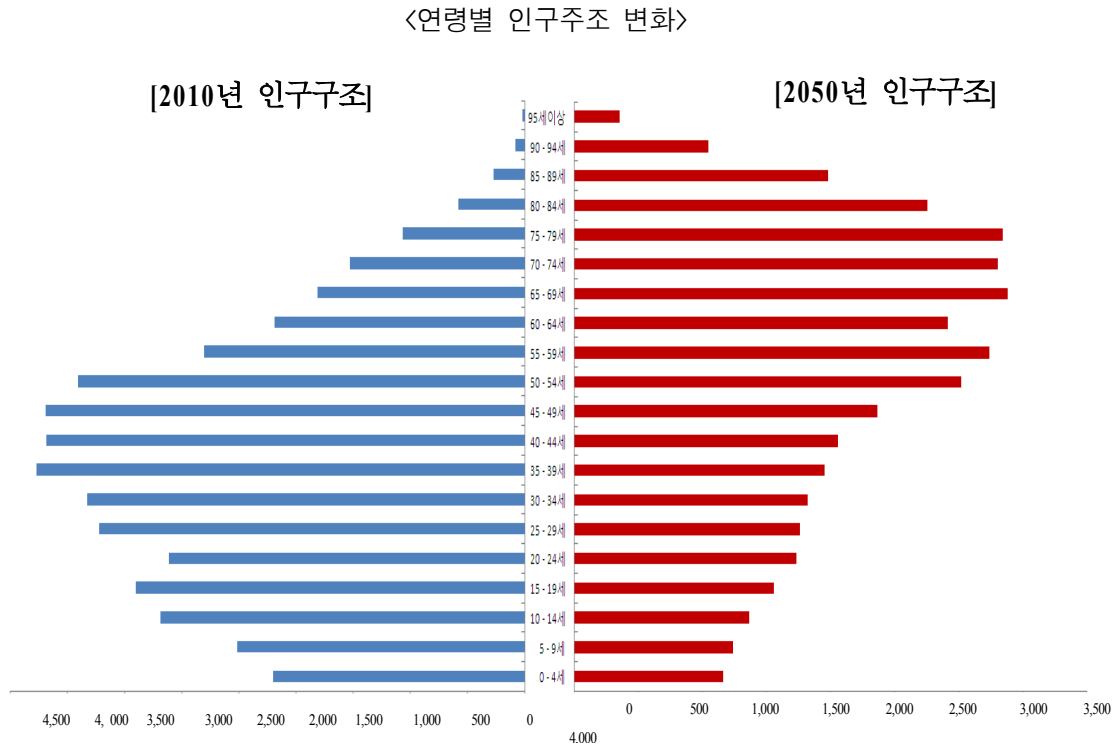


주: 미국의 의무지출은 프로그램지출에서 상쇄수입분을 차감한 후의 비중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CBO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의 사회구조, 인구구조 및 경제구조가 상이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수 있으나, 인구노령화 등에 따라 복지지출을 중심으로 의무지출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이므로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 또한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연령별 추계인구⁹⁾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이 노령층의 인구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 통계청 추계인구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의 감소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여 핵심생산가능인구 1명이 부양해야하는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011년 0.3명에서 2021년 0.5명, 2035년 1명으로 증가하고, 2046년에는 1.5명, 2048년에는 1.6명으로 증가한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노령화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재정지출에 대한 수요도 동반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분야 의무지출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지출을 제어할 수 있는 적절한 장치가 없을 경우 중·장기 재정건전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9) 2005년 인구센서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06년 11월 작성한 추계인구이다. 2010년 인구센서스 조사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추계인구 시계열은 2011년 말 발표할 예정이다. 따라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실제인구는 추계인구와 상이하다.

4.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 요구

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2012년 예산요구 현황

2012년 예산요구안의 총지출 규모는 「2010년~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총지출 규모 324.8조원보다 7.8조원을 초과한 332.6조원이다.

2012년 분야별 예산요구안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해 보면, 교육 분야가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0.8조원으로 가장 많이 초과하였고, 다음으로 국방분야(일반회계 총계 기준)가 0.6조원을 초과한 규모로 요구하였다. 반면 SOC 분야는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1.3조원 적은 규모로 요구하였고, 농림수산물식품분야는 동 계획보다 1조원 적은 규모로 요구하였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동일한 규모로 요구한 분야는 통일·외교 분야이다.

〈2012년 분야별 예산 요구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단위: 조원)

	요 구 안	국가재정운용계획
R&D	16.9	16.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1	15.5
SOC	21.1	22.4
농림수산물식품	17.2	18.2
보건·복지·노동	92.6	92.8
교육	45.7	44.9
문화·체육·관광	3.9	4.2
환경	5.4	5.7
국 방(일반회계 총계)	33.5	32.9
외교·통일	3.9	3.9
공공질서·안전	14.3	14.2
일반공공행정	58.1	57.1
총 지 출	332.6	324.8

주: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재원배분 금액은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상 2012년 계획 금액 기준임

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 요구 규모 차이

2010년 이후 매년 부처에서 요구한 총지출 규모는 전년도에 작성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 규모를 적게는 6.3조원에서 많게는 7.8조원까지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 요구 총지출 규모 차이〉

(단위: 조원)

예산 요구연도	부처 요구 총지출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	차 이
2009	298.5	291.8	6.7
2010	312.9	306.6	6.3
2011	332.6	324.8	7.8

주: 1. 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은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0년 계획 금액 기준

2.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1년 계획 금액 기준

3.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지출은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2년 계획 금액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정

2009년(2010년 예산)부터 2011년(2012년 예산)까지 부처에서 요구한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와 가장 최근에 정부에서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분야별 재원배분 규모를 비교하면 아래 표와 같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농림수산물식품 분야, 문화체육관광 분야 등은 2009년 이후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1.3조원에서 0.1조원 정도 적게 요구하였고,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0.1조원에서 1.1조원까지 많게 요구하였다.

통일·외교, R&D분야는 2009년 이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슷한 규모로 예산을 요구하거나,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0.3조원 많게 요구하였다.

〈분야별 예산 요구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 추이: 2010~2012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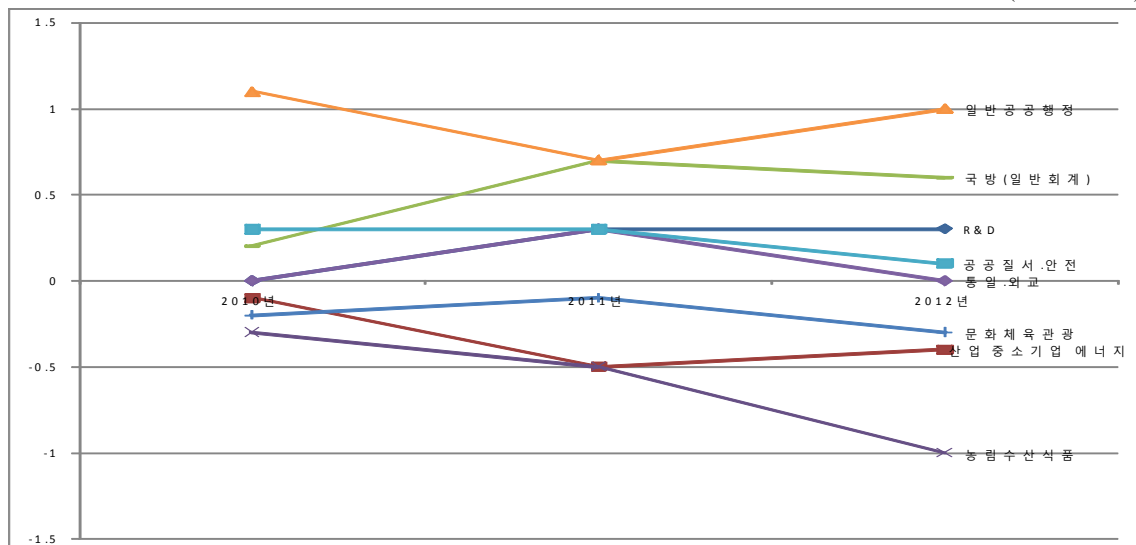
	2010			2011			2012		
	요구안	국가재정 운용계획	차이	요구안	국가재정 운용계획	차이	요구안	국가재정 운용계획	차이
〈2009년 이후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다 적은 금액을 요구한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3.6	13.7	-0.1	14.6	15.1	-0.5	15.1	15.5	-0.4
농림수산물	16.7	17	-0.3	16.9	17.4	-0.5	17.2	18.2	-1
문화체육관광	3.3	3.5	-0.2	3.7	3.8	-0.1	3.9	4.2	-0.3
〈2009년 이후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한 분야〉									
일반공공행정	49.4	48.3	1.1	53.4	52.7	0.7	58.1	57.1	1
국방(일반회계)	30.8	30.6	0.2	31.6	30.9	0.7	33.5	32.9	0.6
공공질서·안전	13.1	12.8	0.3	13.5	13.2	0.3	14.3	14.2	0.1
R&D	13.5	13.5	-	15.2	14.9	0.3	16.9	16.6	0.3
통일·외교	3	3	-	3.7	3.4	0.3	3.9	3.9	-

- 주: 1. 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재원배분 금액은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0년 계획 금액 기준임
 2. 2011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재원배분 금액은 2009~2013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1년 계획 금액 기준임
 3. 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야별 재원배분 금액은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2년 계획 금액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산정

〈분야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 요구안 차이 추이: 2010년~2012년 예산〉

(단위: 조원)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재정전문가 설문조사

가.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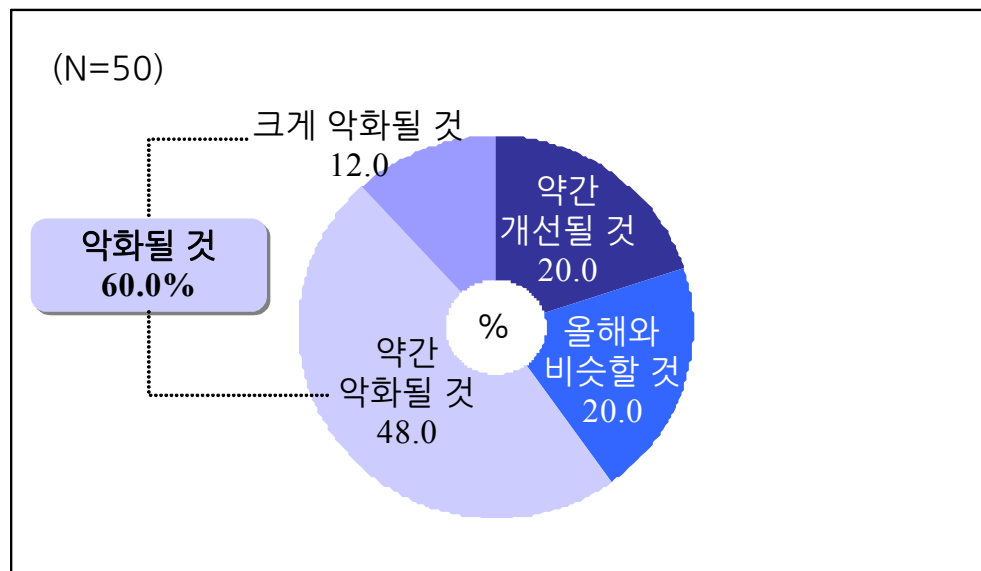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과 민간연구소 재직연구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등 50인의 재정전문가를 대상으로 ‘2012년 재정총량 및 재원배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¹⁰⁾. 주요 조사내용은 크게 거시경제와 재정총량, 예산편성의 민주성과 투명성, 분야별 재원배분 관련 사항으로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나. 조사 결과

(1) 경제전망 및 재정기조에 관한 의견

2012년도 경제상황에 대하여 조사 대상 재정전문가의 60.0%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고,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은 20.0%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인식은 내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에도 반영되어, 재정전문가의 70.0%는 내년도 소비자 물가가 올해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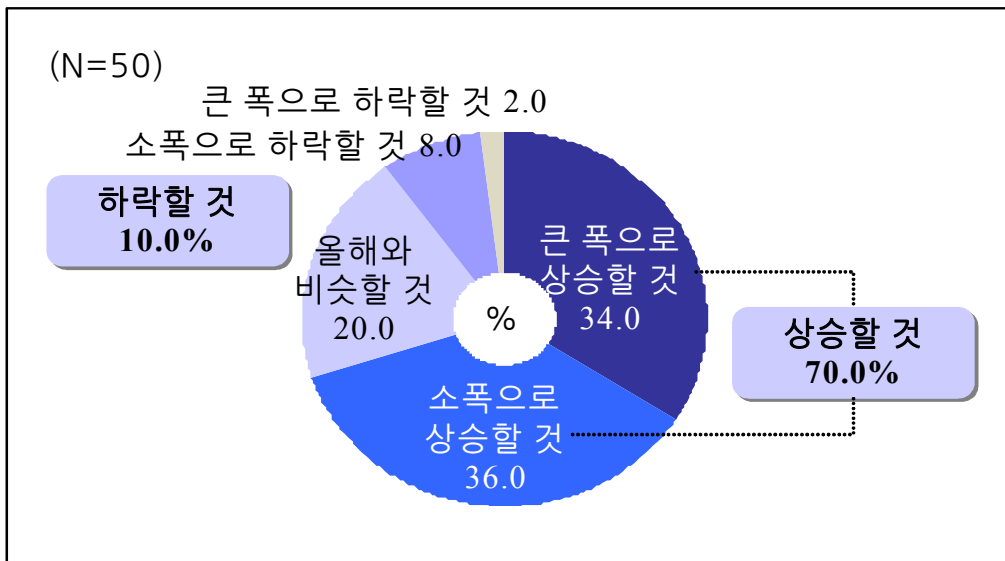
〈2011년 대비 2012년도 경제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2011. 8)

10) 2011년 8월 9일~12일, 4일간 팩스와 이메일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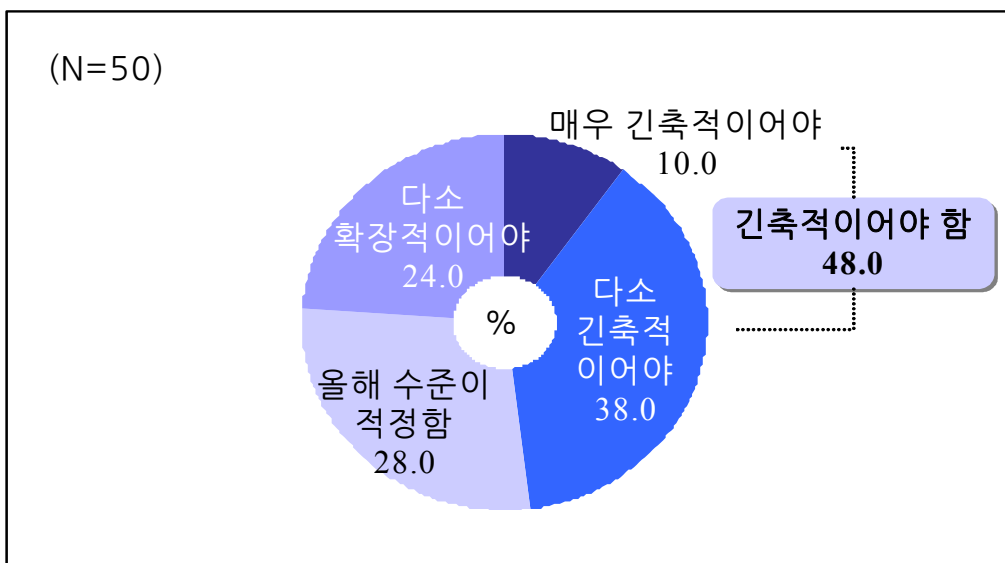
〈2012년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2011. 8)

이와 같은 내년도 경제 전망 하에서, 국가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긴축적인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로 나타났다. 2011년 대비 2012년 재정기조에 대해서는 ‘긴축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48.0%로, ‘확장적이어야 한다’는 의견(24.0%)이나 ‘올해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28.0%)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2011년 대비 2012년도 재정 기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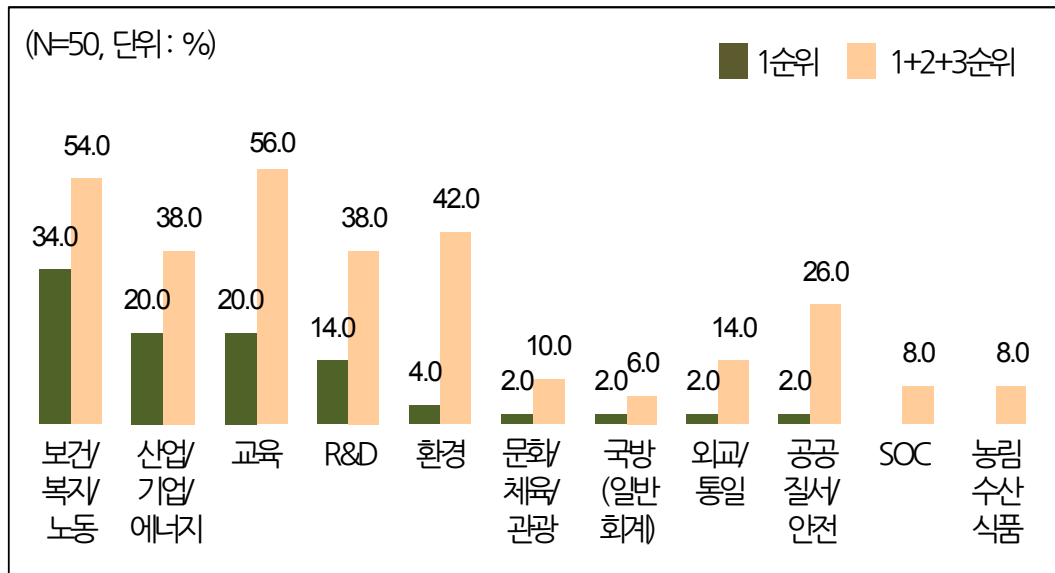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2011. 8)

(2) 분야별 자원배분에 대한 의견

각 부처가 제출한 2012년도 예산요구안에 나타난 분야별 자원배분과 관련하여, 재정 전문가들은 2012년도 예산요구안 대비 지출 비중의 증가가 필요한 분야로 ‘보건·복지·노동’(34.0%)을 가장 많이 꼽았고, 다음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20.0%), ‘교육’(20.0%) 등을 꼽았다(1순위 응답기준). ‘보건·복지·노동’분야의 지출 비중 증가가 필요한 이유로는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장기 성장 동력 확보 등이 제시되었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의 경우 일자리 창출과 상생발전, 신재생에너지 확보 등이, ‘교육’분야의 경우 사교육비 감소와 대학 경영 정상화, 균등 교육 기회제공 등이 지출 비중 증가 필요의 이유로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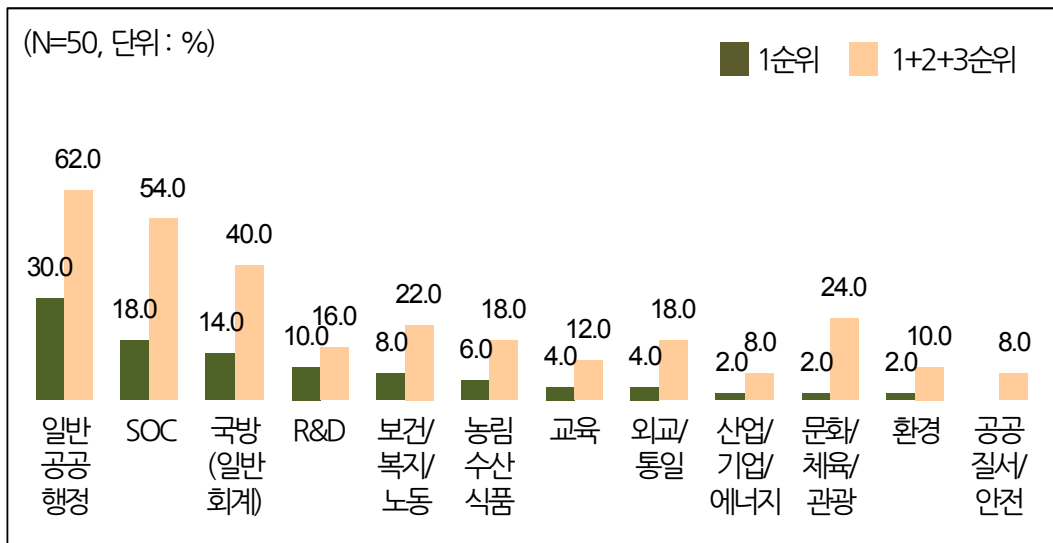
〈2012년도 예산요구안 대비 지출 비중 증가 필요 분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2011. 8)

한편, 2012년도 예산요구안 대비 지출 비중의 축소가 필요한 분야로는 ‘일반공공행정’(30.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SOC’(18.0%), ‘국방(일반회계)’(14.0%)등의 순으로 조사되었다(1순위 응답 기준). ‘일반공공행정’분야의 지출 비중 축소가 필요한 이유로는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및 작은정부 지향 등이 제시되었고, ‘SOC’ 분야에 대해서는 낭비적 행정 지출 감축, 비효율적 투자 지양 등이, 국방(일반회계) 분야에 대해서는 높은 예산 비중과 낭비성 예산지출, 비효율성 제거 등이 지출 비중 축소의 이유로 제시되었다.

〈2012년도 예산요구안 대비 지출 비중 축소 필요 분야〉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예산안 편성 방향에 관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보고서」(2011.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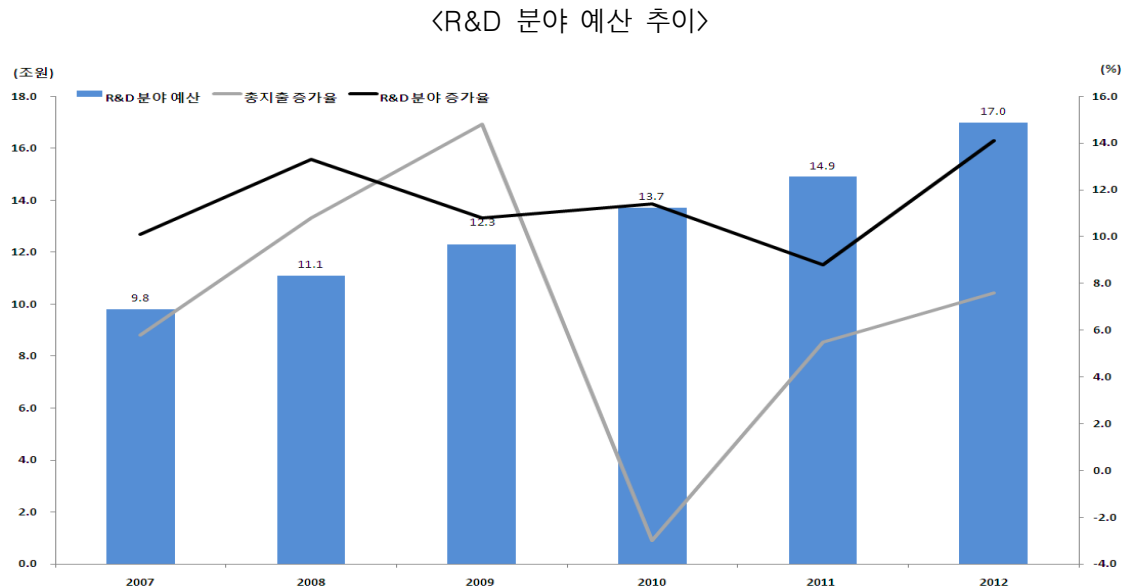
또한 각 부처가 2011년 예산 대비 증액을 요구한 6개 분야 중 ‘일반공공행정’, ‘외교·통일’ 및 ‘국방(일반회계)’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보건·복지·노동’분야에 대해서는 요구안 보다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편 각 부처가 2011년 예산 대비 감액을 요구한 4개 분야 중 ‘SOC’분야에 대해서는 요구안 보다 더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Ⅱ. 2012년 주요 분야의 자원배분 방향

1. R&D 분야

가. 예산요구 현황

2012년 R&D 분야 예산요구액은 16조 9,885억원으로 2011년 대비 14.1% 증가한 규모이다. R&D 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2%에서 2011년 4.8%로 높아지고 있으며, 2012년의 경우 총지출 기준 예산요구액(332.6조원)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자료: 1. 대한민국정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10. 10
2. 기획재정부, 「2011 나라살림 예산개요», 2011. 3
3. 기획재정부, 「2012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및 편성방향», 보도자료, 2011. 7

2012년 R&D 분야 예산요구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우주·항공·건설·재난재해 관련 기술이 포함된 거대공공 부문이 26.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기초·IT·융합기술이 포함된 첨단융합 부문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22.8%)을 보이고 있는데, 첨단융합 부문은 R&D 예산요구액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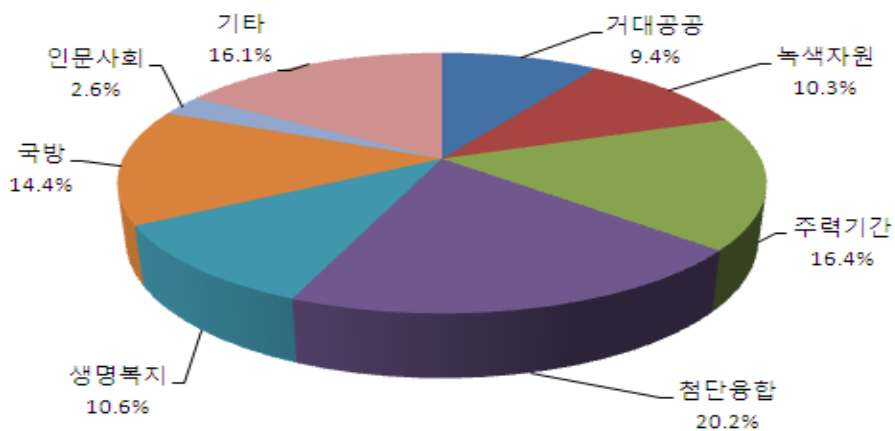
〈R&D 부문별 2012년 예산요구 현황〉

(단위: 억원, %)

	2011 예산 (A)	2012 요구안 (B)	증감 (B-A)	증감률 (B-A)/A
거대공공 (우주·항공·건설·재난재해)	12,656	15,990	3,334	26.3
녹색자원 (에너지·자원·환경·기상)	15,998	17,438	1,440	9.0
주력기간 (기계·소재·지역·중소기업)	26,504	27,928	1,424	5.4
첨단융합 (기초·IT·융합기술)	27,985	34,375	6,390	22.8
생명복지 (생명·의료·농림·수산·식품)	15,865	17,992	2,127	13.4
국 방	20,164	24,441	4,277	21.2
인문사회	4,190	4,377	187	4.5
기 타 (출연연 운영경비·정책연구비)	25,540	27,344	1,804	7.1
합 계	148,902	169,885	20,983	14.1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R&D 부문별 2012년 예산요구 비중〉



나. 예산요구의 특징

(1) 지속적 투자로 R&D 예산 규모 확대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의 핵심동력인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왔으며, 현 정부 역시 2008년 8월에 발표한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 기본계획」에서 정부 R&D 투자를 2008년 대비 1.5배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그 결과 R&D

분야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4.2%에서 2011년 4.8%로 높아지고 있으며, 2012년의 경우 R&D 분야는 총지출 기준 예산요구액(332.6조원)의 5.1%를 차지하고 있다.

〈R&D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요구안	연평균 증가율
R&D(A)	7.1	7.8	8.9	9.8	11.1	12.3	13.7	14.9	17.0	11.2
총지출(B)	196.9	209.6	224.1	237.1	262.8	301.8	292.8	309.1	332.6	6.7
(A/B)	(3.6)	(3.7)	(4.0)	(4.1)	(4.2)	(4.1)	(4.7)	(4.8)	(5.1)	

주: 연평균증가율은 2004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임

자료: 기획재정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출자료를 이용하여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작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총지출 증가율이 14.8%에 이르렀던 2009년을 제외하면, R&D 분야는 2004년 이후 지속적으로 총지출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예산 요구 기준으로 2012년 R&D 분야 증가율(14.1%)은 총지출증가율(7.6%)의 2배에 가깝다.

R&D 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된 결과 2012년 예산요구 기준으로 총지출에서 R&D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5.1%)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4.5%)보다 높아졌으며, 농림·수산·식품 분야(5.2%)와 비슷한 규모를 차지하게 되었다.

〈2012년 분야별 예산요구 현황〉

(단위: 조원, %)

	2011		2012 요구안	
		비중		비중
보건·복지·노동	86.4	28.0	92.6	27.8
일반공공행정	52.4	17.0	58.1	17.5
교육	41.2	13.3	45.7	13.7
국방(일반회계)	31.4	10.2	33.5	10.1
SOC	24.4	7.9	21.1	6.3
농림·수산·식품	17.6	5.7	17.2	5.2
R&D	14.9	4.8	17.0	5.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2	4.9	15.1	4.5
공공질서·안전	13.7	4.4	14.3	4.3
총 지 출	309.1	100.0	332.6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12년도 예산안 요구현황 및 편성방향」, 보도자료, 2011. 7.

2005년부터 2009년까지 R&D 투자 증가율을 비교하면, 정부 R&D 투자의 연평균증가율(16.7%)은 민간 R&D 투자의 연평균증가율(10.5%)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결과 총연구개발비의 재원별 비중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24.3%에서 2009년에는 28.7%까지 증가하였다.

〈총연구개발비의 재원별 비중〉

(단위: 억원, %)

	2005	2006	2007	2008	2009	연평균증가율
정부·공공	58,772	66,321	81,775	92,493	108,889	16.7
민 간	181,068	206,313	230,542	251,427	269,612	10.5
외 국	1,714	823	697	1,061	783	-17.8
총연구개발비	241,554	273,457	313,014	344,981	379,285	11.9
정부·공공: 민간	24:75	24:75	26:74	27:73	29:71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0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2010. 11.

(2) 국제수준의 정부 R&D 투자 달성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R&D 예산은 주요국 중 6위에 해당하며, GDP 대비 정부 R&D 예산 비중은 1.00%로 미국(1.18%), 핀란드(1.13%), 아이슬란드(1.06%)에 이어 4위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2009년)〉

(단위: 구매력평가기준 백만달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한국	이탈리아	스페인
R&D예산	165,317	31,073	25,858	17,011	15,146	13,210	12,557	12,229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분석」, 2011. 8.

2000년부터 2009년까지 정부 R&D 예산의 증가율을 비교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R&D 예산 증가율은 11.3%로 조사대상 29개국 중 4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정부 R&D 예산 규모가 큰 나라들 중 미국을 제외한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의 정부 R&D 예산 증가율은 1.6~4.9%에 불과하며, GDP 대비 R&D 예산 비중도 0.70~0.87%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증가율〉

(단위: %)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한국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증가율	24.5	17.1	13.4	11.3	7.9	4.9	4.3	4.3	1.6
순 위	1	2	3	4	11	23	25	26	29

주: 2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이며, 2000년부터 2009년까지의 연평균증가율임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분석」, 2011. 8.

〈주요국의 GDP 대비 정부연구개발예산 비중(2009년)〉

(단위: %)

	미국	핀란드	아이슬란드	한국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GDP 대비 R&D예산 비중	1.18	1.13	1.06	1.00	0.87	0.78	0.75	0.70
순위	1	2	3	4	8	15	17	18

주: 29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자료임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주요국의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 분석」, 2011. 8.

(3) R&D 투자 대비 성과는 높지 않음

R&D 투자의 지속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R&D 투자의 효율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논문의 경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건수는 세계 11위권이나 논문 1편당 피인용 회수는 세계 30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단위: 건수, %)

		2005	2006	2007	2008	2009
과학기술논문 발표 건수	논문 발표수	27,806	28,425	27,367	35,573	38,651
	세계 점유율	2.83	2.89	2.79	3.07	3.24
	세계 순위	11	11	12	12	11
5년 주기별 논문 1편 당 피인용 횟수	피인용횟수	2.79	2.93	3.1	3.29	3.47
	세계순위	30	31	31	30	30

자료: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정부와 민간의 지속적인 R&D 투자의 결과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액 대비 기술도입액의 비율은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기술무역수지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기술무역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기술무역수지 적자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추이〉

(단위: 백만달러)

	기술수출	기술도입	기술무역수지	기술무역규모	기술무역수지비
2001	619	2,643	-2,024	3,262	0.23
2002	638	2,721	-2,083	3,360	0.23
2003	816	3,236	-2,420	4,053	0.25
2004	1,416	4,147	-2,731	5,564	0.34
2005	1,625	4,525	-2,900	6,150	0.36
2006	1,897	4,838	-2,941	6,734	0.39
2007	2,178	5,103	-2,925	7,282	0.43
2008	2,530	5,670	-3,140	8,200	0.45
2009	3,582	8,438	-4,856	12,020	0.42

주: 기술무역수지비 = 기술수출/기술도입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 2010. 12.

2. 산업 · 중소기업 · 에너지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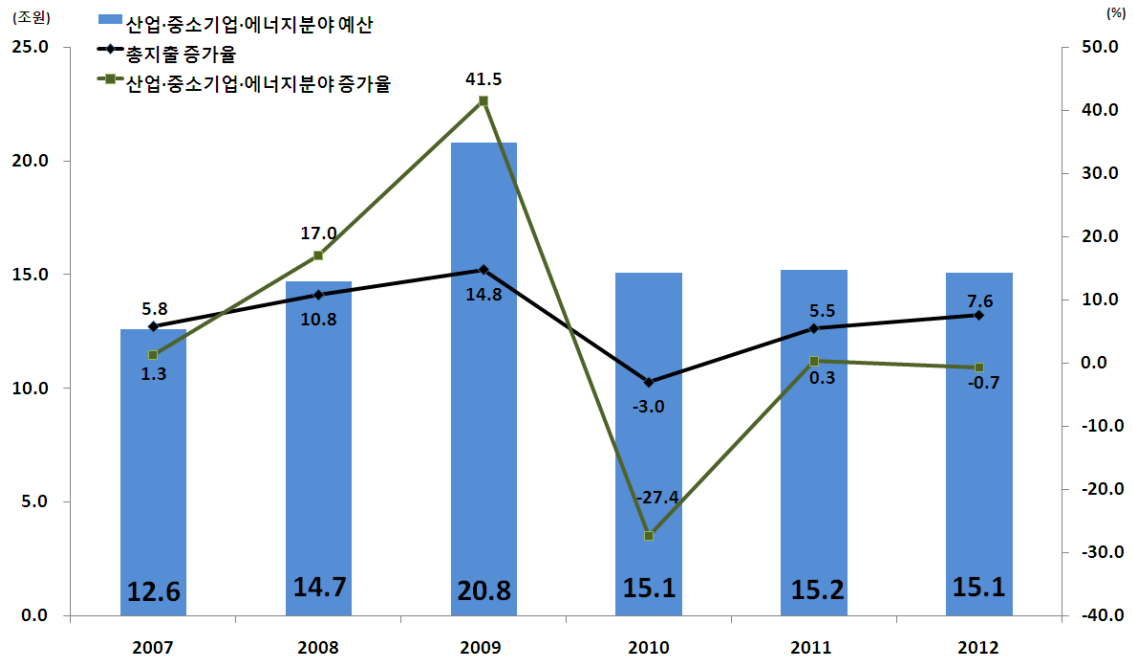
가. 예산요구 현황

2012년도 예산요구안에 따른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지출규모는 2011년 예산(15.2조원) 대비 0.1조원(△0.7%) 감소한 15.1조원이다. 이는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계획된 15.5조원 대비 0.4조원 축소된 규모로 2010년(15.1조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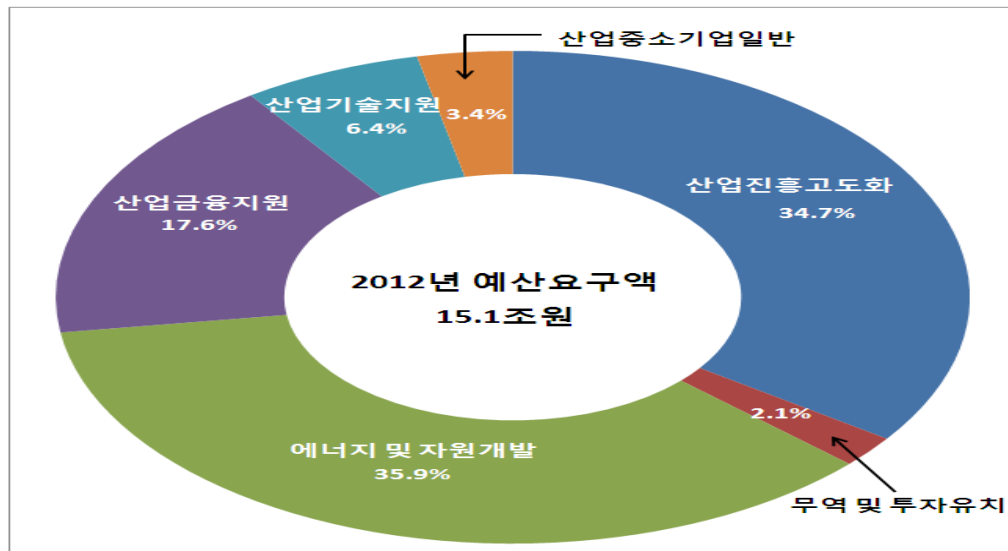
동 분야는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등의 산업진흥고도화, 에너지·자원개발, 무역 및 투자유치, 산업금융·기술지원 관련 사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에너지 및 자원개발(5.4조원)과 산업진흥고도화(5.2조원) 예산이 전체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 등에 따라 2009년에 지출 규모가 전년대비 41.5% 급증한 20.8조원(총지출의 6.9%)까지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 다시 15.1조원으로 줄어든 이후 해당 규모가 이번 요구안까지 유지되면서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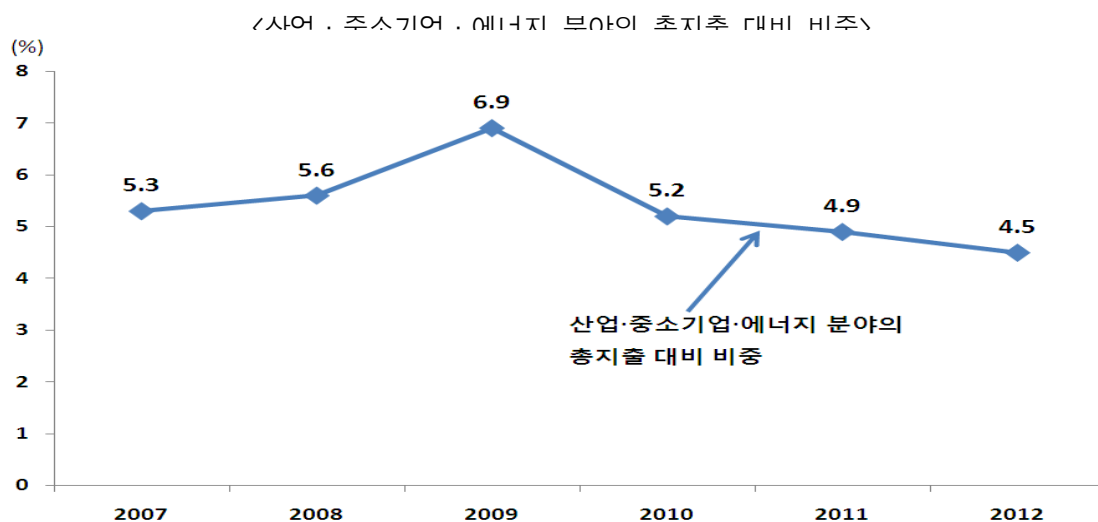
〈부문별 구성 내역〉



나. 예산요구의 특징

2012년도 예산요구 규모가 총지출 기준으로 2011년 대비 7.6%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요구액은 오히려 0.7%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6.9%에서 2010년 5.2%, 2011년 4.9%, 2012년 4.5%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한정된 재정여건 하에서 복지지출과 지방교부세 등 의무지출 성격의 재정지출이 증가하면서(2009년 총지출의 39.6% → 2011년 44.6%) 상대적으로 재량지출이 대부분인 동 분야 지출 비중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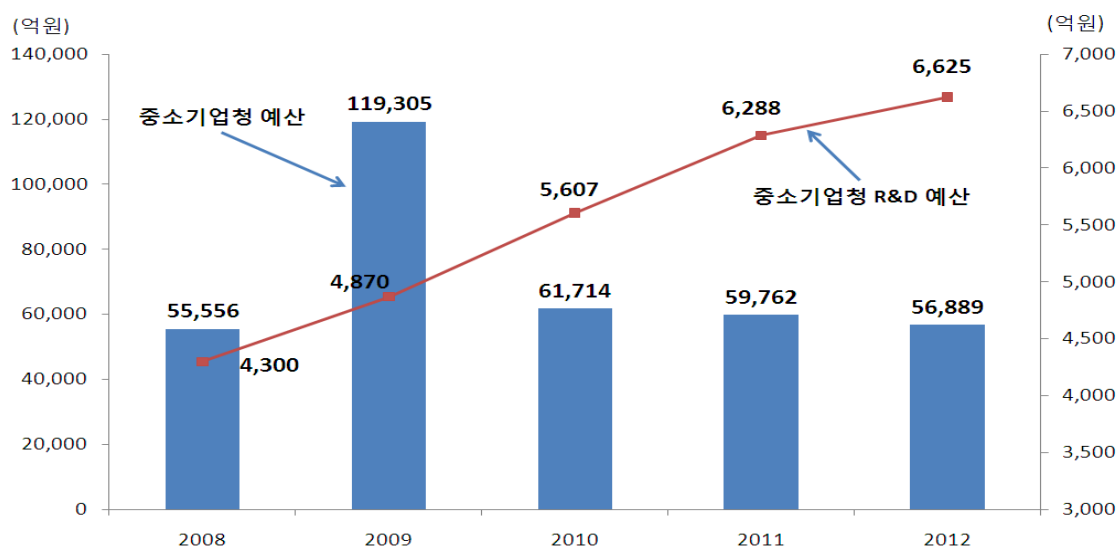
2009년의 지출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적 충격에 대응하여 중소기업 금융지원 강화 등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재정투입이었다는 점, 최근 미국·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라 재정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지출 규모가 축소·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과 지방기업 등 경제 회복의 성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문과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는 기술개발 및 에너지·자원개발 투자 등이 과도하게 축소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해당 부문에 대한 적정 수준의 지출규모 유지 및 재정지출의 효과성 제고 노력도 동시에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2012년 예산요구안을 살펴보면, 무역 및 투자유치 부문 지출이 2011년 4,491억원에서 3,144억원으로 △30.0% 감소하고 있고, 지역특성화 산업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도 2011년 2,087억원에서 1,505억원으로 △27.9% 감액 요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수출중소기업과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우려가 존재한다. 반면, 국내외 자원개발 예산은 2011년 1조 2,359억원에서 1조 4,421억원으로 2,062억원(16.7%) 증액 요구되었는데 대부분이 출자 등 공공기관 지원예산에 집중되고 있어 해당 공공기관의 자원개발 성과 및 추가 출자규모의 타당성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확대된 중소기업 보증지원 및 정책자금의 위기 이전 수준으로 축소됨에 따라 중소기업청 소관 예산이 감액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전용 R&D 예산(중소기업청 소관)은 1997년 300억원을 시작으로 2010년 5,607억원, 2011년 6,288억원(전년 대비 12% 증가), 2012년 요구안 6,625억원(전년 대비 5.4% 증가)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소기업 R&D 지원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수준 및 생산성은 정체되고 있으며,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공률도 2007년 41.0%, 2008년 41.6%, 2009년 41.4%, 2010년 42.8% 등에 머물고 있는 등 예산의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양적 확대보다는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 R&D 예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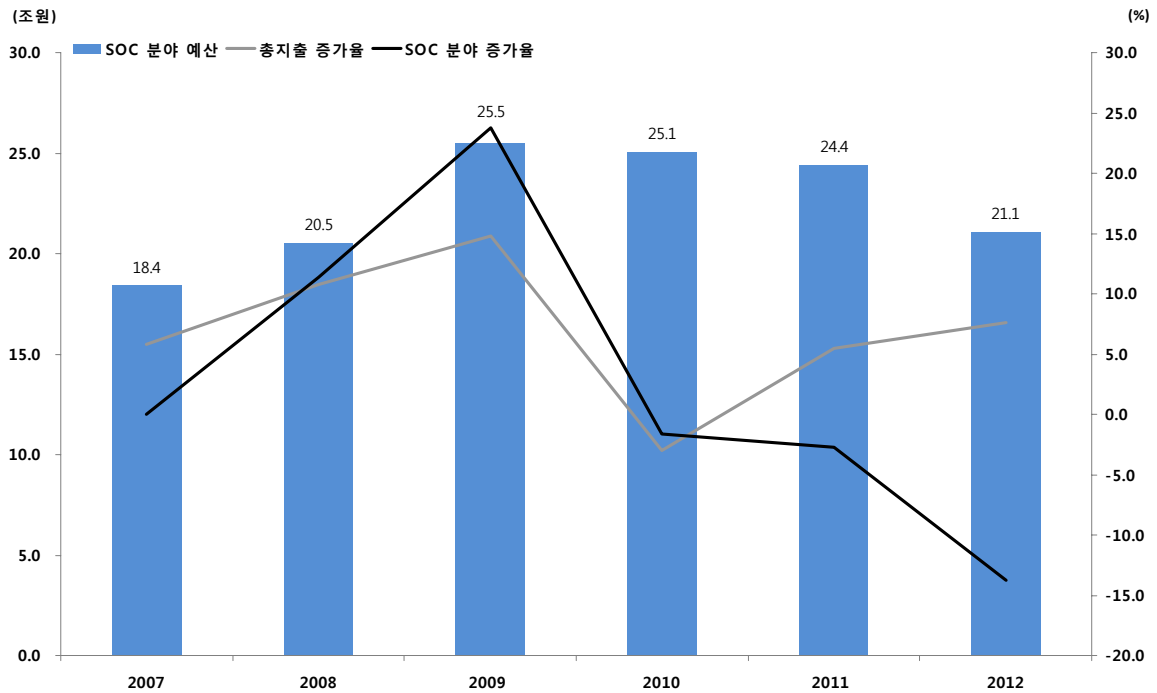


3. SOC 분야

가. 예산요구 현황

2012년도 SOC 분야 예산요구액은 21.1조원으로 2011년 대비 3.4조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2012년 전체 분야별(12개) 예산 중 SOC 분야 예산의 2011년 대비 감소 폭이 △13.8%로 가장 크다.

〈SOC 분야 예산 추이〉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SOC 분야 예산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7.8%에서 8.6%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1년부터 다시 감소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총지출 대비 6.3%로 낮아지고 있다.

〈SOC 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요구안
SOC 재정규모(A)	20.5	25.5	25.1	24.4	21.1
총지출(B)	262.8	301.8	292.8	309.1	332.6
총지출 대비 비중(A/B)	7.8	8.4	8.6	7.9	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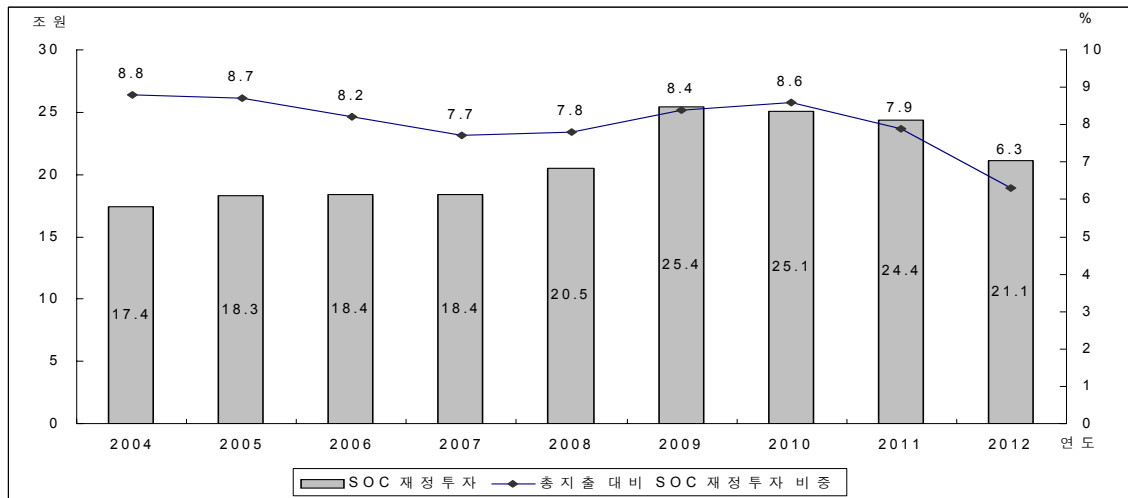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함

2012년 SOC 분야 예산요구액 규모 21.1조원은 작년에 발표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2년도 SOC 분야 예산규모액 보다 1.3조원 감소하였고, 총지출 대비 분야 비중도 0.6%p 낮은 것으로서, SOC 분야에 대한 투자규모가 당초 계획보다도 더 축소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예산요구의 특징

SOC 분야 재정규모는 2009년까지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2010년 이후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총지출 대비 SOC 재정투자 비중은 1990년대 9.8~17.1%¹¹⁾ 수준이었으나 2000년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08년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였으나 2010년을 정점으로 다시 하락하고 있다. 2012년 SOC 분야 예산요구액은 총지출의 6.3% 수준이다.

〈연도별 SOC 분야 재정규모: 2004~2012년〉



자료: 기획재정부 제공 자료를 기초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재구성

SOC 분야는 1980년대 이후 산업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 국가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등 SOC 시설이 선진국 대비 일정 수준에 도달하였고, 복지 분야 등 타 분야 재정소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총지출 대비 투자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부문별 SOC 스톡 추이〉

	2000(A)	2002	2004	2006	2009(B)	B/A
도로연장(천km)	88.8	96.0	100.3	104.2	105.0	1.18
고속도로연장(km)	2,131.2	2,778.1	2,923.0	3,102.6	3,376.0	1.77
철도연장(km)	3,123.0	3,129.0	3,374.1	3,392.0	3,377.9	1.08
항만하역능력(백만톤)	430.4	486.5	523.5	682.3	793.0	1.84

자료: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기획재정부

11) 이는 일반회계 대비 SOC 지출 비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대한민국정부, 2006.10)을 참조.

〈국토면적당 도로연장(2009년 기준)〉

(단위: km/km²)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국토면적당 도로연장	1.05	0.68	1.72	1.73	1.62	0.65

자료: 국토해양부, 「2010 도로업무편람」, 2010

〈우리나라의 도로·철도 시설의 OECD 및 G-20 순위 분석〉

			국가 중 순위	비고
도 로	OECD회원국	국토면적당 총 도로연장	16	30개국
		국토면적당 고속도로연장	5	
		국토면적당 국도연장	8	
		국토면적당 지방도연장	17	
	G-20국가	국토면적당 총 도로연장	5	20개국
		국토면적당 고속도로연장	1	
		국토면적당 국도연장	3	
		국토면적당 지방도연장	6	
철 도	OECD회원국	국토면적당 총 철도연장	16	30개국
		국토면적당 복선연장	15	
	G-20국가	국토면적당 총 철도연장	6	20개국
		국토면적당 복선연장	6	

자료: 기획재정부, 「2010~2014 국가재정운용계획」, 2010

다만, 2009년도에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 전략에 따라 건설투자가 확대되면서 그 규모가 일시적으로 증가하였고, 2010년도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되면서 추세를 거슬러 전년도와 유사한 규모를 유지하였다. 2012년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마무리 되는 등 이와 같은 특수한 요인들이 사라지면서 그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2012년 SOC 분야 예산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철도, 항공·공항, 지역 및 도시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되었으며, 이 중 2011년 예산 대비 감액 규모가 큰 부문은 수자원 부문과 도로부문으로 각각 전년 대비 2조 5,589억원(△51.0%), 6,436억원(△8.9%)이 감액되었고, 철도 부문과 항공 부문은 각각 전년 대비 3,488억원(7.9%), 47억원(6.9%)이 증액되었다.

〈2012년 SOC 부문별 예산요구 현황〉

(단위: 조원, %)

	2011 예산(A)	2012 예산요구액(B)	증감액(B-A)	증감률(B-A)/A
SOC 분야	24.4	21.1	-3.4	-13.8
국토해양부 소관	23.1(100)	19.9(100)	-3.3	-14.3
- 도로	7.2(31.2)	6.6(33.2)	-0.6	-8.9
- 철도	4.4(19.0)	4.8(24.1)	0.3	7.9
- 도시철도	1.0(4.3)	0.9(4.5)	-0.1	-4.8
- 해운·항만	1.6(6.9)	1.5(7.5)	-0.1	-7.1
- 항공·공항	0.07(0.3)	0.07(0.4)	0.005	6.9
- 물류 등 기타	1.9(8.2)	1.7(8.5)	-0.2	-10.0
- 수자원	5.0(21.6)	2.5(12.6)	-2.6	-51.0
- 지역 및 도시	0.9(3.9)	0.9(4.5)	0.006	0.6
- 산업단지	1.0(4.3)	0.9(4.5)	-0.1	-12.1

주: SOC 예산은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이 대부분이며, 이외에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5개 부처의 사업들로 구성되나 부문별 예산규모는 국토해양부 소관 예산 및 예산요구액임

자료: 국토해양부, 「2012회계연도 예산요구안 개요」, 2011. 7.

SOC 분야 총 예산에서 각 부문별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수자원의 비중이 크게 감소(2011 21.6% → 2012 12.6%)한 반면, 철도가 크게 증가(2011 19.0% → 2012 24.1%)하였고, 나머지 부분들도 전년 대비 그 비중이 늘어났다. 이는 2011년에 큰 규모로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2012년도에 종료되면서 수자원 부문 예산투입이 전년대비 큰 폭(2.5조원)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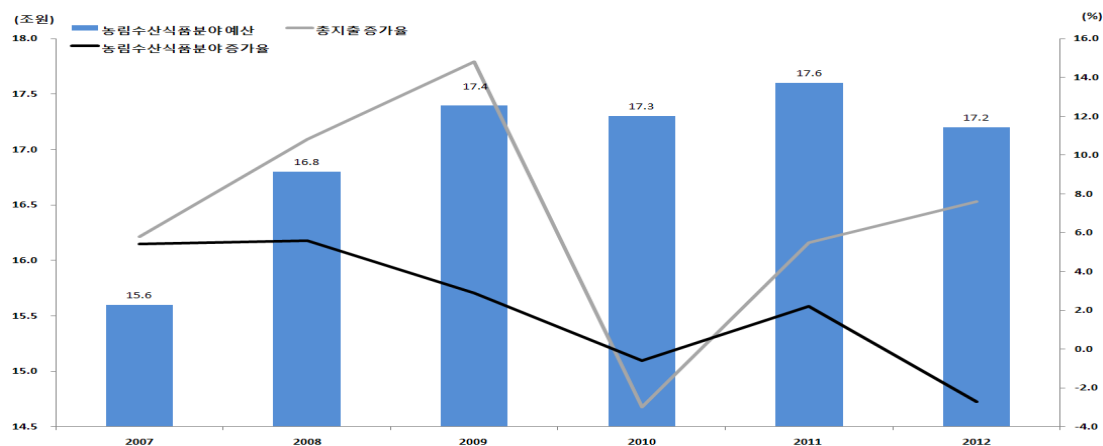
4. 농림수산물식품 분야

가. 예산요구 현황

2012년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예산(요구액)은 17.2조원으로 2011년 대비 0.4조원(2.3%) 감소한 규모이며, 총지출 대비 비중도 전년 대비 0.5%p 감소하였다.

2012년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예산요구액 규모 17.2조원은 작년에 발표한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2012년도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예산규모액보다 1.0조원 감소한 것으로서,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재정규모가 억제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억제 기조에 따라 총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축소되어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비중보다 0.3%p 감소되었다.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예산 추이〉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

한편, 그간 농업투자의 결과로 쌀 자급과 기본 인프라 구축은 어느 정도 달성하였으나, 쌀 이외의 생산, 경쟁력, 소득 관련 모든 지표는 뚜렷한 하향추세에 있다. 쌀은 초과 공급상태이나 기타 곡물의 자급률은 저조한 상태에 있다. 규모화·전문화된 농어가 증가 등에 따라 생산성은 향상되고 있으나, 농산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도농간 소득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수출증가보다 수입증가가 더 커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성과	한계
쌀 자급률: (1980) 95.1% → (2010) 104.6%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 (2005) 29.4% → (2010) 26.7%
대구획 경지정리율 (2000) 42.8% → (2010) 68.5%	농가소득/도시근로자가구소득 (1998) 80.1% → (2009) 66.0%
벼농사 기계화율 (1998) 85.5% → (2010) 90.5%	농림수산물 무역적자 (1980) 12.3억 달러 → (2008) 188.0억 달러
산지유통센터 (1999) 160개소 → (2009) 299개소	농가소득/도시근로자가구소득 (1998) 80.1% → (2009) 66.0%

자료: 농림수산물식품부 통계자료

나. 예산요구의 특징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요구의 특징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전체 총지출 증가율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2012년에는 전년 대비 0.4조원 감소되었다. 또한 총지출 대비 비중도 2005년 6.6%에서 2009년 5.8%, 2011년 5.7%, 2012년 5.2%로 감소되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규모의 추이: 2005~2012년〉

(단위: 조원, %)

	국가전체 총지출(A)	농림수산식품분야 총지출(B)	비중(B/A)
2005	209.6 (-)	13.8 (-)	6.6
2006	224.1 (6.9)	14.8 (7.3)	6.6
2007	238.4 (6.4)	15.6 (5.4)	6.5
2008	262.8 (10.8)	16.8 (2.6)	6.4
2009	301.8 (14.8)	17.4 (2.9)	5.8
2010	292.8 (-3.0)	17.3 (-0.6)	5.9
2011	309.1 (5.5)	17.6 (2.2)	5.7
2012 요구안	332.6 (7.6)	17.2 (-2.7)	5.2

주: ()안은 전년 대비 증가율임

자료: 농림수산식품부

둘째, 농가소득·경영안정, 농촌개발·복지증진 부문의 예산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농업생산기반확충을 위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다. 농업·농촌 부문의 세부부문의 추이를 보면, 농가소득·경영안정 세부부문의 예산은 2009년 2조 6,811억원에서 2012년 2조 494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촌개발·복지증진 부문의 예산도 2009년 1조 7,485억원에서 2012년 1조 6,17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반면, 농업생산기반조성 부문의 예산은 2009년 2조 1,640억원에서 2012년 3조 1,991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업용저수지 뚝높이기, 영산강하구둑 구조개선, 새만금개발사업 등 국책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농업·농촌 세부부문별 예산 추이: 2009~2012년〉

(단위: 억원, %)

	2009	2010	2011	2012 요구안
농림수산물부 총지출	146,363	146,738	148,644	164,896
농업·농촌 부문	123,240	120,808	122,750	134,862
농업체질강화	24,950	23,026	23,386	30,205
농가소득·경영안정	26,811	25,702	24,763	20,494
농촌개발·복지증진	17,485	16,994	16,536	16,177
양곡관리·농산물유통	32,354	31,482	31,725	35,995
농업생산기반조성	21,640	23,603	26,342	31,991

자료: 농림수산물부

셋째, 쌀 수급 관련 예산의 비중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쌀소득보전변동직불금 예산이 2011년 7,993억원에서 2012년 1,867억원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나, 쌀 수급 관련 예산은 2조 5,887억원으로서 농림수산물부 예산의 15.7%를 차지하고 있다.

〈쌀 수급 관련 예산 추이: 2009~2012년〉

(단위: 억원, %, 만톤)

	2009	2010	2011	2012 요구안
농림수산물부 총지출(A)	146,363	146,738	148,644	164,896
쌀 수급 관련 예산(B)	20,261	27,198	30,239	25,887
비중(B/A)	13.8	15.8	20.3	15.7
재고량	99	151	-	-
재고율	20.5	30.7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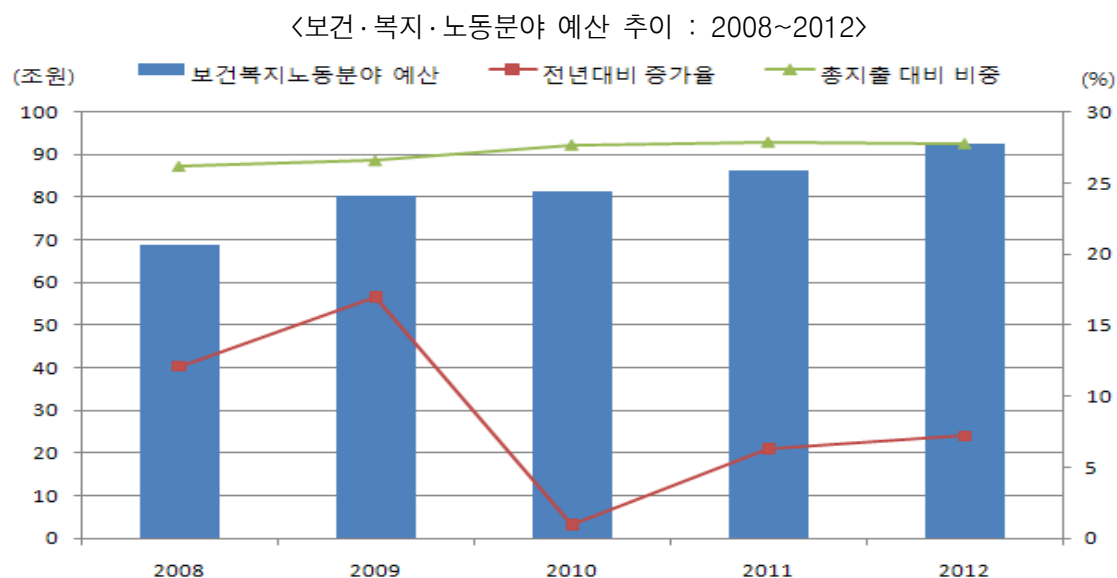
자료: 농림수산물부

반면, 쌀 재고량은 2009년 99만톤에서 2010년 151만톤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적정 재고량 72만톤의 2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쌀 재고율도 2009년 20.5%에서 2010년 30.7%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적정 재고율 16~17%에 비해 크게 높은 수치이다. 쌀 수급과 관련하여 해마다 적지않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량 및 재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재정투입의 효과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5. 보건·복지·노동 분야

가. 예산요구 현황

2012년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요구액은 92.6조원으로 2011년의 86.4조원 대비 7.2%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7.6%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정부 총지출 중에서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7.8%로 전년 대비 0.1%p가 감소한 수준이며, 2010년에 전년 대비 1.1%p라는 큰 폭의 점유율 증가를 보인 이후 3년째 27.7%~27.9%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인 6.1%에 비해 1.3배 가량 높다.



자료: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노동분야 자원배분 추이〉

(단위: 조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요구안	연평균 증가율
보건·복지·노동분야	68.8 (12.1) [26.2]	80.4 (17.0) [26.6]	81.2 (1.0) [27.7]	86.4 (6.3) [27.9]	92.6 (7.2) [27.8]	7.7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2.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2012년 사회복지분야(복지분야+노동분야) 예산요구액은 83.8조원으로 2011년 78.9조원 대비 6.3%가 증가하였다. 보건분야 예산은 8.8조원으로 2011년 7.5조원 대비 17.3%가 증가하여, 전체 보건·복지·노동분야의 예산 증가율 7.2%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보건·복지·노동분야 세부 분야별 자원배분 추이〉

(단위: 조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요구안	연평균 증가율
보건·복지·노동분야	68.8	80.4 (17.0)	81.2 (1.0)	86.4 (6.3)	92.6 (7.2)	7.7
사회복지 (복지·노동)	62.9	73.4 (16.7)	73.9 (0.7)	78.9 (6.8)	83.8 (6.3)	7.4
보 건	5.9	7.0 (18.6)	7.3 (4.3)	7.5 (2.7)	8.8 (17.3)	10.5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자료: 기획재정부

2012년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이 2008년에 비해 23.8조원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이 7.7%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지표를 통해 본 우리나라의 복지 현실은 안심할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5%(2010년 기준)로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OECD 평균 노인빈곤율 13.3%에 비하여 3배 이상 높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2008년 51.3%, 2009년 51.9%로 정체되어 있으며, 국민연금은 2010년 총 가입자의 27%인 510만명이 보험료 납부예외자로 남아있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나. 예산요구의 특징

의무지출사업 규모 증가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육료 지원, 4대 공적연금 지원, 건강보험 지원 등 의무지출사업 예산이 2012년에 59.3조원 요구되어 2011년의 53.8조원 대비 10.2%가 증가하였다. 2012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대규모의 복지 예산사업은 없고 계속 사업 또한 기존 내용에서 크게 변화된 바가 없음을 고려하면, 의무지출의 고유의 특성에 의한 자동적 증가분에 주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보건분야 예산 증가율의 사회복지분야 상회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 중 보건분야의 2012년 예산은 8.8조원으로 2011년 예산 7.5조원 대비 1.3조원 증가하였다. 보건분야 예산 증가율은 17.0%로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 증가율 6.3%의 2.7배에 해당한다. 보건분야 중에서는 보건의료부문 예산이 2011년 1.6조원에 비해 4,433억원 늘어난 2.0조원을 편성하여 증가율이 28.4%에 이르고 있다.

〈2012년 보건분야 부문별 예산〉

(단위: 억원)

	2011 예산(a)	2012년 요구안(b)	2011년 대비	
			b-a	%
보 건	75,000	87,775	12,775	17.0
보건의료	15,599	20,032	4,433	28.4
건강보험	57,102	65,376	8,274	14.5
식품의약품안전	2,299	2,368	69	3.0
사회복지 (복지·노동)	788,926	838,684	49,758	6.3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예산의 증가

보육예산은 매년 정부총지출 및 보건·복지·노동분야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다.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만 5세아 보육료지원을 부담하기로 함에 따라 872억원(2011년 1,012억원 → 2012년 139억원)이 감액편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총지출 증가율 7.6%, 보건·복지·노동분야 증가율 7.2%보다 높은 13.8%를 나타내고 있다.

〈보육예산: 2008~2012〉

(단위: 조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요구안
보육예산 (증가율)	1.5 (32.1)	1.7 (16.5)	2.1 (24.4)	2.5 (16.5)	2.8 (13.8)

자료: 보건복지부

구직급여를 중심으로 노동부문 예산 감소

2012년 노동부문 예산(요구액)은 12조 2,210억원으로 전년 대비 3.1%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 추세에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용되는 의무지출인 구직급여가 2,679억원(7.9%)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6. 교육 분야

가. 예산요구 현황

교육분야 예산요구액은 45.7조원으로 2011년에 비하여 4.5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10.9%p 증가한 것으로 각 부처가 요구한 2012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 증가율(7.6%)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교육 분야 지출은 정부 총지출 대비 12.8~13.3%였으나, 2012년 요구안의 경우 13.7%로 비중이 다소 높아졌다.

〈교육분야 예산 추이〉



〈교육분야 예산 추이〉

(단위: 조원, %)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요구안
교육 분야	26.3 (6.9) [13.3]	27.7 (5.3) [13.2]	28.8 (7.3) [12.9]	30.7 (6.5) [12.9]	36.2 (17.8) [13.0]	40.5 (11.9) [12.8]	38.5 (-5.1) [12.9]	41.2 (6.4) [13.3]	45.7 (10.9) [13.7]

교육분야 예산요구 증가액(4.5조원) 중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배정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액(3.7조원)이 포함되어 있다. 교육분야 예산요구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요구액(39.2조원)의 99.5%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39조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2012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할 예정으로 사실상 의무교육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등교육 부문 요구액은 전년 대비 7,695억원 증가하여 2011년 예산 대비 증가율이 15.5%에 이른다. 고등교육 부문은 2009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2012년 요구안에서 증가세로 돌아섰는데, 대학교육 역량강화사업, 지방대학 경쟁력 기반확충사업 등이 전년대비 크게 증액되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 요구액은 2011년 예산 대비 2.4% 감소하였는데, 동 부문은 다른 부문에 비해 금액은 크지 않지만 최근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12년 요구안에서는 전년 대비 금액 및 교육비 총액 대비 비중 모두 감소하였다.

〈교육 분야 부문별 자원배분 추이〉

(단위: 억원, %)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요구안
유아 및 초· 중등	248,958 (4.2) <86.3>	266,438 (7.0) <86.7>	310,247 (16.4) <85.7>	332,139 (7.1) <81.9>	325,528 (-2.0) <84.6>	354,823 (9.0) <86.0>	392,004 (10.5) <85.7>
고등	35,027 (3.0) <12.1>	36,289 (3.6) <11.8>	46,845 (29.1) <12.9>	66,750 (42.5) <16.5>	52,684 (-21.1) <13.7>	49,724 (-5.6) <12.1>	57,419 (15.5) <12.6>
평생· 직업	3,038 (-) <1.1>	2,976 (-2.0) <1.0>	3,795 (27.5) <1.0>	5,266 (38.8) <1.3>	5,379 (2.1) <1.4>	6,514 (21.1) <1.6>	6,357 (-2.4) <1.4>
교육 일반	1,433 (-) <0.5>	1,489 (4.0) <0.5>	1,114 (-25.2) <0.3>	1,101 (-1.2) <0.3>	1,136 (3.2) <0.3>	1,254 (10.4) <0.3>	1,358 (8.3) <0.3>

주: 1. ()는 전년대비 증가율

2. < >는 교육분야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2006~2010 결산보고서, 2011~2012 기획재정부 및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요구안 개요

〈고등교육 부문 주요 증액사업〉

(단위: 백만원, %)

회계	사업명	2011 예산	2012 요구안	증감	
				-	%
일반	대학교육 역량 강화	87,000	144,557	57,557	66.2
	국립대학 자원관리 선진화 시스템	1,000	41,645	40,645	4,064.5
광특	지방대학 경쟁력 기반 확충	251,060	334,468	83,408	33.2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	132,500	230,000	97,500	73.6
	산학협력력 활성화 지원	24,300	35,100	10,800	44.4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	8,000	50,000	42,000	525.0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11. 8

최근 대학 등록금의 적정 수준 및 정부 지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2012년 요구액은 전년대비 18.9% 증액되었다.

〈대학 학자금 지원 관련 사업〉

(단위: 백만원, %)

회계	사업명	2011 예산	2012 요구안	증감	
				-	%
일반	저소득층 장학금	331,250	339,390	8,140	2.5
	대학생 근로장학금	81,000	81,000	-	0.0
	우수학생 국가장학	109,520	96,435	-13,085	-11.9
	한국장학재단 출연	191,823	331,711	139,888	72.9
	(ICL 채권 대납이자)	111,683	147,529	35,846	32.1
	(학자금 대출 이차지원)	84,362	155,625	71,263	84.5
합 계		713,593	848,536	134,943	18.9

주: 1. ICL(Income Contingent Loan)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한국장학재단이 채권을 발행하여 ICL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자를 지원함

2. 학자금 대출 이차지원은 저소득층, 현역사병 등에 대한 학자금 대출 이차를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2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 2011. 8

나. 교육 분야 재정투자의 국제비교

GDP 대비 교육비 비율을 비교한 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교육비는 GDP의 7.0%로 주요국에 비하여 낮지 않은 수준이다. 비교 대상국 중 GDP 대비 교육비 비율이 높은 나라는 미국(7.6%), 러시아(7.4%)이며, GDP 대비 초중등교육 교육비 비율이 우리나라(4.0%)보다 같거나 높은 나라는 영국(4.2%)과 미국(4.0%)으로 조사되었다. 초중등교육에 대한 정부부담이 우리나라(3.1%)보다 같거나 높은 나라는 영국(4.1%), 미국(3.7%), 프랑스(3.7%), 러시아(3.4%), 캐나다(3.1%)이며, 우리나라는 OECD 평균(3.3%)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GDP 대비 고등교육 교육비 비율이 우리나라(2.4%)보다 높은 나라는 미국(3.1%), 캐나다(2.6%)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나라의 정부부담은 1.0~1.5%로 우리나라의 정부부담(0.6%)보다 높게 나타났다. GDP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민간부담은 우리나라가 1.9%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미국(2.1%) 보다 낮고 캐나다(1.1%)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요국의 GDP 대비 교육비 비율〉

(단위: %)

	전체 교육단계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계	정부 부담	민간 부담
미국	7.6	5.0	2.6	4.0	3.7	0.3	3.1	1.0	2.1
러시아	7.4	6.1	1.3	3.5	3.4	0.1	1.7	1.0	0.7
한국	7.0	4.2	2.8	4.0	3.1	0.8	2.4	0.6	1.9
캐나다	6.1	4.6	1.5	3.5	3.1	0.4	2.6	1.5	1.1
프랑스	6.0	5.5	0.4	3.9	3.7	0.2	1.4	1.2	0.2
영국	5.8	5.2	0.6	4.2	4.1	0.1	1.3	0.7	0.6
OECD 평균	5.7	4.8	0.9	3.6	3.3	0.3	1.5	1.0	0.5
일본	4.9	3.3	1.6	2.8	2.5	0.3	1.5	0.5	1.0
독일	4.7	4.0	0.7	3.0	2.6	0.4	1.1	0.9	0.2
이탈리아	4.5	4.1	0.4	3.1	3.0	0.1	0.9	0.6	0.3

주: 2007년 기준이며, 캐나다는 2006년 기준임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10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2010. 12

IMD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육경쟁력은 국가경쟁력이나 과학 및 기술경쟁력에 비하여 낮은 상황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조사대상국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다. 또한, OECD 발표에 따르면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나 교육 환경 관련 지표는 OECD 평균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IMD 경쟁력 순위〉

평가 연도 (평가 대상국 수)	2005 (51)	2006 (53)	2007 (55)	2008 (55)	2009 (57)	2010 (58)	2011 (59)
국가 경쟁력 순위	27	32	29	31	27	23	22
- 교육 경쟁력 순위	34	37	29	35	36	35	29
- 과학 경쟁력 순위	13	10	7	5	3	4	5
- 기술 경쟁력 순위	2	6	6	14	14	18	14

자료: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공개토론회

〈평가지표별 IMD 교육경쟁력 순위〉

평가 지표 (평가 대상국 수)	2005 (60)	2009 (57)	2010 (58)	2011 (59)
1. GDP 대비 교육관련 공공지출	46	36	36	33
2. 1인당 교육관련 공공지출	-	27	29	32
3. 초등교육 교사 1인당 학생 수	54	51	51	51
4. 중등교육 교사 1인당 학생 수	45	50	51	53

자료: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 분야 공개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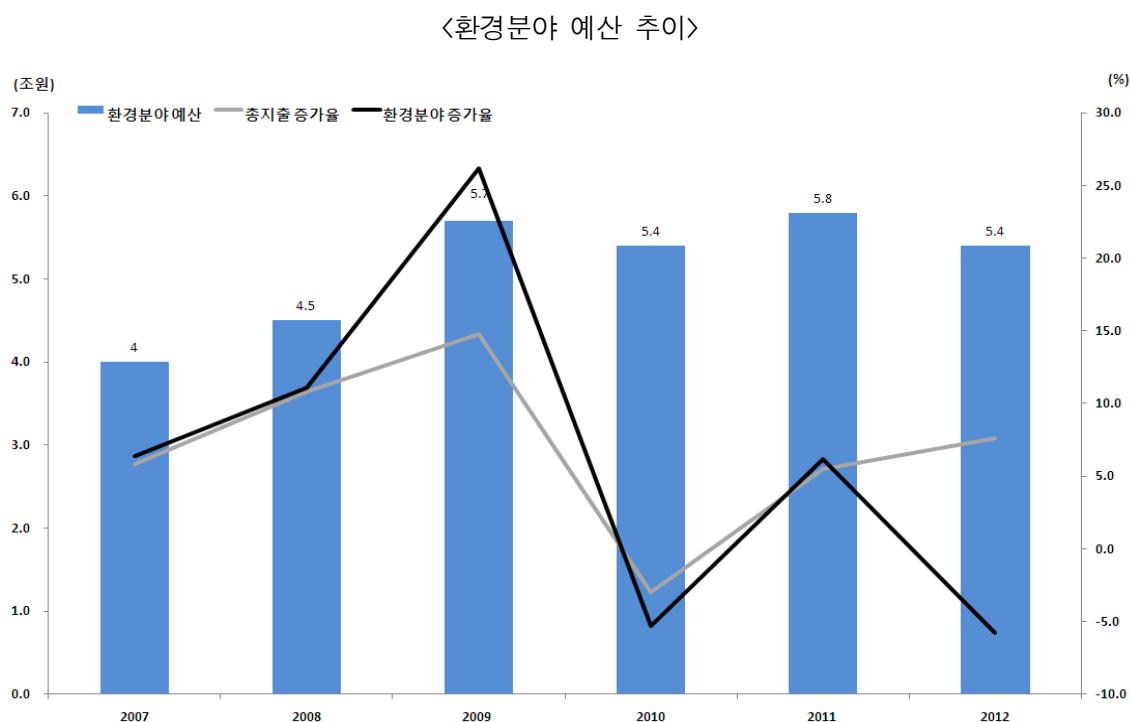
〈OECD 교육지표 비교〉

			2008	2009	2010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전체	한국	4.3	4.5	4.2
		OECD 평균	5.0	4.9	4.8
	초·중등교육	한국	3.4	3.4	3.1
		OECD 평균	3.5	3.4	3.3
	고등교육	한국	0.6	0.6	0.6
		OECD 평균	1.1	1.0	1.0
학급당 학생 수	초등학교	한국	31.6	31.0	30.0
		OECD 평균	21.5	21.4	21.6
	중학교	한국	35.8	35.6	35.3
		OECD 평균	24.0	23.9	23.9
교사 1인당 학생 수	초등학교	한국	26.7	25.6	24.1
		OECD 평균	16.2	16.0	16.4
	중학교	한국	20.8	20.5	20.2
		OECD 평균	13.3	13.2	13.7
	고등학교	한국	15.9	16.2	16.5
		OECD 평균	12.6	12.5	13.5

7. 환경 분야

가. 예산요구 현황

2012년 환경 분야 예산요구액은 5.4조원으로 2011년 대비 5.8% 감소하여 정부 총지출 중 1.6%를 차지한다. 환경 분야 예산이 감소한 것은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확충 예산이 축소되었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자료: 대한민국 재정 각 연도별 자료 및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환경 분야 자원배분 추이〉

(단위: 조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요구안
환경 분야	4.5 (11.1) [1.7]	5.7 (26.2) [1.9]	5.4 (-5.3) [1.8]	5.8 (6.2) [1.9]	5.4 (-5.8) [1.6]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2.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환경부(2011)

나. 예산요구의 특징

대형사업 예산 축소를 통한 자연보전 사업과 환경산업 수출 지원사업 확대

환경 분야의 2012년 재원배분의 특징은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 부문에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 위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되, 4대강 수질개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의 예산을 일부 축소(△1,700억원)한 것이다. 반면, 자연보전 부문 및 환경산업 수출 지원 부문의 예산을 확대하여 부문간 재원을 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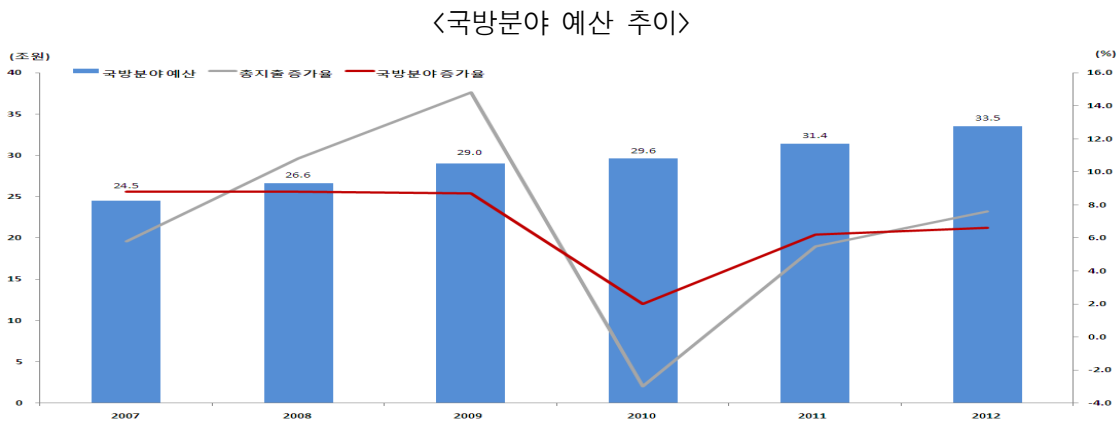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 부문 중심의 재원 편성 지속

기존의 상하수도 및 수질개선 부문을 중심으로 하는 부문별 예산편성 방향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신규 사업액의 92.3%가 상하수도 및 수질 개선 사업에 투입되고 있으며, 하수관거정비BTL사업 임대료 지급 예산이 가장 크게 증액되는 등 상하수도 중심의 사업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8. 국방 분야

가. 예산요구 현황

국방 분야 일반회계 2012년도 예산요구액은 33.5조원으로 2011년 대비 6.6% 증가하였으며, 2012년도 정부 총지출에서 국방 분야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1% 수준이다. 2012년도 국방 분야 예산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 7.6%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2007년 이후 정부 총지출 증가율과 국방비 증가율을 비교하면, 2008년과 2009년에는 총지출 증가율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낮았고, 2007년, 2010년, 2011년에는 총지출 증가율보다 국방비 증가율이 높았다.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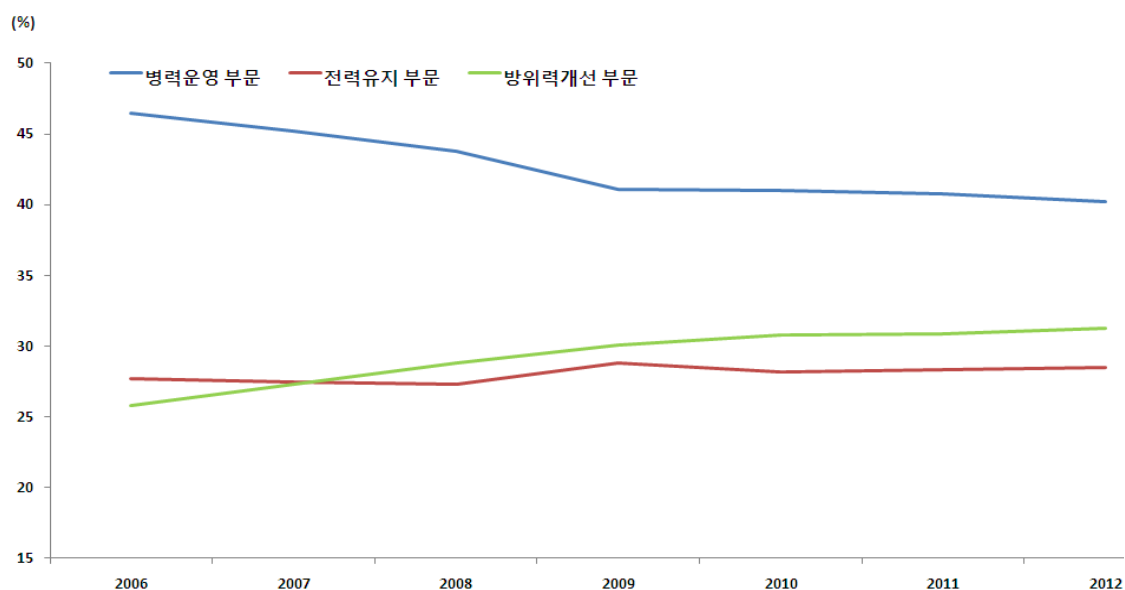
국방분야 일반회계는 병력운영 부문, 전력유지 부문, 방위력개선 부문으로 구성된다. 병력운영 부문은 국방 인건비, 급식, 피복예산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구성되고, 전력유지 부문은 군수, 시설, 교육훈련예산 등으로 이루어지며, 방위력개선 부문은 무기체계 획득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구성된다. 2006년 이후 국방 분야의 각 부문이 국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병력운영 부문은 46.5%에서 40.2%로 그 비중이 감소하였고, 방위력개선 부문은 25.8%에서 31.3%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국방 분야 내부에서는 방위력개선 부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전력유지 부문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그 비중이 소폭 증가하였다.

〈국방분야 부문별 예산 추이〉

(단위: 억원, %)

	병력운영		전력유지		방위력개선	
	예산	전년대비 증가율	예산	전년대비 증가율	예산	전년대비 증가율
2007	110,830	5.8	67,335	8.1	66,807	15.0
2008	116,816	5.4	72,861	8.2	76,813	15.0
2009	119,133	2.0	83,530	14.6	87,140	13.4
2010	121,204	1.7	83,393	-0.2	91,030	4.5
2011	128,186	5.8	88,910	6.6	96,935	6.5
2012 요구안	134,642	5.0	95,480	7.4	104,666	8.0

〈국방분야 부문별 예산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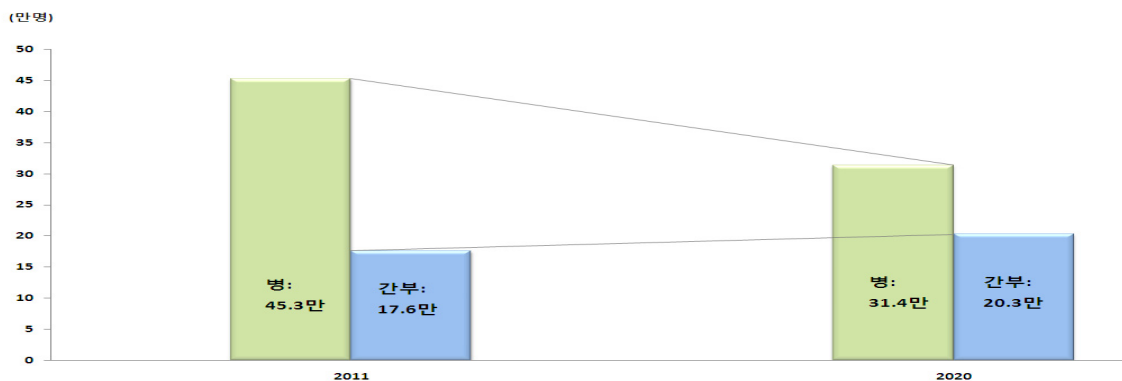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나. 예산요구안의 특징

병력운영 부문은 간부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인건비 증가 소요가 발생하고 있다. 2012년에는 장교와 부사관 2,913명 증원을 위하여 838억원의 군인 인건비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전체 병력규모는 축소되지만 간부 규모는 증가할 계획이므로, 향후 국방 인건비 소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국방 인건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국방예산의 경직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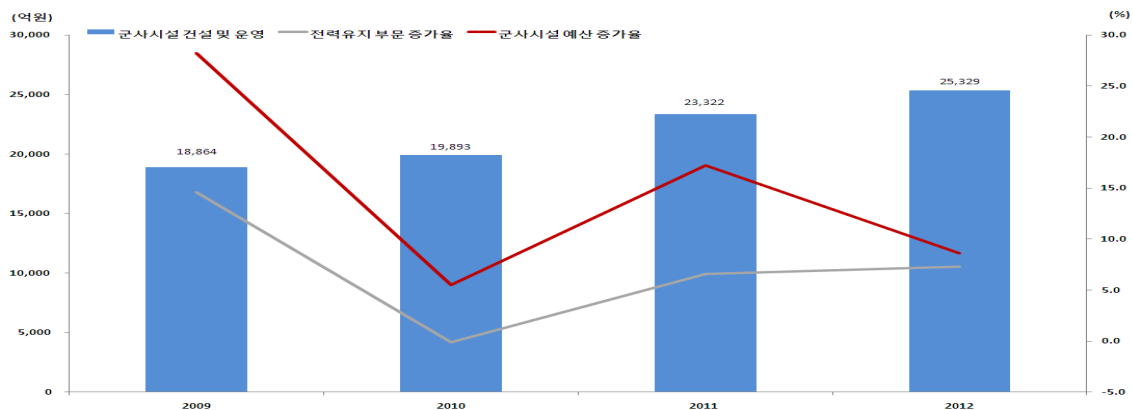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른 군 병력 변화 추이〉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전력유지 부문에서는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2012년에는 군사시설 건설을 위하여 전년 대비 8.6% 증가한 2조 5,329억원을 요구하였는 바, 이는 전력유지 부문 예산의 26.5%에 해당한다. 2009년 이후 군사시설 예산 추이를 살펴보면, 시설예산 증가율이 전력유지 부문 평균 증가률을 상회하고 있다.

〈군사시설 건설 예산 추이〉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2012년부터 국방 시설예산 중 BTL 정부지급금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BTL 정부지급금으로 2012년에 전년 대비 132.6%(1,203억원) 증가한 2,110억원을 요구하였고,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2013년에는 5,486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BTL 정부지급금이 증가함에 따라 국방 시설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시설 BTL 정부지급금 연차별 부담액〉

(단위: 억원)

	2010	2011	2012	2013	2014
BTL 정부지급금	93	907	2,110	5,486	5,693

주: 2012년은 예산요구안 기준이며, 2013년부터 국방 중기계획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2011~2015 국방 중기계획」(국방부, 2011. 1) 등을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방위력개선 부문의 경우 국방 연구개발 예산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국방 연구개발 예산으로 전년 대비 4,277억원(21.2%) 증가한 2조 4,441억원을 요구하였으며, 최근 5년간 평균 1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국방 연구개발 예산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연구개발을 통하여 전력화된 다수의 무기체계에서 결함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¹²⁾.

〈국방 연구개발 예산 추이〉

(단위: 억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요구안
방위력개선 전체 예산(A)	76,813	87,140	91,030	96,935	104,666
연구개발(B)	14,522	16,090	17,945	20,164	24,441
비 중(B/A)	18.9	18.5	19.7	20.8	23.4

자료: 방위사업청 제출자료를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또한, 차세대 전투기(총사업비 8조 2,905억원), 한국형기동헬기(6조 253억원) 등 첨단 무기 도입을 위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이러한 첨단무기가 전력화될 경우 큰 규모의 군수예산 증가를 수반하므로 국방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¹³⁾.

12) K-2 파워팩, K-11 복합형 소총, K-21 보병전투차량, 검독수리A 등의 무기체계에서 결함이 보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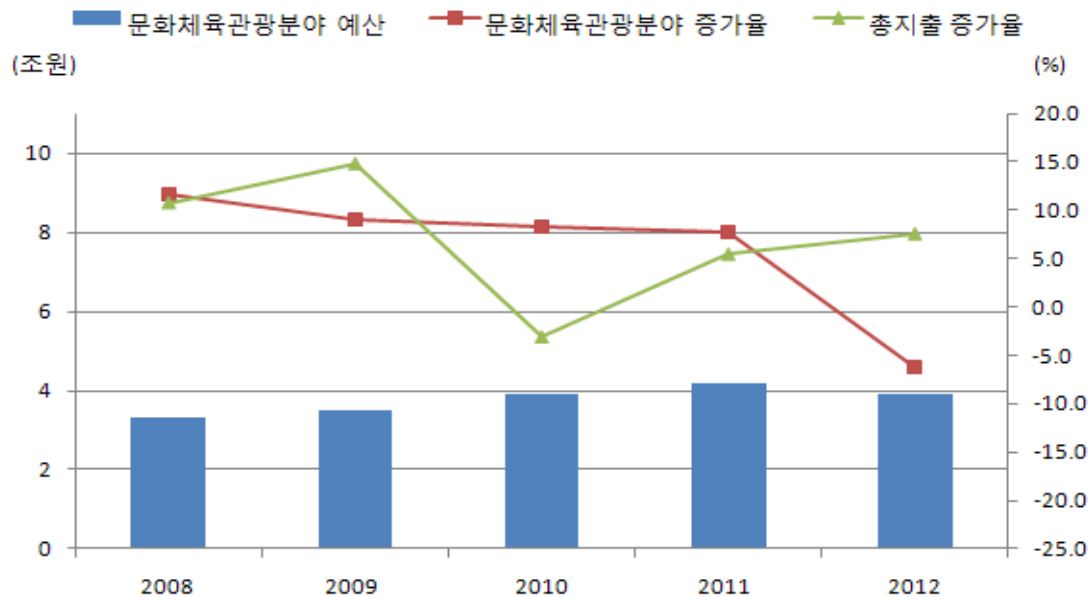
13) F-15K 도입의 경우 장비유지를 위한 군수비용으로 2012년에 전년 대비 1,076억원 증액된 2,034억원을 요구하였고, 이지스함의 경우 전년 대비 175억원 증액된 326억원을 요구하였다.

9. 기타 분야

가. 문화 · 체육 · 관광 분야

2012년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요구안은 3.9조원으로 2011년 대비 6.2%(△0.3조원) 감액된 수준이며, 총지출 대비 비중은 1.2%이다. 전년 대비 6.2%의 감액률은 SOC 분야(-13.8%) 다음으로 큰 것이며, 지난 4년간(2008~2011년) 동 분야의 연평균 증가율 8.3%(평균 0.3조원)에 비추어 볼때, 감소폭이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추이: 2008~2012년〉



〈문화·체육·관광분야 자원배분 추이: 2008~2012년〉

(단위: 조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요구안	연평균증가율 (‘08~‘11)
재정 규모	3.3 (11.7) [1.3]	3.5 (9.1) [1.2]	3.9 (8.3) [1.3]	4.2 (7.8) [1.3]	3.9 (-6.2) [1.2]	- 8.3 -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2.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부문별로 보면, 지난 4년간(2008~2011년)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을 제외한 문화예술, 관광, 체육, 문화재 4개 부문에서 부문별로 4.0%~17.0%의 증가를 보여 왔지만, 2012년도 요구안은 문화예술과 문화재 부문, 문화 및 관광일반 부문만 전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관광 부문과 체육 부문은 각각 △11.1%와 △12.5%를 감액 편성하고 있다.

문화콘텐츠 산업이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제조업을 토대로 한 고도성장 이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할 것이며, 체육 분야에 있어 국민의 평생 건강 확보를 위해 생활체육과 학교체육 등 풀뿌리 체육 분야에 재원배분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분야의 부문별 재원배분 추이: 2008~2012년〉

(단위: 조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요구안 (전년 대비 증가율)	2008~2011년 연평균증가율
문화예술	1.3	1.3	1.5	1.7	1.7 (-)	9.4
관광	0.8	0.9	0.9	0.9	0.8 (-11.1)	4.0
체육	0.5	0.6	0.7	0.8	0.7 (-12.5)	17.0
문화재	0.4	0.5	0.5	0.5	0.5 (-)	7.7
문화 및 관광일반	0.3	0.2	0.2	0.2	0.2 (-)	-12.6
합 계	3.3	3.5	3.8	4.1	3.9	-

주: 반올림 조정에 따른 오차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나. 외교·통일 분야

2012년도 외교·통일 분야 예산요구액은 3.9조원으로 2012년 정부총지출의 1.2%에 해당하고, 2011년 대비 8.0% 증액된 규모이다. 2012년도 예산요구액 증가는 주로 통일부문 예산 증가에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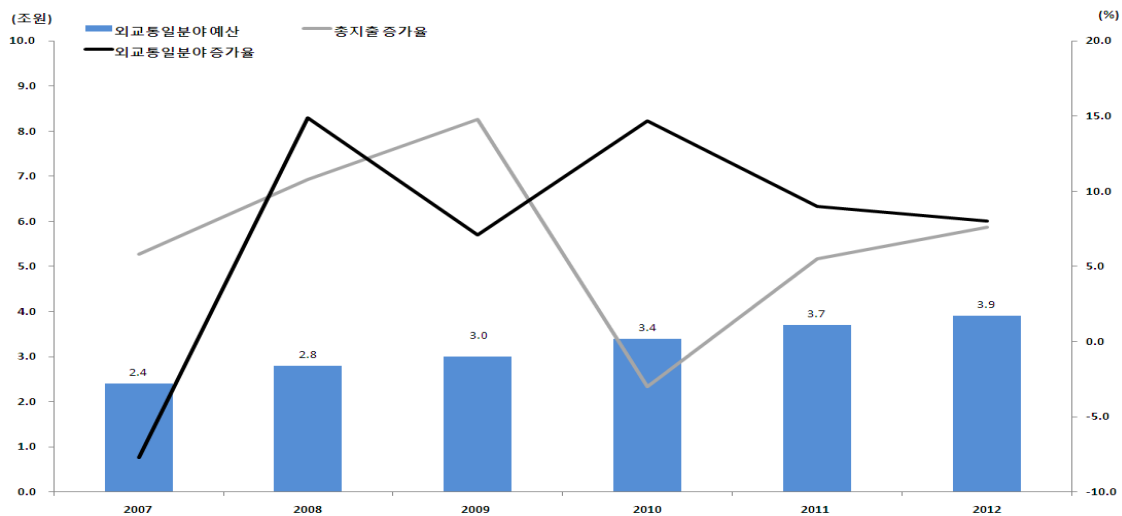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2007년에 전년 대비 약 8% 감소한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정부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외교·통일분야 예산 현황〉

(단위: 조원,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요구안
외교통일분야 예산	2.4	2.8	3.0	3.4	3.7	3.9
외교통일분야 예산 증가율	-7.7	14.9	7.1	14.7	9.0	8.0
총지출 증가율	5.8	10.8	14.8	-3.0	5.5	7.6

〈외교·통일분야 예산 추이〉



2012년도 외교·통일 분야 예산요구액의 구성을 살펴보면, ODA 예산이 약 1조 1천억 원으로 동 분야 전체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사업이 6,800억원으로 17%, 재외공관운영 사업이 약 4,600억원으로 12%, 국제기구분담금이 약 4,200억원으로 11%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도 외교·통일 분야 예산의 주요구성〉

(단위: 조원, %)

	ODA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재외공관운영	국제기구분담금	외교·통일분야 전체
예산요구액	1.1	0.68	0.46	0.42	3.9
분야 전체 대비 비중	28.2	17.4	11.8	10.8	100.0

외교·통일 분야 재원배분의 주요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ODA 및 국제기구분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기구분담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PKO분담금의 경우, 2010년 기준으로 유엔 회원국 중 10위를 차지하였고, ODA의 경우 2006년 GNI의 0.05% 수준에서 2010년에 GNI의 0.13%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국제기구분담금 실적: 2006~2012년〉

(단위: 억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요구안
국제기구분담금	1,847	2,965	2,258	2,504	3,417	4,175	4,2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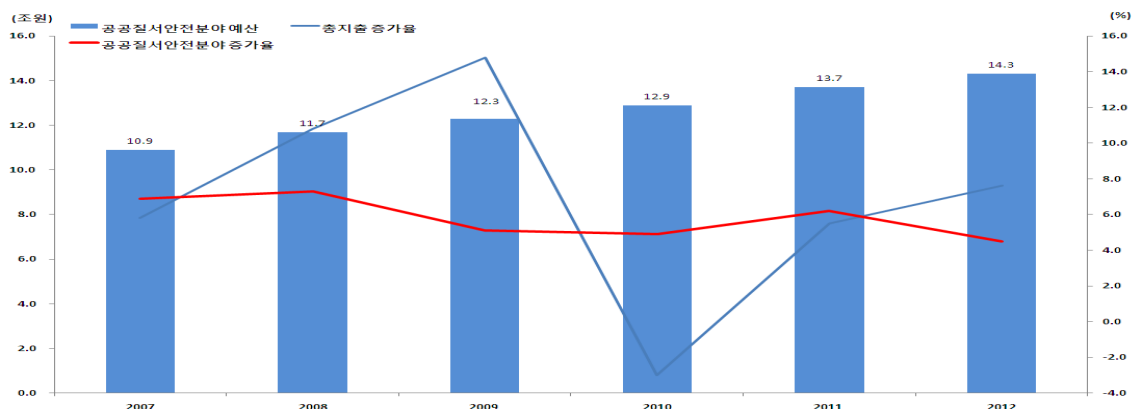
주: 2006~2010년은 실적, 2011년은 예산액, 2012년은 예산요구액 기준임

둘째, 통일 부문의 2012년도 예산요구액이 전년도 예산 대비 약 70% 증액되었다. 이는 경수로사업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액이 1,763억원 증액되었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500억원 증액) 및 통일교육 관련 사업(200억원 증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다. 공공질서 · 안전 분야

2012년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요구액은 14.3조원으로 2012년 정부 총지출의 4.3%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이 전년대비 7.6% 증가한 반면, 공공질서·안전 분야 증가율은 전년대비 4.5% 증가한 수준이다.

〈공공질서 · 안전 분야 예산 추이〉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기획재정부, 각 연도) 등을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5개 부문(법원 및 헌재, 법무 및 검찰, 경찰, 해경, 재난관리)으로 구성되고, 그 중 경찰 부문의 비중(2012년의 경우 56.6%)이 가장 크다.

〈공공질서·안전 분야 부문별 현황〉

(단위: 조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요구안
분야 총합계	11.7	12.3	12.9	13.7	14.3(100.0%)
법원 및 헌재	1.3	1.3	1.4	1.5	1.7(11.9%)
법무 및 검찰	2.2	2.3	2.3	2.6	2.6(18.2%)
경찰	7.0	7.3	7.6	7.8	8.1(56.6%)
해경	0.8	0.8	0.9	1.0	1.0(7.0%)
재난관리	0.4	0.6	0.7	0.8	0.9(6.3%)

주: 반올림으로 합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공공질서·안전 분야의 예산은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및 관서운영 기본경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경제위기 등 국가재정변동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아니하는 경직성 재량지출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2012년 공공질서·안전 분야 예산요구액 14.3조원 중 인건비는 8.8조원(61.5%)으로 인건비 비중이 R&D, SOC 등 다른 분야보다 높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지출 중 인건비 비중 현황〉

(단위: 조원)

	2008	2009	2010	2011	2012 요구안
분야 총지출(A)	11.7	12.3	12.9	13.7	14.3
인건비(B)	7.3	7.6	7.7	8.2	8.8
인건비 비중(B/A)	62.4%	61.8%	59.7%	59.9%	61.5%

자료: 기획재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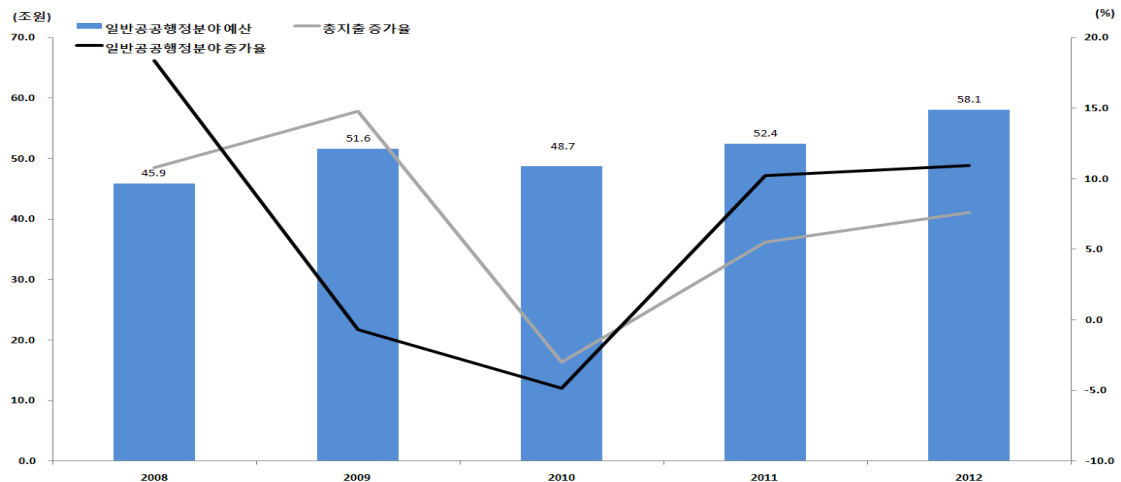
라. 일반공공행정 분야

2012년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요구액은 58.1조원으로 2011년 예산 대비 11.0% 증가하였으며, 정부 총지출 예산요구액 332.6조원의 1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지출규모는 2008년 45.9조원에서 2011년 52.4조원으로 연평균 4.5%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 정부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인 5.6%보다는 낮았다.

2012년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요구액 기준으로 정부 총지출 증가율 7.6%를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출의 57.7%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금」의 예산요구액이 33.5조원으로서 전년에 비해 10.9%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의 지방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상 의무지출사업으로서 2008년 29조원에서 2012년 요구액 기준으로 33.5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 동안 일반공공행정 분야 지출액의 57.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 추이〉



자료: 「국가재정운용계획」(기획재정부, 각 연도) 등을 토대로 예산정책처 작성

〈일반공공행정 분야 자원배분 추이〉

(단위: 조원, %)

	2008	2009	2010	2011	2012 요구안
일반공공행정 분야	45.9 (8.6) [17.5]	51.6 (12.6) [17.1]	48.7 (-5.6) [16.6]	52.4 (7.5) [17.0]	58.1 (11.0) [17.5]
지방교부금	29.0 (18.4)	28.8 (-0.7)	27.4 (-4.9)	30.2 (10.2)	33.5 (10.9)

주: 1.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2. []안은 총지출 대비 비중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도

2012년 일반공공행정 분야 재원배분의 특징은 지방교부금과 선거관리에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정부는 2012년도 내국세 증가율을 10.9%로 전망하였고, 이에 따라 내국세의 19.24%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교부금 예산요구액도 10.9%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년 선거관리 예산요구액이 전년 예산 대비 7,000억 원 증가하였는데, 대표적으로 2012년 국회의원·대통령선거·재외선거의 실시로 국회의원선거관리가 3,300억원 순증하였고, 대통령선거관리가 1,933억원 순증하였으며, 재외선거관리는 전년에 비해서 917억원이 증가된 998억원이 요구되었다.

회의록

○**사회 신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오늘 사회를 맡은 신율입니다.

이 토론회는 지난 3월이었다고 하지요. 국민과 함께 하는 나라살림대토론회에 이어서 두 번째 마련되는 자리인데 오늘도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정말 우리 세금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쓸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두 분의 축하말씀, 그리고 개회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개회말씀부터 듣겠는데,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장 주영진**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정책처장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예결위원장, 권오을 국회사무총장, 나성린 의원님 등 오늘 참석하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기국회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데도 시간을 쪼개어 토론회에 응해 주신 김광림 한나라당 예결위원님, 강기정 민주당 예결위 간사님, 사회를 맡아주신 명지대학교 신율 교수님, 토론에 참여해주신 박태규 연세대학교 교수님,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소장님, 매일경제신문 온기운 논설위원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유찬 위원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발제를 해주실 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과 박종규 경제분석실장,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의원님, 보좌진, 관계 공무원 및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유가와 원자재 값의 상승, 미국과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대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청년실업 및 물가상승 문제 등이 심화되고 복지수요가 더욱 증대됨에 따라 국가재정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관심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예산안 편성단계부터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각계각층의 이해가 반영된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예산’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난 3월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기국회에 즈음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예산의 총량과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오늘 두 번째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국회심사에 앞선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지난 금융위기로 훼손된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회복하고 미래의 복지 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향이 제시되길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와 일자리 창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국가재정의 바람직한 역할을 모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국회에 내년도 예산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세 번째 대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가운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정갑윤 예결위원장님과 권오을 국회사무총장님, 그리고 의원님, 토론자 및 참석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사회 신을 고맙습니다.

다음은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축하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 권오을 안녕하세요? 국회사무총장 권오을입니다.

먼저 바쁜 시간에 이렇게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3월에 이어 오늘 다시 대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국회예산정책처의 주영진 처장님을 비롯해서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굉장히 바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강기정 의원님, 김광림 의원님을 비롯해서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사회를 맡은 신을 교수님에 대해서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자체는 정치권이든 정부의 의지가 숫자로 표현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까지 이명박 정부가 4년, 5년 동안 정말 국민들에게 무엇을 하겠다고 제시했던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내용 자체는 아마 내년도 예산에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자리에 오늘 박희태 국회의장께서 격려사를 해 주시기로 원래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일정이 생겨서 나오시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무총장으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금년도 조기결산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전에 결산을 심의 의결을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축하하러 나오시겠지만 정갑윤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예결산위원 여러분들이 그 더운 여름에 날밤을 새워가면서 심의하고 토론하고 표결해 준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저는 내년도 정기예산도 법정기일인 12월 2일까지는 꼭 심의 통과되어서 예산의 여야 정쟁의 수단이 아니라 진정 이 나라살림

을 나타내는 계수가 되고 여야 모두가 국민들의 살림을 위해서 걱정하는 모습이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실제 예산편성권은 행정부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편성하는 단계부터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제대로 관여하고 심사하고 따지고 그렇게 했을 때 진정 국민들이 바라는 예산안이 짜여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는 여야간에 가끔은 지역예산을 놓고, 계층예산을 놓고 다툴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지만 종국적으로는 경로를 통해서 표결을 통해서 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조화로운 예산이 탄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12년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60일 동안 300억이 넘는 방대한 예산을 심의 의결한다는 것은 무리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12공화국 때는 예산 심사기간이 120일로, 5·16 이후에는 90일로, 유신헌법 이후에는 60일로 축소되었지만 헌법에서 이 조항을 90일이나 120일로 다시 연장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올해와 같이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그리고 국회가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현장출장을 통해서 예산을 체크해 준다면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은 어느 정도는 방지할 수 있지 않았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사가 너무 길어졌습니다마는 오늘 대토론회를 통해서 진정 국민이 원하는 예산, 이 나라 재정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모두가 이야기하는 정말 이 나라 서민이 따뜻하게 생각하는 예산이 탄생되는데 일조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두서없이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사회 신을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갑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축사 말씀, 간단히 들어보지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갑윤 반갑습니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갑윤입니다.

오늘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에 대한 「나라살림 대토론회」가 많은 국민들 관심 속에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발제와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김광림·강기정 의원님, 박태규 교수님, 박정수 소장님, 온기온 논설위원님, 김유찬 위원장님, 박종규·김춘순 실장님, 사회자이신 신을 교수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주영진 처장님을 비롯한 국회예산정책처 직원들께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우리 예결위원이신 김광림 의원님과 강기정 간사께서 토론자로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이 자리에 나온 많은 분들의 고견을 토대로 해서 예결위에서 내년 예산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보를 얻는 것에 대해 소외되고 있기에 국민들로부터 밀실에서 나누어 먹는다는 의혹의 시선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스 등 남유럽 여러 나라의 재정위기는 결국 재정의 투명성 부족에서 연유되었다고 합니다. 예산을 국민의 기대와 다르게 편성하거나 세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정책을 선심성으로 남발하는 것을 국민이 감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재정위기가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국회는 정부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편성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왔고, 재정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확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활발히 정보를 교류하고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공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신경을 써나가 계획입니다. 정치권도 당리당락을 떠나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재원을 배분하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내년은 총선과 대선이 동시에 실시되는 정치상황으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도 예상치 못한 지출요구가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같은 상황에 18대 국회 마지막 예결위원장으로서는 한층 더 어깨가 무겁습니다. 민생현장을 모르는 탁상공론 정책은 결국 국민에게서 외면 받을 수밖에 없다는 평소 제 정치소신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우리의 정책규모와 가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복예산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10년 결산심사가 국회법에 정한 기한내에 완료되었습니다. 이로써 2003년 조기결산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정기국회 전에 마무리됨으로써 국회사에 길이 남을 의미 있는 초석 하나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지난 결산심사에서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서를 보고 의원들이 심사기초자료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적인 대안제시도 포함하여 더욱 알찬 보고서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마련하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사회 신율** 고맙습니다.

제가 세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선 특히 감사하다고 느끼는 것이 시간들을 어찌면 그렇게 딱딱 지켜주셨는지, 그 부분을 사회자로서 저는 정말 세 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예산’ 하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계부 쓰고 앞으로 돈을 어떻게 쓸 것인지 기록하는 것처럼 국가도 사실 마찬가지로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이해, 그리고 저도 보고 싶은데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VCR을 마련했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화면으로 먼저 저희가 준비한 VCR을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그러면 먼저 오늘 토론회에 자리를 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나라당에 계시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광림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측 간사이시지요, 강기정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이어서 연세대학교 박태규 교수 나와 계십니다.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박정수 소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온기운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세위원장이시지요, 김유찬 교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을 위해서 발제를 준비하신 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이십니다.

그리고 박종규 경제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일동 박수)

제가 지금 ‘발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토론회는 일반적인 토론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회에서 하는 형식인데 발제를 듣고 그 이후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이 대담하고 토론회 형식으로 오늘 진행될 것임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현재 본 토론회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중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12년 경제전망과 재정운용 방침’에 관해서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으로부터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발제자 박종규** 예, 경제분석실장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골자만 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5페이지입니다.

제II장 경제 및 재정전망인데 여기서 보시는 여러 테이블들은 저희들이 금년 4월 현재 내놓은 전망치인데 지금 10월말을 목표로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 현재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자면 금년도 성장률은 4.1%, 내년 이후 2015년까지 4개년 동안은 연평균 4.2%로 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성장률은 낮아지고 인플레이션률은 다소 상승하는 모습으로 전망했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총수입과 총지출을 전망해 봤더니 8페이지에 보시는 것과 같이 통합재정수지가 매년 조금씩 흑자규모가 늘어나겠고, 관리대상수지는 적자폭이 매년 감소하겠지만 2015년까지도 균형달성이 조금 어렵다고 봤었고요. 국가채무는 규모가 계속 증가하겠으나 GDP 대비 비율로 보면 내년을 정점으로 하향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망하고 난 4월 이후 지금까지 아시다시피 해외경제에서 여건변화가 커다랗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이후에는 선진국들의 경제 및 재정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세계경제는 거의 모든 국가들이 성장세가 동시적으로 둔화될 것이며 침체기간도 상당 기간 길어질 것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이런 세계경제 상황을 고려할 적에 저희들이 10월말에 내놓을 중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하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재정여건도 당초보다는 조금 악화되는 모습으로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경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을 가만히 보면 세계경제 주체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져 있고, 특히 금융시장 같은데에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에서 우리 재정은 비유를 하자면 안개 속을 달리는 자동차처럼, 안개가 짙어질 적에는 속도를 줄이는 것처럼 우리 재정도 당분간 조심스럽게 운용해야지 안전한 전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실물경제에 대한 여파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적인 재정부양보다는 가계저축률을 높인다든지 경제순환의 물꼬를 트는 그런 경제체질 강화가 오히려 바람직한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경제순환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핵심은 기업부문, 특히 재벌기업 부문에서부터 중소기업과 가계와 같은 여타 부문으로 자금이 제대로 흘러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자금이 전부 기업부문에만 가서 거기에서 고이고 잠기고 거기서 쌓여서 가계나 다른 중소기업에 흘러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가계가 자꾸 부채가 많아지고, 저축의 주체가 되어야 될 가계가 부채의 주체가 되고, 부채의 주체가 될 기업이 저축의 주체가 되어 가지고 경제가 거꾸로 흘러간 지가 벌써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현상을 바로잡는 것이 순환을 재가동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14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재정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느냐? 첫째, 기업부문에서 중소기업과 가계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제가 기업들이 여유자금을 현찰로 굴리든지 아니면 투자나 고용에 쓰든지 아무런 차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해 가지고 기업이 단기자금 운용을 해서 얻는 수익보다는 이노베이션과 투자를 통해서 기업 본연의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업에서부터 가계로 자금이 흘러 나가게 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동반성장 및 비정규직 문제라고 보는데 이것은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애로를 해결해 준다는 시혜적이 차원이 아니라 이것 역시 기업부문에서부터 가계와 여타 부문으로 경제선순환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런 인식 하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세제 및 지출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 우리 경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축의 주체가 되어야 할 가계가 부채의 주체가 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가계의 저축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은 OECD 최저 수준이고 위험할 정도로 낮은지가 벌써 이것도 몇 년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정이 응분의 역할을 해야 된다, 저희들의 제안은 개인의 이자소득세율이 현행 14%인데 이것을 한 10% 정도로, 아니면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이 어떨까? 대신 4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종합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이자소득세율을 낮춰보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15페이지입니다.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지출과 세입 측면에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출에 대해서는 복지지출 확대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 이후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제안들이 쏟아지다시피 나왔고, 앞으로도 나올 것이고 그에 대한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한 가지인데 우리 재정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른 고령화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커다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지금까지 2050년까지 고령화를 반영한 장기재정 전망을 해 봤는데 15페이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통합재정수지가 현재는 흑자지만 2024년부터는 적자로 전환되는데 그 이후의 적자 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그 결과 16페이지 국가채무의 GDP 비중도 2021년까지는 좀 하락하다가 그 이후에는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지속가능성 테스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재정이 지속가능하느냐. 이 테스트를 해 보면 지금으로부터 25년 뒤인 2035년부터는 우리 재정은 지속가능하지가 않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우리 재정은 향

후 5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여건이 허락하는 한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고령화가 등장하는 그 이후에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의 복지재정을 포함한 장기적 재정지출 소요가 있는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현행 5년까지만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한 세대 이상, 30년대 이상에 걸친 장기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그것을 첨부해서 그것을 검토하도록 국가재정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제개편 방안입니다.

지금 이런 장기적인 것을 감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세원 확대일 텐데 세원 확대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과세감면 정비라고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이후에는 금년과 내년에 일몰 도래하는 비과세감면 중에서 저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추린 것이 있는데 금년에 41개의 비과세감면 항목이 일몰 도래하는데 이 중에서 11개, 내년에는 77개가 일몰 도래하는데 이 중에서 6개 정도를 일몰 종료시켜 버리면 2013년 이후부터는 4조 2000억 원의 세입이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균형재정 달성은 물론이고 세입 기반 확대, 세원 확대에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중요하게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완전히 이제는 일몰 종료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장기주식투자라든지 주택 토지관련 비과세감면, 또 농어민 관련 이런 여러 가지 민감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종료시키자고 제안을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민감하긴 하지만 조세구조의 합리화라든지 균형재정, 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 21페이지부터는 당장은 아니지만 2015년까지 중기적으로 우리가 검토하고 넘어가야 될 세원 확대 및 세제 합리화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끝으로 23페이지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국민의 정부 이후 매년 임기 말년에 흑자를 내놓고 나가는데 문제는 그 이후 이런 균형기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 정부도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저희들이 표로 보여드린 것은 이게 달성이 어렵겠다고 표에 적어놨습니다마는 이것은 제도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때 그렇다는 것이고,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2013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 바라는 것은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균형재정 기조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면서 기조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박수)

○사회 신율 고맙습니다.

지금 박종규 실장으로부터 기초발표를 들어봤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볼 것입니다. 시간관계상 그리고 사실 사람이 1분 30초 이상 말하는 게 넘어가 버리면 사실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상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분 3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내에 말씀을 끊어주시면 되겠고요.

제가 먼저 여기 계신 두 분 의원님께 여쭙볼 텐데, 각 정부가 요구한 예산이 있지요? 내년도 이 정도 쓰겠다고 요구한 예산이 종합해 보면 총지출 규모가 332조 6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돈인데요. 올해 대비 약 7.6%가 증가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건축재정도 하고 경제전망도 그렇게 밝지 않은데 우선 두 분 의원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인지 한번 들어보지요.

먼저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부터 말씀을 해 주시지요.

○토론자 김광림 한나라당 경북 안동시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요구가 금년도에 309조인데 거기에다 24조 원을 더 보태 가지고 333조, 7.6% 부처 요구가 증가했다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사실 부처 요구가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5년도부터는 부처가 요구할 수 있는 한도, 실링을 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지 않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부처에서는 아주 국가적으로 중요한 예산은 요구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또 포함하더라도 금액을 적게 하거나 이런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년에는 두 가지 큰 과제가 있습니다, 재정환경이.

첫째는 재정의 건전성을 굉장히 튼튼히 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 반해 가지고 내년에는 4월에 총선이 있고, 12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해마다 총선과 대선이 있는 경우에는 예산요구가 커집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보는 것인데 문제는 예산 증가율인데 309조에다 한 5% 정도 증가한다고 하면 15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15조 증액되는 것을 가지고 초등학생이라도 편성할 수 있는 예산, 예를 들면 교육재정교부금, 지방재정교부금 7조 원 나가야 하고, 건강보험 기초생활수급 5조 5000억 해서 금방 잡혀 있는 예산이 15조를 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을 현재 있는 금년도 수준 가지고 편성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신율 알겠습니다.

다음은 강기정 의원 말씀해 주시지요.

○**토론자 강기정** 조금 전에 실장 분석에 따르면 7.6% 부처 요구 증액이라고 얘기했는데…… R&D, 일반 공공행정, 교육 이쪽이 많이 증액됐고 SOC가 소폭 감액됐다고 하는데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 7.6% 증액속에는 지방 취득세 50% 감면을 보니까 이제 2조 한 1000억 정도 되는데 이런 국고보조분도 빠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 않겠냐. 역대 평균치가 6.9%,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6.9인데 7.6보다 훨씬 더 올라가지 않겠냐 싶어지고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가 국가 재정건전성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부처가 요구한 속에는 전혀 이런 재정건전성 문제가 고민되지 않았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SOC 분야 소폭 감액됐다고 발표했는데 SOC 분야가 예산요구액이 21조 6000억인데 2011년도 대비 3.4조 원이 감소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3.4조 원은 제가 보니까 4대강의 3조 1000억이었던 것이 그것으로 보면 3.4조 원이면 약 3000억 원 감소 요구인데 이런 정도 SOC 요구를 가지고는 안 된다. 대폭 더 감해져야 된다. 그럴 때만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2010년 결산을 해 보니까 국토부 도로예산 같은 것이 집행률 제로인 것이 21개가 있어요. 그런 점이 감안되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차후에 말씀드릴랍시다마는 여러 가지 서민 민생예산, 이 시대 가장 고민거리 예산들이 부처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7.6%보다 훨씬 올라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회 신울** 고맙습니다.

지금 경제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조사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올해와 비교해서 내년도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해야 된다는 의견이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이런 상태에서 두 분께 여쭙볼 텐데요, 박태규 교수께서는 내년도 재정수준을 어느 정도 꾸려야 된다고 보세요?

○**토론자 박태규** 예산요구액을 가지고 보면 7.6%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팽창이나 아니면 긴축이나를 볼 때 교과서에서는 경상 경제성장률이 얼마냐를 놓고 기준을 삼지요. 그래서 정부가 내년도 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쳐서 경상성장률을 만약 7.5%로 본다고 하면 팽창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이 사실은 어렵게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내년도에 많은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과연 정부가 예상하는 대로 4%대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

굉장히 의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마 물론 요구액이 다 예산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습니까마는 현재 요구액대로 본다고 하면 과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구액을 줄여야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까 박종규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세계경제의 여건에 따라서 향후 하향 조정 된다고 하면 우선 세수의 결함이 오기 때문에 재원조달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향 조정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년도에 유럽과 미국의 경제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지만 내년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외부여건의 어려움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는 하향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신을 알겠습니다.

박정수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론자 박정수 저희가 구분해야 되는 것이 예산요구액이라고 각 부처의 요구액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부의 예산안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309조보다 7.6%가 증가한 332.6조라는 것은 각 부처, 정부의 모든 부처가 요구한 액수를 다 합한 금액이고요 결국 이 부분이 정부의 예산실에서 조정을 받아 가지고 10월 초에 국회로 넘어올 때는 정부의 안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안으로 올 텐데 현재 9월 1일 기획재정부위원회에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방향이라는 것으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보다는 5.5조 증가한 326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세입증가율을 전망한 부분에 비해서 3%p 낮게 가지고 가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박태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정부는 굉장히 긴축적으로, 재정건전화에 애를 쓴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박종규 실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나라는 소규모 개방경제입니다. 일본 대지진, 그리고 선진국의 고용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들 그다음에 금융위기 해 가지고 선진국의 내년의 경제성장률이 2% 안팎으로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개도국들도 굉장히 성장이 낮아질 것으로 봤을 때 수출 가지고 우리나라가 살림을 지탱하는 마당에서는 굉장히 재정여건이 좋지 않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중기적인, 장기적인 재정 전망을 할 때도 초저출산, 초고령화 사회가 곧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긴축재정기조는 견지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신울 알겠습니다.

긴축재정, 특히 앞서도 말씀이 나왔습시다마는 내년도 경제상황이 상당히 좋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지요. 바로 그런 데에 제가 자료를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게 나오더라구요. 시민단체 같은 경우에는 40%는 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시민단체에 참여하시는 분 중에 40%는 올해 수준이 적정이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시민단체는 내년도 경제상황을 다르게 생각하는지 제가 김유찬 교수님께 먼저 여쭙보겠습니다.

○토론자 김유찬 내년도 경제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다들 의견이 일치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민단체 입장에서든 미래에 대한 전망과…… 전망은 비슷할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신 대로 미래 전망이 불확실하니까 긴축적으로 가야 된다는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공식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건전성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목표가 있지만 정책목표가 중요한 것이지만 또 동시에 경제활성화라는 그런 중요한 목표를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경제가 어려울 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의지와 동력을 가진 경제주체는 결국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내년에 경제상황이 불확실하다 그래서 더 불뎅의 여파가 크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정부가 나서서 지출을 확대하고 그래서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정을 확대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간에 당연히 의견이 다르겠지요.

○사회 신울 언론에 계신 온기운 논설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토론자 온기운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아까 박종규 실장님께서 4.3%로 전망하셨는데 이때 전망한 시점이 지난 4월이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후 엄청난 쇼크가 발생한 것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8월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세계경제 전망은 굉장히 비관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모든 기관들이 거의 모든 나라들의 성장률을 낮추고 있고 또 그 여파를 받아 가지고 우리나라의 8월 무역흑자가 8억 불밖에 되지 않았습시다. 그러니까 한 달만에 55억 달러나 급격히 감소했는데 아마 하반기 가을 이후에 다소 회복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이렇게 많은 무역흑자를 기대하기 어렵습시다. 왜냐하면 세계경제 자체가 그만큼 위축되기 시작했고 더불뎅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그것이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4.3% 달성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아마 3%는 각오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런 하강리스크를 매우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물론 역설적으로 경기하강을 상쇄하기 위해서 지출을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그만큼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지출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신율**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긴축재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 많은 것 같은데 결국 긴축재정, 아까 박종규 실장께서 발제하실 때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실제로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더해 보지요. 아까 시간관계상 잠깐 넘어간 것 같은데 재정건전성, 장기적으로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다. 박종규 실장께서 구체적으로 좀더 말씀해 주시지요.

○**발제자 박종규** 재정이 지출구조조정하지 않다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아무 제도의 변화가 없다면 국가채무의 GDP 비율이 무한정 늘어나는 궤도에 진입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온갖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금리가 상승해서 경제가 위축되어서 재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생긴다든지 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리면 초인플레이가 유발된다든지 또 요즘 미국이나 유럽국가들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는 재정이 악화되면 신용등급을 강등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와 같이 EU라는 배경도 없고 달러 기축통화도 아니고 이런 나라들은 자금이 유출해서 외환위기가 날지도 모른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아직 먼 미래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 굉장히 지금부터 유념해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했을 적에는 세입을 늘리거나 세출을 줄여야 할 텐데 세입을 늘리게 되면 2035년, 25년 뒤에 세입을 늘린다고 하면 지금의 30대 이하들의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적어질수록, 30대보다 20대가, 20대보다 10대가 더 부담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미리미리 해 놓아야지 시간이 오래 끌수록 조정해야 될 몫이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더 세대간의 부담이 비대칭적으로 집중이 되고 그러다 보면 아마도 세대간 갈등이 많아지면서 우리 사회 통합도 커다란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말씀 들어보면 재정건전성 유지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유럽을 보더라도 지금 유럽이 남의 일같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예를 들면 돈 쓸 데 없이 새는 데를 막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재정지출에 있어서의 낭비요소라고 어렵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낭비라든지 새는 데를 막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른바 지출구조조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김춘순 실장께서는 지출구조조정, 이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새는 데를 막고?

○발제자 김춘순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속가능이 필요한 사업은 대체로 유사·중복 사업이라든지 계획이 부실한 사업들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심사 때마다 확인하는 것입니다마는 안타깝게도 이런 부분이 별로 감소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개는 다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든지 국가가 전략적으로 확대를 추진하는 사업들에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ODA사업, R&D, 녹색사업, 일자리사업. 다 필요한 사업들인데 규모가 확대되다 보니까 계획이 부실하거나 부처간에 중복적인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신울 그것 말고도 사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잠깐 증세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증세문제나 아니면 어려운 단어입니다마는 재정준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도적으로 그러한 것들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저도 여론조사를 읽어 보니까 그렇던데요.

두 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강 의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토론자 강기정 기본적으로 2007년도에 국민 조세부담률이 21%까지 가던 것이 최근 19점 몇%까지 떨어졌던 것을 볼 때 지속적으로 세금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면을 통해서 조세부담을 많이 낮춰버렸단 말입니다. 감세정책이나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저는 이명박 정권이 이것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냐. 앞으로 미래형 재정이 많이 투입되고 들어가야 할 텐데 그렇게 부담률을 낮춰놓고 이제 증세를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 이 지점에 다시 한번 재정건전성 얘기를 하면서 긴축, 줄이겠다 하는데 그 긴축의 방향이 어디로 될 것인가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조세준칙주의를 도입하겠다 등등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예산안을 제대로 제출해라 이런 준칙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칫 새로운 신규 복지사업에 대해서 까다로운 절차를 가져오지 않을 건가 이런 점이 우려스럽고요.

예를 들면 2007년에 기초노령연금법을 제가 대표발의했을 때 연간 2조 몇 천억 정도 들었을 때 상당히 단일지출로써 큰 항목이었는데 당시 매우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것을 헤쳐 나갔던 기억이 있고, 또 김대중 정부 때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같은 상당히 규모 있는……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마는 사이즈가 큰 이런 지출을 했던 것을 볼 때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재정규율을 통해서 예산 통제를 잘 하는 것이 좋겠다. 4대강하면서 몇 가지 사례만 보면 예타도 없애버렸고, 여러 가지 재정규율을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예산의 낭비성에 대해서 재정규율을 무너뜨리면서 재정건전성을 해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사회 신울 알겠습니다.

김광림 의원 말씀해 주시지요.

○토론자 김광림 먼저 4대강은 이번 홍수 지내면서 상당히 잘 했다는 여론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준칙은 도입이라고 하는데 사실 행정부 내에서 보면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중기재정에 보면 거두어들이는 것은 매년 8% 늘리는데 쓰는 것은 5%만 늘려라. 그래서 3% 정도는 재정수지를 개선해 가지고 균형을 빨리 해라. 그래서 원래 2014년 되어 있던 것을 1년 당겨서 하겠다는 것이 지금의 정부 정책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금 많이 거두면 좋지요. 그런데 지금 세율을 높이거나 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지금 이슈화되어 있는 것은 내년부터 내리기로 되어 있는 법인세, 법을 개정해 가지고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22%에서 20%로. 그런데 그것을 안 내리면 3조 넘는 돈이 들어오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법인들이 내는 세금이 다른 나라보다 적게 내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법인들이 내는 법인세의 GDP상 비중이 4.2%입니다. 그런데 OECD 전체 평균이 3.5%, 일본이 3.9%, 이렇게 보면 최종적으로 세금 낸 금액이 거둬들인 GDP 대비는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준칙은 지켜야 되고 세금은 내는 사람의 법적 안정성, 또 벌써 법이 개정되어 있는 부분을 생각해서 현재대로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사회 신울 여기에 대해서 다른 분 말씀해 주시지요.

○토론자 강기정 4대강은 애초에 홍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치고요. 법인세율 문제는 결론적으로 이것은 감세가 철회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해 봅니다. 이것은 청와대나 재정당국에서는 철회 없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철회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아무튼 이유……

그런데 방금 법인세가 높으면 낮춰주는 것은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예산정책처 지적대로 법인세가 도대체 중소기업과 가계로 선순환되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선순환 되고 내수를 잘 진작시키는 유용한 법인세 감면이면 민주당도 OK하고 말하자면 고민이 될 것인데 이것이 선순환 안 되고 있다 이런 점의 고민인 것 같습니다.

○**사회 신율** 간단하게 답변하시고 다른 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자, 말씀하시지요.

○**토론자 김광림** 법인세 감세 스케줄은 야당도 참여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세율이 어떻게 죽 얘기를 하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낸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전체 GDP의 4.2%, OECD 평균은 3.5%, 3.9% 되는 일본보다 조금 더 많이 내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아마 저희들도 이것이 세법이니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찬반 양론을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신율** 이렇게만 잘 돌아갔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박 교수님.

○**토론자 박정수** 기본적으로 저희가 재정이 지출구조조정하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재정이 신뢰받을 수 있어야 우리나라와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도 지탱해 낼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재정추계를 보면 국가재정운용계획 해 가지고 올해 것을 포함해서 2011년에서 2015년, 향후 4년간만 공식적으로 추계하고 있는 부분을 세대 정도까지, 한 30년 정도까지 장기 추계를 하자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부분이 같은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세제개편도 예측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사실 매회 국회마다 세제개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과연 그 세제개편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년 세제개편이 되는가 하는 것을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 아마 올해도 세제개편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저희는 누구나 다 비과세감면을 일몰에 의해 없애거나 줄여나가서 어떻게든 거둘 수 있는 과표를 늘려야 된다는 것은 다 동의하는데 실질적으로 세제개편안을 들여다 보면 이렇게 해서 감면해 주고 저렇게 해서 감면해주는, 오히려 세제감면을 늘리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많더라. 따라서 세제개편도 중기적인 계획 하에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재정건전화가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법적 기반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구조적인 재정지출이 도입되려면 재정적으로 다른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것을 영어로는 PAYGO 원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을 도입함으로써 시스템으로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신울 알겠습니다.

온기운 논설위원.

○토론자 온기운 저는 국가재정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국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제대로 걸러지고 견제하지 않으면 결국 앞으로 중장기를 볼 때 재정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구체적으로는 최근에 스페인이 헌법 조항에다 재정적자를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헌법 개정을 하기로 합의했는데 그것은 유럽 국가 전체로 확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호주라든지 스웨덴 이런 나라들은 재정준칙을 도입해서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고민해서 중장기적인, 아까 5년 단위가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중장기적인 재정건전화를 위한 재정준칙은 지금 여유가 있을 때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 신울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은 물론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최소한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충분한 얘기는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것, 그것은 뭐냐 하면 전체 돈을 어느 정도 쓸 것인가라는 데 대한 고민, 하지만 우리 가계, 재정을 어떻게 건전화하면서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전체 돈은 어느 정도 지출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는가 하는 부분을 얘기해 볼 텐데요.

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의 발제,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발제를 듣고 저희가 또 토론을 계속하지요.

말씀해 주시지요.

○발제자 김춘순 예산분석실장입니다.

발제는 화면에 그래픽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보신 것처럼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 규모는 332조 6000억 원으로 7.6%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재정은

용계획을 7조 80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지만 실제 국회에 제출될 예산안 규모는 이것보다 줄어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 노동, 외교통일, 교육, 공공행정, R&D 등 5개 분야는 예산요구액이 높게 나타났고, 농림수산, 환경, 문화, SOC 등은 올해보다 감소하였습니다. 특히 금액 기준으로는 보건복지·노동 분야가 6조 2000억 원 증액되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2008년 이후 R&D 분야와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예산증가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총지출 대비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SOC 분야의 경우 총지출 대비 비중이 2010년 8.1%까지 증가하였으나 12년에는 6.3% 수준으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무지출의 추이입니다.

의무지출은 2007년의 경우 총지출의 41.7%를 점유하던 것이 2011년에는 45%를 점할 정도로 그 비중이 커졌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의무지출은 교부금이나 사회복지지출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증가세는 꾸준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분야별 재원배분방향입니다.

먼저 R&D 분야는 예산요구액이 17조 원으로 14.1% 증가한 규모인데 총지출 증가율과 비교해 보면 2배에 근접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예산 비중과 R&D 예산의 증가율 모두가 OECD 국가 중에서 4위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R&D 분야는 국가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꼭 필요한 지출이지만 총지출 증가율이 2배에 가까운 증액규모에 대해서는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건복지·노동 분야입니다.

예산요구액은 92조 6000억 원으로 7.2% 증가했습니다. 이 분야의 뚜렷한 특징은 의무지출의 자동증가현상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보육, 연금 등의 의무지출 예산증액이 복지분야 전체 증가요구에 6조 2000억 원의 89%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고령사회와 지식기반사회가 급속하게 진전되면서 새로운 사회적 유형에 따른 복지수요가 발생하지만 현재의 지출구조는 이런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매우 제약적입니다. 따라서 민생안정에 필요한 복지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출의 비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재정분야간에도 합리적 조정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관한 것입니다.

내년도 건강보험의 국고요구액이 6조 원 수준인데 이는 국민연금을 제외한 복지부 총지출의 약 25%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정부 재정 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예산계획서는 국회에 제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운용규모가 40조 원을 상회하는 건강보험이 국회에서 충실히 심의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SOC 분야입니다.

SOC 분야 예산요구액은 21조 1000억 원으로 3조 4000억 원이 감소했는데 전체 12개 분야 중 감소폭이 가장 큼니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SOC 비중도 2010년 8.6%에서 12년에 6.3%로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재정전문가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SOC 분야의 감액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SOC 분야 재원배분의 핵심은 투자 대비 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부문간, 부문내의 투자 우선순위 조정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감액된 도로부문과 증액된 철도부문 규모의 적정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국방분야입니다.

국방분야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33조 5000억 원으로 6.6% 증가했습니다. 이 중 병력운영부분은 간부규모의 확대에 따라 인건비 증가소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군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증액규모가 큰 국방연구개발 예산, 그리고 군사시설건설예산의 경우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분야입니다.

예산요구 규모는 45조 7000억 원으로 4조 500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액 중 3조 7000억 원이 초·중등 교육예산인 교육재정교부금 증가분이고 나머지 8000억 원이 고등교육 증가분입니다. 교육분야 재원배분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학생수의 변화와 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추이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학령인구수는 12% 정도 감소했지만 교육재정교부금은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아직 교사 1인당 학생수 등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구조적 관점에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예산간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지방재정입니다.

2012년도 지방교부세 요구액은 34조 5000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인데 국고보조금까지 합하면 지자체의 의존재원 규모는 60조 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의 재정여건 악화로 2010년말 현재 지방채 잔액이 28조 9000억 원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효율적으로 자금이 배정되도록 맞춤형 재원배분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농식품 분야와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입니다.

먼저 농식품분야는 4000억 원 감소한 17조 2000억 원,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분야는 1000억 원 감소한 15조 1000억 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총량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나 복지수요 증가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이 분야의 배분규정이 확대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부문별 조정을 통해 지출의 효과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주요분야의 배분방향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자면 정책목표가 상이한 분야와 부문간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해서 조화로운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사회 신을 고맙습니다.

김춘순 실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부 각 부처에서 이만큼 돈 달라는 얘기를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논의 과정에서 깎이고 더 주고 이럴 수는 있지만 좌우지간 이 정도 요구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인데 정부 각 부처가 요구하고 있는 것과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것이 과연 같을까, 사실 요새 물가 많이 오르잖아요. 물가 많이 올라가지고…… 월급은 일정한 데 돈 쓸 데는 많고 이거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때일수록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는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일단 정부 부처는 이렇게 돈 달라고 하는데 전문가들도 정부 부처처럼 생각을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우선 화면부터 한번 보시지요.

(동영상 상영)

지금 여러분들 다 보셨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생각할 때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돈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데인지. 그런데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역할을 하실 두 분 의원께서는 같이 VCR을 보셨는데 어디에 우선순위를 뒀냐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김광림 의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토론자 김광림 국가경쟁력을 위해서도 그렇고 여론도 그러시고 보면 결국 복지쪽에 제일 우선을 뒀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지속적인 성장, 돈을 벌 수 있는 미래에 대비하는 투자도 또 한편으로 늘려야 되고, 또 우리나라가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유일하게 G20 의장국이 되었는데 외국에 대해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원조는 인색하다. ODA 예산이 인색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이쪽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선 복지부분은 제일 많이 늘리되 일 중심, 사람 친화적인, 특히 사람 중에서는 중산층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아이 키우시는 분, 어르신, 생활이 어려운 분, 서민분들, 다문화, 장애를 가지신 분 이런 분들에게 따뜻하게 늘릴 수 있는 쪽에 돈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쪽에서는 R&D가 제일 많이 늘려야 되겠고, 그리고 기후변화에도 대비하고, 녹색성장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국력을 유지하고 나라 안전을 도모하는 쪽에 ODA 예산, 그리고 북한이 있기 때문에 국방부 예산이 적게 증가되었습니다마는 이쪽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쪽도 적게 요구되었습니다마는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FTA 이런 것도 충실하게, 착실하게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예산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신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강기정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토론자 강기정** 김광림 의원 말씀 들으니까 2012년 예산은 아무 쟁점도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아까 VCR 처음 시작할 때 아마 보건복지 노동 쪽에 34%,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에 20%, 교육에 20% 이렇게 재정전문가들이 꼽고 있는데 저는 오늘 권오을 사무총장께서 예산은 정부 의지의 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평소 정치의 핵심은 한정된 예산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는가가 정치의 요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정부의 의지이고 우선순위 배정의 문제라면…… 모든 것이 다 예산이 필요하지만 예를 들면 지난 3년 동안 4대강을 해야 되겠다 해서 22조를 투입했던 것은 이명박식 정치 아니냐 보여지고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볼 때는 결국 그 예산이 그 시대의 상황, 그 시대의 상황을 담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이고 강이 범람하고 홍수가 지면, 실업극복을 위해서 4대강 예산을 하듯이. 그러면 지금은 뭐냐? 지금은 민생과 서민이라고 통틀어지고 있는 불안, 실직, 일자리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 이런 데에 우선 중심 배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우선배치 된다고 해서 다른 예산을 전액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런 점으로 볼 때 SOC 예산 같은 것은 더 줄여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최근에 민주당 예결위 간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내년 예산을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교육예산 이런 거 4대강 때문에 참아라, 4대강만 끝나면 많이 올려주마 그랬는데 정작 8·15 때 긴축재정 얘기를 하면서, 균형재정 얘기를 하면서 예산이 없더라 이겁니다. 아무튼 SOC는 더 줄여야 될 것 같고.

R&D는 미래예산이기 때문에 늘리는 것에 동의하는데 중복투자, 결산심의해 보니까 많이 중복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었고.

등록금 예산은 부처 예산을 보니까 많이 감해져 있는데 이거 많이 올려야 될 것 같고, 중소기업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시 이따가 말씀드리랍시다마는.

결론적으로 제 얘기는 시대상황에 맞게 주요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사회 신을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두 분 다 시간을 조금 더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요구현황이 화면에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지요? 이것 죽 한번 보십시오. 이것 보시는데 지금 가장 눈에 띄는 것이 R&D분야, 강기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10% 넘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전문가들에게 한 조사 자료를 제가 어저께 집에서 열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전문가들이 줄여야 될 첫 번째로 꼽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0% 넘는 증액이 된다? 이것이 좀 헛갈리고 있는데 박태규 교수께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토론자 박태규 보통 R&D라고 하면 우리의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잠재성을 확충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R&D에다 투자한다고 하면 많은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이나 전문가들이 R&D이기 때문에 이해가 된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R&D도 아까 발표에서 말씀하셨지만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는 예산편성을 했느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총체적인 총량만 봐서는 안 되겠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또 각 부처별로 경쟁적으로 R&D에 대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어떻게 예산당국이 조정할 수 있느냐? 또 국회가 그것을 얼마만큼 제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R&D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요구액의 증액비율이 14%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이해가 됩시다마는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보고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일반 공공행정에 대해서는 이것은 축소시켜야 되겠다는 얘기는 이것은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서는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의 공공서비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가 8.8% 증액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축재정을 주장해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정부 입장에서 볼 때도 이것은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서 모범을 보여서 다른 분야에서도 자제할 수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분야는 높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 신율 알겠습니다.

인건비 말씀하시는데 아까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께서 국방비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가들은 국방분야의 지출은 줄여야 된다고 했거든요. 국방분야의 지출 중에서도 상당수가 박태규 교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라고 하더라고요.

박정수 교수님,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토론자 박정수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일반 공공행정이 10% 넘는 요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오해를 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 지방교부세가 늘어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다 원리금 상환하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내년 정부안에 따라도 14조 정도가 예산수지가 적자가 되고, NABO 안에 따르면 19조 정도의 수지가 적자가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원리금 상환이 따라줘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원금과 이자가 일반 공공행정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일반 공공행정이 전부 다 인건비는 아니고 일반적인 것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방분야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국방개혁안을 얘기하면서 사람에 의한 국방보다는 시스템에 의한 국방, 기계화에 대한 국방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인건비 비중이 50%가 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방개혁을 좀더 효율화 하고, 무기체계도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최근에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들도 있었지만 조금 더 투명하게 조금 더 체계적인 국방 R&D의 투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강기정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SOC 부분이 어딘가는 줄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주어진 규모 속에서 건전하게 잘 쓰려고 하면 어딘가는 줄어야 된다고 하면 SOC 부분이 줄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 많은 칸막이가 우리 재정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방교부세도 그렇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반드시 그만한 돈이 지금도 가야 되는가? 학령인구는 계속 줄고 있는데 지방교육이라고 해서 초중고에 들어가는 예산을 법에 의해서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돈이 그대로 내려가야 되는, 계속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의 재정 구조개혁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은 과감하게 국회에서 손을 봐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 신울 알겠습니다.

지금 박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반 공공행정이라는 것이 인건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다책정된 것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기회를 드리구요.

아직까지 발언 안 하신 두 분 계십니다. 지출을 어쨌든 늘리거나 줄여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더 듣고서 토론을 하려고 하는데 먼저 온기운 위원께서는 어떤 부분을 늘려야 되고 어떤 부분을 줄여야 된다고 보시지요?

○토론자 온기운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제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평창올림픽을 유치했는데 그것이 2018년에 개최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반영이 조금씩 조금씩 되어야 할 텐데 그 부분이 상당히 조 단위로 들어갈 텐데 이 부분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이따가 누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지출구조를 짜야 될 텐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들어가면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줄여야 될 부분은 무엇보다도 사실 복지쪽에서 정말 꼭 늘려야 될 복지는 늘려야 되겠지만 불필요하게 늘리는 부분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흔히들 말하는, 죄송합니다마는 3+1. 특히 3쪽에서 과연 이것을 정치적인 논란이 상당히 될 텐데…… 강기정 의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길게 보면 앞으로 재정이 많이 투입해야 될 부분이 건강보험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고 장기노인요양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2020년 이후 되면 고령화 문제 심각해진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선심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부분에서 복지정책을 취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줄여나가야 될,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신울 알겠습니다.

복지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년 대선에서도 서로 복지하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구요.

자, 김유찬 교수님.

○토론자 김유찬 복지는 조금 이따가 말씀하신다고 하니까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사회 신율 지금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토론자 김유찬 줄여야 되는 분야로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R&D하고 SOC 쪽이 줄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요소를 말씀드리면 R&D의 중요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 분야라는 특성이 인적인 하부구조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다 돈을 갖다 붓는다고 해서, 인풋이 늘어난다고 그 비율만큼 아웃풋이 늘어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투자가 과해서 비효율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 김춘순 실장님 자료에서 정확하게 잘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단번에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싶지만 실제로 그렇게 잘 되는 것이 아니니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SOC 투자가 굉장히 큰 중요한 분야인데 우리가 줄여들고는 있지만 SOC 예산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기능으로 보면 건설산업분야에다 우리 정부가 숨겨진 보조금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이것이 자유시장경제 원리에도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 예산을 줄인다고 하지만 정부 예산만 가지고 SOC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정부 예산에 들어있고 공기업인 도로공사를 통해 가지고 하는 민자사업에서 주로 많이 해요. 민자사업은 정부 예산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다만 민자사업하고 계약하면서 손실이 나면 이것을 정부가 보상해 주도록 하기 때문에 결국 비용적인 사업분야에도 민간기업들은 기꺼이 뛰어들려는 자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법제가 되어 가지고 정부가 손실을 보상해 주는 행위가 굉장히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한하도록 해야만 우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지 않는, 결국 보상해 주는 재원은 정부 예산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신율 알겠습니다.

제가 일단 온기운 위원께서 여쭙보신 애가지요. 평창올림픽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분이 답변해 주시겠어요?

김광림 의원님.

○토론자 김광림 아마 평창올림픽은 이럴 겁니다. 주로 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능으로 보면 평창올림픽이지만 분야로 보면 SOC 쪽에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SOC가 한 21조 되는데 그 속에 상당히 들어가 있고. 문화체육관광이 한 4조 정도 됩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해외홍보한다고 하면 외교부 쪽에도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다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특히 내년도 되면 설계하고 이런 쪽에 되기 때문에 금액이

크게 들어가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창올림픽은 민족의 대제전인데 잘 지원되어서 되도록 해야지요. 특히 이것은 여야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강기정 간사님도 확실하게 지원……

○**토론자 강기정** 이번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속초하고 도로 내는 것은 아직 예타나 이런 것이 안 올라온 것 같아요.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국회에서 다룰 때, 아직 넘어오지 않았으니까 언급이 안 됐습시다마는 넘어오면 평창올림픽은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 신율** 그리고 아까 나왔던 얘기, 우리가 죽 들으면서 나왔던 얘기가 일반 공공행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박 교수님은 조금 다른 의견이신 것 같은데 박태규 교수님은 아까 다른 말씀이 있으셨지요?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나머지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토론자 박태규** 제가 아까 공공행정 분야가 대개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새로운 욕구가 발생한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도 늘어나야 하는데 단지 내년도 요구액을 보면 인건비가 8.8% 오른다. 상당히 요구액 증가율 7.6%보다 높은 거지요. 물론 신규 채용하는 인력들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인건비 상승률이 과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곳에 대고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놔두고는 어렵지 않느냐,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런 제가 이의를 단 것입니다.

○**토론자 박정수** 제가 우선순위하고 선택과 집중 얘기를 하면서 못 다한 말씀 하나만 더 드리면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본인데 자본 중에서 우리나라 SOC가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분야가 줄어들게 되는데 특히 민간쪽이 할 수 있으니까 정부가 덜 해도 되겠다는 부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제는 사람에 투자할 때다라는 부분이 강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김광림 의원님께서도 우리가 결국은 예산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데 세금의 원천은 나라가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지속가능하게 경제성장이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밖에 없다고 했을 때 사람에게 어떻게 투자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교육예산이나 고용쪽의 예산에 있어서 상

당히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생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대학교육이라든지 특히 먼저 헤드스타트라고 해 가지고 영아 유아에 투자가 되면 그것이 결국 사회적으로 가져오는 혜택은 굉장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초중고에 집중되어서 투자되는 바람에 지금까지 우선순위가 미루어져 왔던 유아교육, 대학교육, 평생학습, 그리고 고용과의 연계. work to school, school to work 하는 부분 쪽에 예산심의하실 때 필요한 부분에는 도맡게 보태주셔야 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회 신율 김광림 의원 말씀하십시오.

○토론자 김광림 한마디만 더 보태면 인건비 자체에 단가를 늘리는 것은 세심하게 보고 심의할 때 조심해야 되지요. 인상한다든지…… 그러나 예를 들면 복지부분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전달하는 사람들의 2006년부터 5년 동안 대상자는 2배 이상 늘었는데 담당하는 사람은 그대로 있거든요. 이 부분에 깔때기 현상을 펴주기 위해 가지고 늘려야 되겠다, 그것도 인건비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단가를 늘리는 것은 신중해야 되고 숫자를 늘리는 것은 보고 미래 나라경영에 맞도록 여유를 가져야 된다, 신축성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 신율 강기정 의원.

○토론자 강기정 공공행정 분야 증액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것은 경제성장률을 4.5% 기준으로 할 때, 오늘은 대체로 3%대까지도 예측된다고 할 때 보면 지방교부세 총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이 과정에 일반 공공행정 비용 중에 내년 2개의 선거를 앞두고 선거비용이 상당히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 선거비용은 심의과정에서 이미 깨끗한 선거제도가 많이 정착됐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지 않겠는가, 전반적으로 일반 공공행정비는 지금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낮아지고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회 신율 자연스럽게 얘기가 복지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 하실 말씀 많지요. 요새 복지문제가 좌우지간 화두입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고 내년 대선에서도 복지문제에 관한 논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새 잠시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하도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복지논쟁이 수그러드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복지로 얘기, 넘어가보지요.

먼저 복지분야 얘기에서는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정치분야겠지요. 정치권에서 두 분이 나와 계시는데 두 분의 말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강기정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토론자 강기정** 우선 여는 의미에서 드리면 복지가 상당히 넓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김대중 정권 들어서면서 생산적 복지 얘기하면서 복지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한나라당 의원연찬회에서도 복지논쟁을 생산적으로 가져가자고 정리하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넓은 의미의 생산적 복지비를 늘리는 것은 두 말할 필요도 없고, 대신 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만이 저항이 없을 것 같다. 이 점은 동의합니다. 지금 일선에서 많은 복지예산이 내려가는 과정에 부분적으로 매우 전달체계가 흐트러져 있거든요. 중복되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전달체계의 약간의 잘못이 전체 복지비 부담의 거부감으로 오는 것은 옳지 않겠다. 그래서 복지비는 넓은 의미에서 계속 늘어나야 될 것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현 정부 들어서 의무지출 증가 이상으로 복지비가 늘어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전에 국민의 정부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져서 복지비가 확 늘었던 것, 참여정부 때 기초노령연금법이 만들어져서 확 늘었던 것에 비해서 현 정부에서는 특별히 복지비 자체의 단일양이 늘어나지는 않았고 단지 자연증가분이었다. 지금 무상교육이나 무상의료나 무상보육의 문제를 정치권이 제기하면서 포퓰리즘이냐 아니냐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늘어난 것은 없다, 자연증가분이 없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사회 신율** 김광림 의원.

○**토론자 김광림**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국민 모두가 복지예산 증가율을 가장 크게 해야 된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속에 들어가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 서너 가지 조심해야 되는데 유사·중복 수급, 제가 지방자치단체에 가서 보니까 부처별로 다른 복지예산이 있어 가지고 수당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2개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까지 복지예산이 돈 형편에 맞춰서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으로 해야 되겠다. 될 수만 있다면 교육하고 합쳐 가지고 20대에서 쓰는 등록금 문제, 30대는 아이 낳는 문제, 40대는 보육교육 해서 아

이 키우는 문제, 50대는 주택문제, 60대는 연금, 은퇴문제 이런 생각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어가는 전초의 해가 내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두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지가 중앙정부에서 일정한 돈을 지방에 주면 지방이 지방비를 보태서 매칭해서 내보내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안을 내려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께서 법안을 내놓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복지정책의 책임은 중앙정부가 최종적으로 지는 것으로, 그래서 이런 쪽으로 사전조율해서 중앙과 지방이 책임을 미루면서 사각지대에서 어려워지는 분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쪽에 예산심의 하면서 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신울** 제가 50대거든요. 그런데 주택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등록금 문제도 들어갑니다.

○**토론자 김광림** 20대에 등록금 문제. 아, 아버지 문제에서……

○**사회 신울** 그렇지요. 물론 애들이 알아서 등록금 문제를 하면 참 좋은데 아무래도 부모로서 부담이 가지요.

아까 김유찬 교수님 복지문제 나중에 말씀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할 것 말씀하세요.

○**토론자 김유찬**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복지분야에서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어떤 데에서 빼서 더 필요한 분야에 더 많이 집중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모든 분야에서 부족한 상황에서 한 군데에서 뺀다, 아니면 현재 수준에서 머문다고 하면 그 부분이 굉장히 아프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수준이니까 복지에산을 전체적으로 크게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적인 인식을 복지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쓰고 없어지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복지의 역기능 그러니까 결국 재정에 부담을 주는 거다 이런 데 너무 한쪽에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복지제도의 확충이라는 것은 경제적 기능을 보면 개인차원에서 스스로 대비해야 될 필요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으면 개인들이 좀더 쓸 수 있고, 그래서 총수요를 늘려주는 효과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또 시장경제에서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을 사회안전망에서 받아주게 되면 경제가 보다 경쟁적으로 가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결국 이것이 시장경제를 보완해 주는 역할이 사회안전망 혹은 복지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지제도의 순기능 자체를 더 잘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 신율 박정수 교수님.

○토론자 박정수 김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지전달체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여러 부처에서 동일한 유사 중복 사업을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라는 갈때기를 통해서 전달한다고 봤을 때 좀더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지출효율화 측면에서 반드시 노력해야 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데 특히 통합복지정보시스템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김광림 의원이 얘기하신 중복부분도 가려내면서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면 그 사각지대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통합복지행정정보시스템은 좀더 빨리 그리고 제대로 구축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소위 복지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금도 아닌 것이 사실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기금화를 해서 우리가 제대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강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그냥 자연증가분에 치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집중되어야 되는 노인복지라든지 장애인 복지에 소홀함이 없는지, 이런 부분.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사실 어느 정도까지는 연금개혁을 해 오고 있지만 아직도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과 같이 지금의 수준을 가지고는 매년 상당부분 예산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는 연금구조를 과연 언제까지 가지고 갈 것이냐? 우리가 지속가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공무원연금이라든지 군인연금과 같은 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같이 언제인가 수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기적인 연금개혁 이런 부분도 정기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신율 박태규 교수님.

○토론자 박태규 사실 사회의 복지수요에 대한 욕구를 담아야지요. 그것이 아마 현대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복지예산의 증가가 과연 복지정책의 성공을 보장하느냐? 그것은 별도의 별개의 얘기입니다. 물론 예산의 증가가 복지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정부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잠깐 복지전달체계를 말씀하셨지만 사회 복지부분은 상당 부분 민간에 위탁 공급을 하고 있는 형태이고 그것은 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복지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데 그것을 전부 조직을 키워서 공급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민간의 위탁을 통해서 공급이 점점 늘어날 텐데 과연 예산, 재

정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위탁공급자들의 효율성이 얼마만큼 유지될 수가 있는가. 과연 정부가 생각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민간 비영리조직 측면에서 그 부분도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 분야 예산이 92조 6000억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100조를 바라보는 날이 머지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복지에 산의 경제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중요한 기능이 과연 90조가 넘는 재정을 지출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로 하는 합당한 일자리를 92조가 창출해 내면서 복지정책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복지선순환이라는 의미는 물론 소비의 증가, 복지정책의 수혜자들이 소비의 증가로 인한 경기의 선순환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복지재정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합당한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마 예산과 재정 측면에서 충분히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사회 신울 알겠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토론자 강기정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박태규 교수님이 하셨다고 보는데 복지가 일자리와 생산적 기능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는 문제가 하나의 논점이고, 또 하나는 설령 그런 일자리와 생산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재정의 규모상 어려움이 있다는 두 가지 쟁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이런 토론을 통해서 또 올해 예산 과정에서 복지는 이런 일자리와 생산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단 공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말씀은 복지전달체계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수급의 문제나 전달체계 속에 들어와 있는 수급자 문제가 112개 사업 17조 원 정도가 아주 우리가 전달체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중복 이런 이야기 속에 범위한 것 같은데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개선중의 핵심이 복지행정전문가가 증대해야 된다. 즉 일선에 보면 민간에 위탁하는데 정부가 책임 있게 복지전달시스템의 중심으로 딱 들어서면, 그러려면 결국 공무원 수의 증대인데 순증으로 해야 될지 다른 공무원을 줄여가면서 이것을 늘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복지전달체계 개선의 핵심은 저는 그런 복지행정전문가들의 증대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신울 김광림 의원.

○**토론자 김광림** 복지 관련해 가지고 복지 일반론으로 죽 말씀하시는데 속에 들어가면 역시 제일 급한 것이 저출산문제하고 고령화 속도가 빠른 문제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잘 아시겠습니까라는 출산율이 한 사람이 1.23명 낳아서 세계에서 제일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아이낳기 편한 쪽으로 갈 수 있는 쪽에 재원이 집중되어야 되겠고, 또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내는 쪽에 재원이 집중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복지부분의 증가율이 상당히 높아야 되고 제일 윗수준에 있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복지쪽은 한 번 돈이 들어가면 줄일 수가 없습니다. 4대강은 금년에 3조 3000억에 일반재정 쪽에서 넣어 가지고 했지만 끝나면 내년에는 1000억이 들어갑니다. 3조를 스톱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달체계라든지 중복방지라든지 이런 쪽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공한 핀란드라든지 스웨덴, 덴마크 쪽은 잘 되고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부담도 늘었다. 부담도 늘리면서 복지수준을 높였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사회 신율** 박 소장님.

○**토론자 박정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오고가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장기전망에서부터 얻어야 될 주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복지가 지금 30대, 20대, 10대 이 사람들이 노년이 되면 재정에서 받아갈 게 없습니다. 이것을 먼저 시정하고 나서 반값 등록금도 좋고 무상급식도 좋고 여러 가지 말이 나온 것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 다 해 봤는데 막상 이 사람들이 늙고 나서 보니까 낼 것은 다 냈는데 받아갈 게 없는 상태가 된다면 이게 무슨 복지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다 좋습니다마는 재정여건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모두 사실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의견의 방향이 약간씩 달라서 그렇지.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120분 토론한다고 해서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이 갑자기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최소한도 이런 방향성이 있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만 의견이 모이면 오늘 시간이 정말 귀중한 시간이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거의 다 됐지요. 마무리 발언순서인데 일반적인 토론이면 각 분한테 한마디씩 하시지요. 그러는데 오늘은 그러지 않고 제가 한 분 한 분씩 여쭙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야 될 부분이 이른바 국회의 견제기능입니다. 지금 9월말 정도 되면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해서 정부 예산안이 확정되고 국회가 심의를 할 텐데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회의 견제기능, 사실 국민들 세금 쓰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산 짜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어렵게 생각하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심을 잘 안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정말 예산심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되는지 한 분씩 여쭙보겠습니다.

먼저 박태규 교수님께 여쭙볼까요?

○**토론자 박태규** 두 분 국회의원님 계시는데 조금 안 좋게 들릴 수 있는 문제일 수 있는데……

○**사회 신율** 그런 말씀하셔야지요. 좋은 말만 하고 어떻게 삼니까?

○**토론자 박태규** 물론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예산심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려를 전혀 배제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00 정도가 있다고 하면 한 10 정도는 고려하시고 90은 경제적인 사회적인 기능을 죽 감안하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면 물론 예산심의기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힘드시겠지만 전체적인, 거시적인 측면보다는 프로그램 하나하나에 들어가는 미시적인 접근을 해 주시면서 예산을 심의하시는데 그것은 예산심의기간 동안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도 그 예산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또 집행된 이후에 그 프로그램을 직접 심의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국회가 항상 정부의 사업을 가지고 청문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돌아갈 수 있는 국회가 된다고 하면 한국경제의 예산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님들께서 많이 배우시고 공부하시고 질문하시고 토론하시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 신율** 박정수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토론자 박정수 무엇보다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 이와 같은 「나라살림 대토론회」도 국회에 산정책처가 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러한 공론의 장이 제대로 펼쳐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예산정책처가 기능하는 나라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구나 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60일이라는 국회 예산심의기간을 가지고 320조가 넘는 방대한 예산, 그것도 총량 얘기하시는 거시 얘기하고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부문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사업인가, 필요한 사업인가, 그렇게 밖에 쓸 수는 없는가 하는 부분까지 가능할 것인가? 그것도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임위원회도 아니고 특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상설화는 되어 있지만 1년 임기로 50분의 의원님들께서 한꺼번에 심의를 집중적으로 하시는데 그것이 얼마나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많은 재정학자들이 얘기하는 예산결산위원회는 어떻게 되었던 상임위원회화 되는 것이 필요하겠나, 이와 같은 제도적인 개선은 차제에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겠나.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아마 예산심의기간이 60일이라는 헌법적인 제약요건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가 말로는 어떻게든 헌법을 지켜주십시오 해서 12월 2일까지는 반드시 예산이 통과되게 해 달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리고 정치는 배제해 달라고 얘기해도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한 전문성의 확보부분이 아닐까 이 부분을 강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가 재정의 낭비부분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의 핵심은 아마 지방재정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가예산에서 지방재정부분이 일반행정 부분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어떠한 제도적인 개선도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지방이 국가재정에 의존해서 살림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스스로 살림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적인 개편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244개 지방자치단체들이 살림을 살면 나머지 부분을 메워주는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마루를 깔아주는 기본을 하고 추가적인 부분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로 살림을 살 수 있는 제도적인 개편, 이 부분 역시 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주셔야 할 제도적인 개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신울 감사합니다.

지금 박정수 교수께서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의 보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춘순 실장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들으신 대로 제도적 법적 측면에 있어서의 보완책이요.

○발제자 김춘순 박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덧붙이자면 예산의 연중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재정배분 방향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통상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국회는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많은 선진국에서는 의결사항으로, 재정총량과 재정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에서 의결사항으로 많이 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정을 결정하고 기본방향을 정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반기에 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서 먼저 심의 의결하고 재정운용계획에 재정총규모와 재정배분방향 그리고 기타 주요한 재정지수들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부처가 예산을 편성해서 정기국회 때 국회에서 부처별 심사를 받는다면 예산심사기간도 길어지고 주요한 재정비율과 계획에 대해서 국회에서 국민들이 직접 공개적으로 논의를 통해서 정해질 수 있는 장점과 국회 예산심사기능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회 신울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예산 짜고 이런 것이 시민단체, 언론의 역할 감시 그리고 어려운 얘기를 쉽게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 분씩 나와 계시지요. 먼저 온기운 위원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토론자 온기운 사실 우리 국민들께서는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국민들께서 그래서 과연 나라살림에 쓰는 돈이 어떻게 조달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아시지 못하고 계시는데 언론에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부각시켜서 과연 돈이 나올 여유가 앞으로 얼마나 있는 것인지,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 많이 쓰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많은데 사실 우리 형편을 소상히 알리고 또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을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정치권에 대해서는 특히 국회의원 여러분들께 거북하게 들리실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 내년같이 총선 대선이 있을 경우에는 여야가 따로 없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여야가 모두 앞으로 국가재정이 걱정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 여당을 질타해야 되고 또 야당에 대해서 빼있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글도 써야

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은 국민과 정치권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국가제정을 건전하게 이끌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회 신울 감사합니다.

김유찬 교수님.

○토론자 김유찬 예산을 결정하는 일이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이 잘 결정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예산내용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정부가 잘 설명해 주어야 되고, 언론이 중요한 내용을 부각시켜 줘야 되고, 그것이 가끔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논점을 부각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론이 잘 하면 혹은 정부가 잘 하면 시민단체가 나설 일이 별로 없어지죠.

그런데 그것 말고 제가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시간을 안 주셔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박종규 실장께서 발표하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경제 핵심문제가 재벌기업에서 중소기업하고 가게, 여타 부분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못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하셨고 그리고 결국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아주 심각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고, 다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냐고 생각할 때 제 생각에는 그것이 법인세 인하를 유보하고 투자세액공제 혹은 고용투자세액공제를 확대하는 것이 메시지를 잘 전달하는 것이라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법인세 인하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지와 상관없이 기업이 그 돈을 어디에다 쓰는지와 상관없이 수익이 생기면 그냥 법인세 인하를 통해 가지고 이익이 더 늘어나고 세금을 덜 내게 만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투자세액공제라든지 고용투자세액공제는 고용과 투자를 늘릴 때 거기에 연계해서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박종규 박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자라고 한다면 제도를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은 반대방향이다. 법인세 인하를 계속 가고 투자세액공제를 줄이자라고 하는 것은 반대방향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 신울 고맙습니다.

애기 죽 들으셨지요? 여기서 실제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액션을 취하실 두 분 의원 남으셨는데 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애기 죽 듣고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먼저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

○**토론자 김광림** 우선 국회예산제도의 심의 전의 합리화, 이것이 박정수 박사님께서 예결위 상설화를 상임위화 하자. 찬성입니다.

그다음에 박태규 교수님 말씀하셨던 예산심의도 중요하지만 집행도 챙겨야 된다, 청문회를 하든지. 찬성입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예산에 증가율과 이런 것을 의결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데에는 고려해야 할 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경제위기가 올 수도 있고 우리 생각으로 안 되는 외적 변수들이 많은데 그것이 사실 국회 본회의 통과시키기 어렵습니다. 몇 달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더라도 보고를 상설화해 가지고 예결위든지 상임위든지 중기재정계획을 보고를 상설화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나 추가할 것은 우리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동의 없이 예산 각 항목의 경비를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깎는 것은 마음대로 깎지만 증액은 정부 동의에 의해서 하라 이렇게 되는데 반성해보면 감액 항목보다는 증액 항목이 많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공개하면서 투명하도록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에 결산을 강기정 민주당 간사님께서 결산위원장을 맡으시면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8월에 법을 지켜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예산도 헌법상에 정해진 12월 2일까지 여야 협의를 해 가면서 고민하면서 그 이전에 밤을 새워서 토론하면서 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경우에도 재정건전성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2014년에 되어 있는 재정수지균형을 2013년에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토론된 내용들, 복지부문, 미래대비 투자, 법인세 문제 이런 것들은 담아서 심의과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신울** 감사합니다.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 말씀해 주시지요.

○**토론자 강기정** 결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치인들의 정치문제가 되어 있지 않은 예산, 국민 눈높이에서 예산을 얼마나 잘 합의 처리하는 것인가가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일방처리가 되다 보니까 특히 그런 합의 처리하는 것도 아주 관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결산심사를 해 보니까 예산을 결산하고 연계하겠다고 하는데 연계라는 것이 시기적으로 정기국회 전에 처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었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이번에 결산하면서 1100여건의 시정조치, 5건의 감사원 감사 이렇게 결정했는데 이것은 예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는, 별로 나아지지 않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봤더니 편성권이 정부에 있고 국회에서는 헌법 절차에 따라 통과시켜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예결위 상설화 문제라든가 결산심사일을 6월 전에 가는 문제라든가 상시보고라든가 예산심의기간을 늘리는 문제 이런 것은 다 동의하고 좋다고 봅니다.

이번에 결산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매년 정보비에 대한 투명성 제고가 지적만 됐지 해결이 안 됐다. 또 국가재정법에 따라 검찰예산이 독립 편성되어야 하는데 안 됐다. 이것이 지적만 되고 결국 시정이 안 된 일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고 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마는 반복되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국회 문제만도 아니고 사실은 정부가 국회의 이야기대로 국회가 결정하는 대로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개선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튼 국회와 정부와 그 사이에 있는 예정처, 국회편이기도 하지만 예산정책처가 참 역할에 많다는 생각을 이번에 해 봅니다. 그래서 예정처, 국회, 정부가 합심해서 국민의 눈높이 예산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 신을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계를 딱 보니까 120분간 토론을 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전문성이 뛰어나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정말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진짜 고민하는 곳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 국민의 의견이 가감 없이 정치권에서 잘 전달되어서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어렵다고 예산 자꾸 외면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국민세금입니다. 우리 돈 어디에 쓸지 우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시간 동안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2시간 동안 말씀해 주신 전문 패널등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 박수)

언론보도 모음

<국회예산정책처, 올해 두 번째·나라살림 대토론회>

국회예산정책처, 올해 두 번째·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자원배분 개최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오는 9월 5일·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자원배분·(이하 "나라살림 대토론회")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함.

이번 나라살림 대토론회는 지난 3월 열렸던·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토론회로서, 나라살림이 지속적인 성장과 민생안정을 반영하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전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됨.

또한 2012년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국회의 재정복지"를 전달하기 위해, 정기국회 개최와 동시에 예산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임.

신을 교수(명지대)의 사회로 진행되는 대토론회는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이 "2012년 경제전망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2012년 예산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함.

이어 김광림 국회의원(한나라당/ 국회예결위 위원), 강기정 국회의원(민주당/ 국회예결위 간사), 박태규 연세대 교수,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소장, 윤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유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등이 토론단으로 참가하여,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자원배분"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 및 의견개진을 나눌 예정임

한편, 토론회 도중 예산정책처에서 실시한 '2012년 자원배분 방향'에 관한 재정전문가 50인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끝)

출처 : 국회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 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출처 : 국회

[2011-08-29 16:33 00 송고]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내달 5일 "나라살림대토론회" 개최

2011-08-29 17:21:59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내년도 예산 편성안을 심의할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달 5일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다.

이번 나라살림 대토론회는 올해 3월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 개최하는 토론회로, 나라살림이 지속적인 성장과 민생안정을 반영하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전문적이면서도 실질적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적절한 예산편성과 불요불급한 예산 배정 여부 등 효율적인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국회 역할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시사평론가인 신을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2012년 경제전망과 재정운용 방향)과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2012년 예산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방향)이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어 한나라당 김광림, 민주당 강기정 의원 등 국회 예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과 박태규 연세대 교수,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소장,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등이 패널로 참석, 심도있는 토론을 전개할 예정이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회예산정책처, 내달 5일 `나라살림 대토론회`

입력시간: 2011.08.29 16:38

[이데일리 유용무 기자]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음달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나라살림 대토론회(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자원배분)`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울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열리는 이번 대토론회는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이 `내년 경제전망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김춘순 예산분석실장이 `내년 예산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광림(한나라당)·강기정(민주당) 의원, 박태규 연세대 교수,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소장, 온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등이 나온다.

유용무 기자 winner@

국회, 내년도 정부예산 배분 방향 '틀' 잡는다

내달 5일 '나라살림 대토론회'..재정건전성 회복 등 논의

입력 : 2011-08-29 17:35:00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방향을 잡기위해 전문가들이 국회에 모여 대토론회를 펼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년도 예산 총량과 자원배분을 논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내달 5일 오전 2시 국회의 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토론회에서는 나라살림이 지속적인 성장과 민생안정을 반영하면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제안을 수렴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예산안 편성단계에서부터 국회의 재정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앞서 예산 논의를 시작한다.

토론회는 신을 명지대 교수 사회로 진행되며, 국회예산정책처 박종규 경제분석 실장이 '2012년 경제전망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김훈순 예산분석실장이 '2012년 예산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를 실시한다.

또 국회 예결위 소속인 한나라당 김광림·민주당 강기정(간사)의원, 박태규 연세대 교수,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소장,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등이 토론과 의견을 개진한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2012년 자원배분 방향'에 대한 재정전문가 50인의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한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s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회예산처, 9월 5일 나라살림 대토론회 개최

한형용 je8day@cnews.co.kr 2011-08-30 08:43:49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음달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나라 살림 대토론회(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자원배분)'를 개최한다.

지난 3월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이어 개최되는 토론회로 나라 살림이 지속적인 성장과 민생안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이 '내년 경제전망과 재정운용 방향', 김춘순 예산분석실장이 '내년 예산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방향'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할 예정이다.

신을 명지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광림(한나라당)·강기정(민주당) 의원과 박태규 연세대 교수,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소장,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정치] 국회예산정책처, 5일 '나라살림 대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11.09.01 17:48 최종수정 2011.09.01 17:48

[아시아경제 김성근 기자]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오는 5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의 총량과 자원배분 문제 등을 논의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것. 나라살림이 지속적인 성장과 민생안정을 반영하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전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제안을 수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신용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대토론회에는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이 '2012년 경제전망과 재정운용 방향',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2012년 예산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이어 김광림 국회의원(한나라당/ 국회예결위 위원), 강기정 국회의원(민주당/ 국회예결위 간사), 박태규 연세대 교수,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소장, 윤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유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김성근 기자 skzero@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프린트하기

국회예산정책처 5일 '나라살림 대토론회' 개최

2011-09-02 16:03:24

김민호 기자 | ✉ jangbm@todaykorea.co.kr

[투데이코리아=김민호 기자]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오는 5일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지난 3월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하는 것으로 나라살림이 지속적인 성장과 민생안정을 반영하도록 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전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제안을 수렴해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9월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이 토론회를 갖게 된 것은 2012년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국회의 재정의지를 정부에 전달하기 위함이다.

신율 교수(영지대)의 사회로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이 '2012년 경제전망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김춘순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이 '2012년 예산의 효율적인 자원배분 방향'에 대해 각각 발제한다.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자원 배분'에 대해 김광림 국회의원(한나라당·국회에결위 위원), 강기정 국회의원(민주당·국회에결위원 간사), 박태규 연세대 교수, 박정수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소장, 윤기운 매일경제 논설위원, 김유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등이 토론단으로 참가한다.

토론회에서는 예산정책처에서 실시한 '2012년 자원배분 방향'에 관한 재정전문가 50인 설문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내년 경제 악화” 60.0%

국회에산정책처, 재정전문가 50명 설문
“물가 더 오른다” 70.0% ... “재정긴축해야” 48.0%

국내 재정전문가들은 물가가 더욱 오르는 등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도 재정은 긴축적으로 운용할 것을 주문했다.

5일 나라살림대토론회에서 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9~12일까지 팩스와 이메일로 공공기관과 지자체 산하 연구기관, 민간연구소, 재직연구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등 50명의 재정전문가를 대상으로 ‘2012년 재정총량 및 자원배분에 관한 설문조사’

를 실시했다.

내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크게 악화될 것(12.0%), 약간 악화될 것(48.0%) 등 나빠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60.0%에 달했다. 20.0%는 올해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고 약간 개선될 것이라는 답변은 20.0%였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시각이 70.0%나 됐다.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답변이 34.0%, 소폭 상승을 예상하는 전문가가 36.0%였다.

재정운용에 대해서는 48.0%가 ‘긴축’을 주문했다. 24.0%, 28.0%는 확장이나 올해와 같은 수준을 요구했다.

가장 많이 지출비중을 늘려야 하는 분야로는 보건·복지·노동이 34.0%가 꼽았고 산업·중소기업·에너지와 교육분야에 대해서도 20.0%씩이 손을 들어줬다.

지출비중을 줄여야 하는 하는 분야로는 일반공공행정이 30.0%로 가장 많은 전문가들의 지목을 받았고 SOC(18.0%) 국방(14.0%)이 뒤를 이었다.

각 부처가 증액을 요구한 6개 분야 중 일반공공행정 외교·통일 국방분야에 대해서는 오히려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보건·복지·노동 분야에 대해서는 더 늘려줘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감액요청한 SOC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았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국회예산처 "재벌 과도한 사내유보 중과세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국회 예산정책처는 5일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과 관련,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의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라살림 대토론'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선순환을 회복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실장은 "핵심은 기업, 특히 재벌에서 중소기업과 가게 등으로 자금이 원활히 흘러가지 못하고 기업부문에 고여있다는 데 있다"며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가게소득이 제대로 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경제 양극화로 복지지출 요구가 급격히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자금이 기업에서 다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는 현상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Jun@yna.co.kr

(끝)

<저작권 자(c)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1-09-05 16:33 송고]

정갑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국민 의견 수렴해야”

국회예산정책처가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의 총량과 자원배분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요. 전문가들은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라 장기적 재정지출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태운 기잡니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를 앞두고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금융위기로 훼손된 재정건전성 회복 등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갑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민이 원하는 복지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안 편성 단계부터 국민 의견이 정부에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갑윤 위원장 /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편성 확정 이전 단계에서부터 국회와 정부가 활발히 정보를 교류하고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 반영할 수 있도록 함께 공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50년까지 세수는 그대로인 반면 세출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원조달을 위해선 세원확대가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감세 논의와 올해와 내년에 일을 도래하는 비파세·감면정책을 얼마나 정비하느냐에 따라 정부가 목표 하는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규 경제분석실장 / 국회예산정책처>

“한가지 바라는 것은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이런 균형재정 기초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길 기도하면서...”

경기안정화 효과가 거의 없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역시 완전 일몰종료하고 주요 주택과 토지 관련 비파세·감면 조치들 역시 실효성이 낮고 다른 정책과 중복됨으로 일몰종료가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경우에는 혜택이 서민층이 아닌 중상위소득자에게 편중되고 있는 만큼 점진적 축소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복지재정 등 장기적 재정지출이 소요되는 예산항목에 대해선 현행 5년이 아닌 30년 이상에 걸친 장기 재정수지 영향을 평가해 철회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새로운 복지지출의 재원으로 대규모 토목공사를 줄이자라는 의견에 대해선 SOC 예산을 줄이는 게 장기적 자원조달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계획성 없이 단편적이고 대중적인 세제 개편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중기 세제개편 방향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NATV 김태운 기자 / mabin@assembly.go.kr]

본 기사의 저작권은 NATV에 있습니다.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국회예산처 “과도한 사내유보금 중과세해야”

등록 2011-09-06 17:06

수정 2011-09-06 17:06

(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국회 예산정책처는 5일 중장기 재정건전성 대책과 관련해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의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라살림 대토론'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가 선순환을 회복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실장은 “핵심은 기업, 특히 재벌에서 중소기업과 가계 등으로 자금이 원활히 흘러가지 못하고 기업부문에 고여있다는 데 있다”며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가계소득이 제대로 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경제 양극화로 복지지출 요구가 급격히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자금이 기업에서 다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는 현상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ajnews.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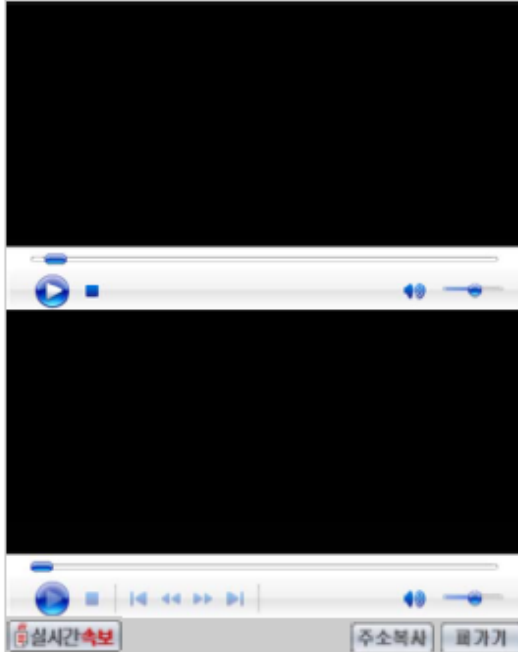
[© '한·중·영·일 4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AJU BUSINESS. ALL RIGHTS RESERVED.

국회 "내년 재정건전성 초점..복지지출은 확대해야"

국회 송곳 심사 예고, 무처 등 '예산확보 전쟁' 불가피

입력 : 2011-09-05 15:39:00



[뉴스토마토 조정훈기자] 재정전문가들은 내년도 국가재정의 안정 운용을 위해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선과 총선이 함께 치러지는 해인 만큼 각 부처를 포함, 정치권 등의 예산 요구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여 그 어느 때 보다 극심한 예산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더욱이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역시 앞서 실시한 전년도 결산 심사를 통해 드러난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거나 삭감키로 하는 등 민생안정, 재정건전성 회복에 초점을 맞춘 송곳 심사를 준비하고 있다.

◇ 재정전문가 60.0% 내년 경제상황 악화 '긴축 재정 강조'

이와 관련,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공공기관·지자체·산하연구기관, 민간연구소 재직연구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소속 전문가 등 50인의 재정전문가를 대상으로 '내년도 재정총량·재원배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 조사내용은 거시경제와 재정총량, 예산 편성 민주성·투명성, 분야별 재원배분 관련 사항 등이다.

이들 중 60.0%는 내년도 경제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답변은 20.0%에 불과했다.

이러한 인식은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에도 반영돼 이들과 70.0%는 내년도 소비자 물가가 올해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이들 대다수는 국가 재정의 안정을 위해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지난해 대비 내년도 재정기조의 경우 '긴축적이어야 한다'가 48.0%로, '확장적이어야 한다'(24.0%), '올해 수준이 적절하다'(28.0%) 보다 높게 조사됐다.

◇ "보건·복지·노동 지출 확대해야"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해 재정전문가들은 '2012년 예산요구안' 대비 지출 비중 증가가 필요한 분야로 '보건·복지·노동'(34.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20.0%), '교육'(20.0%) 등 순이었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지출 비중 증가가 필요한 이유로 이들은 양극화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과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장기 성장 동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상생발전, 신재생에너지 확보 등이, 교육 분야는 사교육비 감소, 대학 경영 정상화, 군등 교육 기회제공 등을 이유로 들었다.

◇ "일반 공공행정, SOC 지출비중 줄여야"

반면 지출 비중 축소가 필요한 분야는 '일반공공행정'(30.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SOC'(18.0%), '국방(일반회계, 14.0%)'등 순으로 조사됐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작은 정부 지향 등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SOC 분야는 낭비적 행정 지출 감축, 비효율적 투자 지양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정부 각 부처들이 요구한 내년 예산·기금의 지출 규모는 총 332조 6000억원으로 올해 총지출과 비교하면 23조5000억원(7.6%) 늘어났다.

지난해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예상했던 2012년 지출 규모(324조 80000억원)보다 7조 8000억원이 더 많은 수치다.

◇ 국회 예산 심의 시 송곳 검토 주문

최근 미국 신용등급 하락과 유럽발 재정 위기 등으로 인해 재정 건전성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면서 재정 지출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재정건전성은 수입을 확대하거나, 지출규모를 축소해 정부의 재정수지나 국가채무 규모가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나라살림 대토론회'에서는 한정원 국가 재정을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배분해 재정 건전성 확보와 국민 정책 수요 충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중복됐다.

박종규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은 "2013년 균형재정을 달성 이후에도 그 기초가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이 돼야 한다"며 "지출부문은 지속적으로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의무지출을 통제하고 수입부문은 유리한 세입기반 확대가 조세저항으로 인해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에 유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총수입 전망만 제시되고 중기 세제개편 내용은 전무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장기 세원확대를 위해 금융서비스 부가가치세 과세, 이자소득세율 인하, 교육세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훈순 예산분석실장은 "일부 분야 예산 요구안의 경우 최근 예산안 최종 편성단계와 국회 심의 단계를 거치면서 요구안에 비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한정된 재원을 주요 국책사업에 우선 배분한 후 기타 부문은 국회 심의 과정 등을 통해 증액하려는 각 부처의 전략적 행태에서 일부 비롯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예산안 심의 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뉴스토마토 조정훈 기자 hoon77@etomato.com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저작권자(c)뉴스토마토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국회예산처 “재벌 사내유보금 중과세해야”

적정유보금 초과 금액 대상 중과세 검토

기사입력 2011.09.05 19:05:54 | 최종수정 2011.09.05 19:05:54 | 오창균 | crack007@newdaily.co.kr

국회 예산정책처는 5일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과 관련해 “과도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의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라살림 대토론회’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기순순환을 회복하고 역동적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효과적인 재정건전화 방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실장은 “핵심은 기업, 특히 재벌에서 중소기업과 가계 등으로 자금이 원활히 흘러가지 못하고 기업부문에 고여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에서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가계소득이 제대로 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경제 양극화로 복지지출 요구가 급격히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자금이 기업에서 다른 부문으로 흘러가지 않는 현상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일몰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세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창균 (crack007@newdaily.co.kr) & 1

뉴스룸 > 정치/정책 > 정책

내년 복지에산 증가, 자연증가분에 그쳐

증액 필요, 장애인복지 소홀함 없는지 살펴야
vs "예산 증가, 복지정책 성공 보장과는 별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9-05 19:01:29



▲5일 국회의원과 대회의실에서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자원배분'을 주제로 열린 <나라살림 대토론회> 모습. ©에이블뉴스

내년도 복지에산 증액분이 대부분 의무지출사업의 자연증가분에 그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넓은 의미의 복지에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국회의원회와 대회의실에서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자원배분'을 주제로 한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국회예산정책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이 발표에 따르면 '2012년 보건·복지노동분야의 예산요구안'은 총 92조6천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의 86조4천억원 대비 7.2% 증가하고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7.6%를 하회하는 수준이나, 대부분이 의무지출사업 규모 증가에 따른 증가율로 드러났다.

복지예산안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와 보육료 지원, 4대 공적연금 지원, 건강보험 지원 등의 의무지출사업 예산이 59조3천억원으로 올해(53조8천억원) 대비 10.2%가 증가했다. 이는 결국 2012년에 신규로 도입되는 대규모의 복지예산사업이 없음은 물론, 계속 사업 또한 기존 내용에서 크게 변화된 바가 없어 의무지출의 고유 특성에 의한 자연증가분에 주로 기인한 것.

이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강기정(민주당) 의원은 "DJ정부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참여정부때 기초노령연금법이 만들어진 것과 비교하면 이 정권은 단지 자연증가분"이라며 "안

타관계도 현 정부에선 의무지출 증가 이상으로 복지예산이 늘어나진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예산은 현 시대의 상황을 담아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은 예산이 민생과 서민이라는 불안, 실직, 일자리 등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우선적으로 중심배치돼야 된다"며 "복지예산이 넓은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복지예산이 내려가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전달체계가 흐트러져 있고 중복돼 있다. 이런 전달체계 잘못이 전체 복지예산 부담의 거부감으로 작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복지전달체계를 정비하는 일이 동시에 이뤄져야만 (복지예산 증액에 대한)저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민간에 위탁되는 현재의 복지전달체계를) 정부가 책임있게 복지전달시스템의 중심으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그 핵심은 복지행정전문가 증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박정수 소장도 "복지예산의 자연증가분에만 치여서 실질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노인이나 장애인복지에 대한 소홀함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여러 부처가 동일한 유사중복사업을 결국은 지자체라는 깔때기를 통해 전달된다고 했을 때, 좀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면 지출 조율을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통합복지행정정보시스템이 이뤄진다면 중복(수급)부분도 가려내고 (복지)사각지대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다. 통합복지행정정보시스템이 좀 더 빨리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박 소장은 "복지예산 중 건강보험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기금도 아닌 것이,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이것도 기금화해서 제대로 심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들도 제시됐다.

연세대학교 박태규 교수는 "사회복지수요에 대한 욕구를 담는 게 정부 의무이긴 하나, 복지예산 증가가 과연 복지정책의 성공을 보장하느냐는 별개 부분"이라며 "예산 증가가 복지정책을 성공적으로 수용하는데 필요요건은 될 수 있으나 충분요건은 아니며, 정부 의지만 갖고 복지정책이 되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복지증가율은 높여야 한다는 건 맞지만 복지는 한번 돈이 들어가면 줄일 수 없다. 4대강 같은 경우는 스톱할 수 있지만 복지예산은 그렇지 않다"며 "핀란드나 덴마크 등은 복지수준을 높이면서 부담도 상당히 늘렸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한 "부처별로 다른 복지예산이 있어, 도시락 받는 사람은 한사람인데 두개 받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국회예산정책처 “경제 선순환구조 창출위한 정책 필요”

[아시아투데이=안정환 기자]국회예산정책처는 5일 “경제 선순환구조 창출을 위해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과다한 유보자금이 투자로 이어지고, 가계저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및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의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나라살림 대토론’ 주제발표를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한 “2050년까지의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현재 흑자를 보이고 있는 통합재정수지가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된다”며 “이후 적자 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2035년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 수준을 넘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로 나선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 활성화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안정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지만 더불립 우려 등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을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고, 토론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광림 의원과 강기정 의원, 박태규 연세대 교수, 박정수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윤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나섰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과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 안정환 기자 anjwhan@asiatoday.co.kr

중앙뉴스

국회예산정책처, 「나라살림 대토론회」 개최

내년도 재정총량과 자원배분 방향에 관한 논의

박광원 기자 news@ejanews.co.kr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9월 5일(월)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자원배분」을 개최하여,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의 총량과 자원배분 방향 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토론회 중 재정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였다.

지난 3월의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신을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토론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광림의원과 강기정의원, 박대규 연세대 교수, 박정수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윤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유찬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나섰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과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회의 제1부 발제자로 나선 박종규 실장은, 세계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런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제 선순환구조 창출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과다한 유보자금이 투자로 이어지고, 가계저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및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2050년까지의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현재 흑자를 보이

고 있는 통합재정수지가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이후 적자 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2035년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 수준을 넘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제개편 방향에 대하여는, 정부의 2013년 균형재정달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원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종료, 저축관련 비과세·감면의 일몰 종료,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점진적 축소, 농·임·어업용 면세유 관련 비과세·감면 축소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다.

먼저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 심의는 총선·대선 등에 따른 지출소요 증가와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며, 현재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등의 감세 철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요구안에 비하여 예산안 총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요구안에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SOC 분야 등의 추가적 감액이 필요한 반면, 복지 등

서민·민생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며 예정되어 있는 법인세 감세도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 밖에 박태규 교수는 내년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재정수입 제고에 한계가 있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여력 확보를 위하여 지출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박정수 소장은 긴축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의 현실과 세계 경제의 둔화 전망,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며 페이그(Pay-go) 원칙 도입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기운 논설위원은 최근의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이며 이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고려하여 지출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찬 위원장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성화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안정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지만 더불어 우려 등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부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춘순 실장은, 전체 예산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41.7%에서 2012년에는 45%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의무지출의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내년도 예산의 각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과 관련해서는 R&D분야의 경우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R&D예산의 GDP 대비 비중과 증가율이 각각 4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에 가까운 증액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2012년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고 지원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가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세계화와 지식기반 사회의 확산, 인구 고령화 등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분야 예산요구액의 올해 대비 증가액 6.2조원의 89%가 의무지출일 정도로 의무지출에 편중된 지금의 지출구조는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국방 분야의 경우 증액규모가 큰 군사시설 건설예산과 국방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최근 10년 동안 학령인구수는 12% 감소했음에도 지방교육교부금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부문 예산의 비중을 합리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각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과 관련해서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다.

먼저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복지지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서민·육아·다문화가정 등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 유사·중복 수급 해소 등 지출 효율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수립, 중앙·지방 간 복지지출 비중 개선 및 출산을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며, R&D 등 미래대비와 ODA, 국방 및 FTA 대비 등 농업 예산 등 다른 지출수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예산은 시대의 상황을 담아내야 하며 지금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므로 SOC 예산 축소 및 R&D 중복 해소 등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에 중점적 자원배분이 필요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출규모 확대와 함께 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한 전문가 양성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 밖에 박태규 교수는 R&D 예산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기반으로 지출 효율성에 대

한 점검이 필요하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복지 예산이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복지선순환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정수 소장은 국방 분야의 경우 국방 개혁의 효율화, 투명하고 체계적인 국방 R&D 투자 등이 필요하며, SOC 분야가 가장 우선적인 축소 대상이 될 것이고,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재정구조 개편 및 교육·고용 분야 등의 인적 자원 투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온기운 논설위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지출수요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재정이 많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 사회보험과 공적연금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복지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김유찬 위원장은 복지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며, R&D의 경우 인적 하부구조가 건실하지 않으면 투입 대비 효과가 낮을 수 있어 증액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SOC 투자도 건설산업에 대한 숨겨진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 기능 충실화를 위한 개선 방향에 관하여 각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태규 교수는 예산안 심의기간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정부 예산집행에 대하여 국회의 감시·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박정수 소장은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통하여 보다 충실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김춘순 예산분석실장은 예산안의 연중 심사가 가능하도록 총량과 자원배분에 관하여 국회의 상반기 중에 이를 심의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기운 논설위원은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정치권의 논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민들에게 충실하게 알리기 위하여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광림 의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제도와 증액 심의의 투명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향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기정 의원은 예결위 상임위화와 예산안 편성 과정에의 국회 참여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예산정책처와 국회, 정부가 합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2012년도 재정총량과 자원배분방향 등에 대하여 재정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8월 9일~12일까지 4일간, 코리아리서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재정전문가 50인은 대학교 34명, 연구기관 11명, 시민단체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40대가 25명 50대 이상이 2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내년도 재정총량에 관하여 '긴축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8%로 '확장적이어야 한다'는 의견 24%보다 두 배 많았고,

정부의 2014년 관리대상수지 균형달성 목표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에 달하였다.

◦ 예산안 편성 과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지난 3월 국민여론조사(3.11~15까지 5일간, GH 코리아, 95%신뢰구간, 오차율 ±4.4%) 결과와 비교할 때 응답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 의견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재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 있어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 국민의

84.2%, 재정전문가의 68%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국회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 국민의 76.2%, 재정전문가의 60%가 '국회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예산안 편성과정의 투명성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응답 국민의 91.2%, 재정전문가의 64.0%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분야별 자원배분에 대하여 재정전문가들은, 2012년 예산요구안 보다 증액시켜야 할 분야로 전체 응답자의 34%가 '보건·복지·노동' 분야를 꼽으면서, 그 이유로는 '빈부격차 해소',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고,

반면 감액이 필요한 분야로, '일반공공행정', '외교·통일' 및 '국방'분야를 꼽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재정총량과 자원배분' 결과를 정리하여 국회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 전달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나라살림 대토론회' 개최>

국회예산정책처, '나라살림 대토론회' 개최

내년도 재정총량과 자원배분 방향 논의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9월 5일(월)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자원배분」을 개최하여,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의 총량과 자원배분 방향 등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토론회 중 재정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하였다.

지난 3월의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신을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토론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광림의원과 강기정의원, 박태규 연세대 교수, 박정수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윤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유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나섰으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김훈순 예산분석실장과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이 발제를 맡았다.

토론회의 제1부 발제자로 나선 박종규 실장은,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이런 경기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국회예산정책처의 중기 경제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경제 선순환구조 창출을 위하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과다한 유보자금이 투자로 이어지고, 가계저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세 및 재정정책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2050년까지의 국회예산정책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현재 흑자를 보이고 있는 통합재정수지가 2024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며, 이후 적자 규모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2035년 이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50% 수준을 넘어 급격히 증가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제개편 방향에 대하여는, 정부의 2013년 균형재정달성 목표 달성을 위해서 세원확대가 시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종료, 저축관련 비과세·감면의 일몰 종료,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점진적 축소, 농·임·어업용 면세유 관련 비과세·감면 축소 필요성 등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다.

먼저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내년 예산안 심의는 총선·대선 등에 따른 지출소요 증가와 재정건전성 제고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요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며, 현재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우리 기업들의 조세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세 등의 감세 철회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앞으로 국회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요구안에 비하여 예산안 총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요구안에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려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SOC 분야 등의 추가적 감액이 필요한 반면, 복지 등 서민·민생 예산은 증액이 필요하며 예정되어 있는 법인세 감세도 철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

그 밖에 박태규 교수는 내년 경제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재정수입 제고에 한계가 있고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여력 확보를 위하여 지출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박정수 소장은 긴축적 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소규모 개방경제인 우리의 현실과 세계 경제의 둔화 전망, 저출산·고령화 추세 등을 감안하면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며 페이그(Pay-go) 원칙 도입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의 세제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윤기운 논설위원은 최근의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큰 상황이며 이에 따른 세수감소 등을 고려하여 지출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재정준칙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찬 위원장은 재정건전성 확보와 경제활성화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안정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지만 더불릴 우려 등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부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김춘순 실장은, 전체 예산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41.7%에서 2012년에는 45%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며 이러한 의무지출의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내년도 예산의 각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과 관련해서는 R&D분야의 경우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R&D예산의 GDP 대비 비중과 증가율이 각각 4위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의 두 배에 가까운 증액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경우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액이 2012년 6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국고 지원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해 국회가 심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세계화와 지식기반 사회의 확산, 인구 고령화 등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사회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분야 예산요구액의 올해 대비 증가액 6.2조원의 89%가 의무지출일 정도로 의무지출에 편중된 지금의 지출구조는 새로운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국방 분야의 경우 증액규모가 큰 군사시설 건설예산과 국방연구개발 예산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마지막으로,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최근 10년 동안 학령인구수는 12% 감소했음에도 지방교육교부금은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부문 예산의 비중을 합리적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각 분야별 자원배분 방향과 관련해서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발표하였다.

먼저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은 복지지출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서민·육아·다문화가정 등 사람 중심의 복지정책, 유사·중복 수급 해소 등 지출 효율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정책 수립, 중앙·지방 간 복지지출 비중 개선 및 출산율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하며, R&D 등 미래대비와 ODA, 국방 및 FTA 대비 등 농업 예산 등 다른 지출수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강기정 민주당 의원은 예산은 시대의 상황을 담아내야 하며 지금은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 우선시되는 상황이므로 SOC 예산 축소 및 R&D 중복 해소 등을 통하여 이러한 부분에 중점적 자원배분이 필요하고 일반공공행정 분야 예산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지출규모 확대와 함께 전달체계 개선 등을 위한 전문가 양성 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을 역설하였다.

그 밖에 박태규 교수는 R&D 예산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 내용을 기반으로 지출 효율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우 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고, 복지 예산이 일자리창출 등을 통한 복지선순환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박정수 소장은 국방 분야의 경우 국방 개혁의 효율화, 투명하고 체계적인 국방 R&D 투자 등이 필요하며, SOC 분야가 가장 우선적인 축소 대상이 될 것이고, 학령인구 감소 등을 고려한 재정구조 개편

및 교육·고용 분야 등의 인적 자원 투자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온기운 논설위원은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지출수요를 감안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재정이 많이 투입 될 것으로 보이는 사회보험과 공적연금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복지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김유찬 위원장은 복지지출의 확대가 필요하며, R&D의 경우 인적 하부구조가 건설하지 않으면 투입 대비 효과가 낮을 수 있어 증액에 신중할 필요가 있고 SOC 투자도 건설산업에 대한 숨겨진 보조금이라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 기능 충실화를 위한 개선 방향에 관하여 각 토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태규 교수는 예산안 심의기간 뿐 아니라 상시적으로 정부 예산집행에 대하여 국회가 감시·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고, 박정수 소장은 예결위의 상임위화를 통하여 보다 충실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김춘순 예산분석실장은 예산안의 연중 심사가 가능하도록 총량과 자원배분에 관하여 국회가 상반기 중에 이를 심의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온기운 논설위원은 재정의 투명성 제고와 정치권의 논의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국민들에게 충실하게 알리기 위하여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광림의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국회 보고제도와 증액 심의의 투명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향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마지막으로 장기정의원은 예결위 상임위화와 예산안 편성 과정에의 국회 참여 강화 등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예산정책처와 국회, 정부가 합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번 토론회에 앞서 2012년도 재정총량과 자원배분방향 등에 대하여 재정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8월 9일~12일까지 4일간, 코리아리서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재정전문가 50인은 대학교 34명, 연구기관 11명, 시민단체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40대가 25명 50대 이상이 2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내년도 재정총량에 관하여 '긴축적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48%로 '확장적이어야 한다'는 의견 24%보다 두 배 많았고, 정부의 2014년 관리대상수지 균형달성 목표에 대해 '가능성이 낮다'는 부정적 의견이 응답자의 절반 이상(54%)에 달하였다.

예산안 편성 과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은 지난 3월 국민여론조사(3.11~15까지 5일간, GH 코리아, 95%신뢰구간, 오차율 $\pm 4.4\%$) 결과와 비교할 때 응답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 의견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재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 있어 국민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 국민의 84.2%, 재정전문가의 68%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고,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정에 국회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 국민의 76.2%, 재정전문가의 60%가 '국회 의견 반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예산안 편성과정의 투명성과 관련하여서는 전체 응답 국민의 91.2%, 재정전문가의 64.0%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그리고 분야별 자원배분에 대하여 재정전문가들은, 2012년 예산요구안 보다 증액시켜야 할 분야로 전체 응답자의 34%가 '보건·복지·노동' 분야를 꼽으면서, 그 이유로는 '빈부격차 해소',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등을 그 이유로 제시하였고, 반면 감액이 필요한 분야로, '일반공공행정', '외교·통일' 및 '국방'분야를 꼽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재정총량과 자원배분' 결과를 정리하여 국회 각 상임
위와 예결위에 전달하고,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은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 예산안 분석보고서
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끝)

출처 : 국회

본 콘텐츠는 해당기관의 보도 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출처 : 국회

[2011-09-06 09:43 00 송
고]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며 모든책임은 제공자에 있습니
다.

내년 재정총량 자원배분 방향 논의

국회 정책처 '나라살림 대토론회'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가 지난5일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자원배분을 위한 '나라살림' 대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요구안을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의 총량과 자원배분 방향 등에 대해 진행한 가운데 재정전문가 50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도 재정운용방향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정책처가 지난 3월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토론회는 신을 명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토론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광림의원과 강기정의원, 박태규 연세대 교수, 박정수 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 소장, 윤기운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김유한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 나섰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의 김춘순 예산분석실장과 박종규 경제분석실장은 발제를 맡았다.

채기성기자

birdchai@kyungdoilbo.com

2011-09-07 07:51:53

"검찰 견제 할 1/1000 가능성 있는게 예산심의"

[인터뷰] 강기정 "관행처럼 법 위반한 검찰청...예산 독립 편성 때 국회 심의 받아야"

이주연 (ld84) 기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1/1000의 가능성이라도 있는 게 예산 심의다. 국회가 3권 분립에 의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검찰 견제가) 무력화돼있다. 이것 극복하는 것이 3권 분립의 헌법 정신에도 맞고,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다."

민주당 소속 강기정 예결위 간사는 '법무부 예산에 속해 있는 검찰청 예산이 독립편성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관별로 예산이 독립 편성돼야 하지만 유독 검찰청만이 '관행처럼' 법을 어겨 독립 편성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 민주당 강기정 의원(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강기정

5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 의원은 "사실 예산으로 검찰을 견제하는 것은 코끼리 툇다리 만져보는 것밖에 안 된다"며 "그러나 검찰은 어디에서도 견제 받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검찰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다하고 싶다"며 '예산 독립 편성'을 재차 강조했다.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2010 회계연도 결산 처리하며 여야가 쉽게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도 검찰청 예산 독립 편성 문제였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독립편성이 "검찰의 정치적·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관행"이라며 반대해왔다.

강 의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이 '독립 편성' 반대의 이유"라면 인권위원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도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지 않냐"며 "정부 여당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쟁 속에 검찰청 독립 예산 편성 문제는 2013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시정조치 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강 의원은 "내년 10월까지 정부가 '경찰청 독립 예산 편성'을 방침으로 예산을 준비해야 한다"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 극심한 진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강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 전문이다.

"오래 관행처럼 법 위반한 경찰청... 예산 독립 편성 돼 국회 심의 받아야"

- 이번 예산안 처리에서 진통을 겪은 부분은 경찰청 예산 독립 편성과 특수활동비 증빙 서류 제출 문제였다. 특히 '경찰청 예산 독립 편성'은 무엇이 정점인가.

"국가재정법에 의하면 예산을 편성할 때 기관별 즉, 각 부와 청의 예산을 독립적으로 편성하게 돼있다. 그런데 유독 경찰청 예산만 예외를 두어 독립 편성하지 않고 법무부 예산 속 하나의 국 예산처럼 편성하고 있다. 경찰청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견제 받지 않은 무소불위의 힘을 갖고 있는 기관임에도 예산에서 만큼은 법무부 하나의 경찰국의 예산으로 뒤에 숨어서 편성하고 있다. 오래된 관행처럼 법 위반해왔다. 당연히 경찰청 예산도 다른 청과 부의 예산처럼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나 정부는 경찰청 예산이 독립 편성돼서 심의 받게 되면 경찰청장이 국회 예산 결산 심의 과정에 출석하게 되고, 경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정부들이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지 못한 경찰청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 또한 독립성과 중립성이 이유라면 인권위원회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도 외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하지 않나.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이번 결산 과정에서 경찰청 독립 예산 편성 문제를 2013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조속히 보고하도록 하는 시정조치를 하도록 합의 했다. 그럼 2013년부터는 독립 편성 되는 건가.

"합의사항에 따르면, 2012년 10월 2일(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 까지 정부에서 그 방향(경찰청 독립 예산 편성)으로 편성 방침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이제까지 국가재정법 무시하고 날치기 한 것을 보면, 정부가 그런 방침을 편성하지 않고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그렇게 편성해서 국회에 예산안이 넘어오면 예산안 심의 과정에 극심한 진통이 있을 것이다."

- 특수활동비의 증빙서류 제출 문제는 '가급적' 특수활동비를 업무추진비로 전환하여 편성하도록 합의했다.

"김준규 경찰청장이 지난 4월 전국경사장 워크숍에서 간부들에게 9800만 원을 나눠준 것이 바로 특수 활동비였다. 이렇게 비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야 하는 문제다. 또한 이러한 비용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돼야 할 것이다."

"박영준 관련된 C&K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 적절한 처분 나올 것"

- 예결특위에서 ▲ 정부의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 C&K 주가와 조작 의혹 사건 ▲ 저수지 독 높임 사업 ▲ 국방부 피복비 사업체계 및 구매실태 ▲ 민간 자본보조 사업에 대한 현황 및 실태 등 모두 5개의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고 본회의에서도 의결됐다.

"저수지 독 높임 사업은 당합 의혹이 있는 사업이다. 일부 사업을 일괄 터키방식으로 발주했는데 이에 대한 낙찰률이 99%에 달한다. 터키방식의 평균적 낙찰률 92%를 상회하는 것이다. 당합·불법이 있지 않고서는 이처럼 높은 낙찰률을 보일 수 없다고 생각해서 감사청구를 했다."

C&K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을 명시한 감사요구안을 제출했다(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가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외통

부의 보도 자료가 배포될 때 C&K 주가가 널 뛰었고, 여기에 박 전 차관이 해외 방문을 유도해 C&K를 간접 지원했으며 박 전 차장이 주식거래 매매차익을 거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감사 청구는 정태근·배영식 한나라당 의원이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다만 한나라당에서는 감사 청구 채택을 끝까지 안 하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사건으로 피해 입은) 개미 투자자들도 관련돼있고 권력 핵심부에 있는 사람의 비리 의혹인 만큼 감사하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 박 전 차장은 이명박 정권의 핵심부로 민간인 사찰을 비롯한 여러 사건의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 중 하나가 주가 조작 사건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적절한 처분이 나올 것이다."

-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주최한 '나라살림 대토론회'에서 예산의 총량과 자원배분 문제에 대해 민주당 측 의견을 개진했다고. 내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 민주당의 입장은 뭔가. "8.15 경축사 때 이명박 대통령은 균형 재정을 이루겠다고 한다. 그러려면 세입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가 예상하는 내년 예상 성장률(4.5%)에 크게 못 미칠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아니면 법인세·소득세 추가 감세를 철회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것도 안 하겠다고 한다.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도 특별히 하지 않고 있다. 정부 부처들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 작년 대비 7.6%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균형 재정을 이루겠다는 뜻이 보이지 않는다."

- 한나라당에서도 복지예산에 대한 요구가 있고, 또 선거 직전 예산안이니 현실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는 것 아닌가. "아직은 예산의 구체적인 내역이 나와 있지 않아서 꼭 집어 얘기하긴 힘들다. 다만, 일반 공공 행정 분야에서 요구한 예산이 58조 원이고, 전년 대비 증가분이 11%p에 달한다. 부처 요구안 중 제일 많이 증가했다. 엄밀한 심의가 이뤄지면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 이번 예산안 처리는 조용히 넘어갈 거라는 예측이 많더라. 4대강 예산도 없고. 쟁점이 뭐가 될까. "이제까지는 4대강 예산과 부자감세 때문에 합의처리가 안 되고 한나라당의 일방처리로 진행됐는데, 이번만큼은 예산안을 국민의 입장에서 합의처리하자고 여야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그럼에도 쟁점은 있을 것이다. 세수 확대를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의 추가 감세 철회 부분이다."

이를 통해 4조 원 내지 5조 원의 추가세원을 늘릴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요구할 것이다. 두 번째로 큰 문제는 복지 예산 확충 문제다.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도 복지 예산 증액에 대해 동의하는 걸로 보인다. 세 번째는 지방재정을 안정화 시켜주는 문제다. 이런 지점을 쟁점으로 가지고 갈 것 같다."

예산처, 국민이 직접 나라살림 감독해야

정기국회에 맞춰 나라살림 대토론회 개최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 재정민주주의 확립 위해 기여



국회예산정책처가 주관하는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2012년 재원배분 방향에 관한 재정전문가 50인의 자체설문조사 결과도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지난 5일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재원배분에 관한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는 3월에 4월 동안 걸쳐 열렸던 '국민과 함께하는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토론회'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국민참여 토론회이다.

이번 대토론회는 나라살림이 지속적인 성장과 민생안정을 반영하면서 재정건전성 회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전문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제안을 수립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이며, 내년도 예산안 편성단계에서 '국회의 재정외지'를 전달하기 위해 9월 정기국회 입정에 맞춰 개최한다고 예산처는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명지대 신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대토론회는 예산처 브레인군단을 이끄는 쌍두마차인 박종규 경제분석실장과 김춘수 예산분석실장의 발표로 진행되었다.

박 실장은 '2012년 경제전망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김 실장은 '2012년 예산의 효율적인 재원배분 방향'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토론회에는 한나라당의 김광림 의원, 민주당의 강기정 의원, 연세대 박태규 교수, 한국조세연구원 공공기관정책연구센터의 박정수 소장, 매일경제신문의 윤기은 논설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김유한 재정세제위원장 등이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였다.

예산처는 토론회에서 '2012년 재원배분 방향'에 관한 재정전문가 50인의 자체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주영진 국회예산정책처장은 예

산안이 제출된 후인 10월 말에는 세 번째 토론회인 '2012년도 예산안 대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히 '나라살림 대토론회'를 정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시사했다.

예산처는 자체적으로 실시한 국회 예산심의에 대한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주된 불만사항으로 국민의견의 예산 반영 미흡, 국회 재정수준에 대한 불신 등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토론회 개최에 이르게 되었다고 밝혔다.

주 처장은 "예산처의 이러한 선제적 노력이 국회가 연중 상시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일조를 하였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국회의 재정권한을 실질화하고 재정민주주의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생각"이라고 토론회의 의의를 전했다.

국회 D. H. Kim
심학섭 기자

「나라살림 대토론회」 2012년 예산의 총량과 자원배분 결과보고서

발 간 일 2011년 9월 21일
편 집 경제분석실 재정정책분석팀
발 행 인 주 영 진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Tel 02·2070·3114
인 쇄 처 인맥 (Tel 02·2269·0932)

1. 이 보고서의 무단 복제 및 전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서의 내용에 관한 문의는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팀
(Tel 02·788·3777)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